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실행계획

2026. 4.

강원특별자치도

목 차

Ⅰ. 총괄표 ····· 1

Ⅱ. 추진과제 ····· 3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 5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 12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 22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33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 62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 109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 125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 146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 160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72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 187

Ⅲ. 소확신 과제 ····· 195

Ⅳ. 정부혁신 확산 방안 ····· 200

Ⅰ. 총괄표

주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세부추진과제명	소관부서	추진일정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 홍보	대변인	2026년 1월~
2.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 제안제도·공모전 운영	정책기획관	2026년 6월~
3.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비상기획과	2026년 6월~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토지인허가 원스톱 매뉴얼 제작	지역도시과	2026년 1월~
2.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감사위원회	2026년 1월~
3.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구축	총무과	2026년 5월~
4. 공사 계약 제도 운영	회계과	2026년 1월~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1. 기업애로 해결 통합 플랫폼 운영	기업지원과	2026년 3월~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예산과	2026년 2월~
3. '우리동네 재난 전문가'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난과	2026년 5월~
4.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자연재난과	2026년 1월~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1. 응급의료 대응 강화 및 공급 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과	2026년 1월~
2. 예방접종 관리 대응역량 제고	동물방역과	2026년 1월~
3.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건축과	2026년 1월~
4.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	교통과	2026년 1월~

5.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 운영	교통과	2026년 1월~
6.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2월~
7. 재난취약지역 CCTV 확대	안전정책과	2026년 1월~
8.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소상공인과	2026년 1월~
9.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관계기관 협력	지역소멸대응정책관	2026년 2월~
10. 고령화 사회 대응 농촌지역 폐가전 수거	환경정책과	2026년 4월~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1.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결핵관리	감염병관리과	2026년 1월~
2. 강원·충북 연대로 만든 소아 응급 생명라인	공공의료과	2026년 7월~
3. 베테랑 시니어 전문의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공공의료과	2026년 1월~
4.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건축과	2026년 1월~
5.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공공의료과	2026년 1월~
6. 농촌 왕진버스 운영	농정과	2026년 4월~
7.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운영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2월~
8.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일자리청년과	2026년 2월~
9.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1월~
10. 건강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 및 환경관리	환경정책과	2026년 1월~
1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과	2026년 1월~
12. 하천과 계곡, 공공의 가치를 세우다!	하천과	2026년 3월~
13. 정전 알림 서비스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사회재난과	2026년 1월~
14. 일상돌봄으로 생활복지 안전망 강화	복지정책과	2026년 2월~
15. 사회적 고립 해소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복지정책과	2026년 2월~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1.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2026년 3월~
2.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추진	접경지역과	2026년 4월~

3. 응급의료 대응 강화 및 공급 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과	2026년 7월~
4.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추진	농정과	2026년 1월~
5. 폐광지역개발기금 활용 지역 균형발전 추진	폐광지역지원과	2026년 1월~
6. 강원연고산업 육성 프로젝트	전략산업과	2026년 1월~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1.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세정과	2026년 1월~
2. 강원 디지털 행정 서비스 「강원혜택이지」 운영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1월~
3.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3월~
4. 공공 와이파이 운영을 통한 도민 편익 도모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4월~
5.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경제정책과	2026년 2월~
6.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	일자리청년과	2026년 4월~
7. 강원 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 개선	투자유치과	2026년 2월~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1. 성과와 보상이 선순환되는 평가체계 확립	정책기획관	2026년 1월~
2.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총무과	2026년 5월~
3.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	감사위원회	2026년 1월~
4. 강원 산불방지 통합 대응체계 구축 협업	산불방지센터	2026년 1월~
5. 「맞손잡기」 협업 내실화	자치행정과	2026년 3월~
6. '강원형 워케이션' 추진	자치행정과	2026년 3월~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1. 청렴·반부패 대책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조성	감사위원회	2026년 3월~
2.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 운영	총무과	2026년 3월~
3.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자치행정과	2026년 3월~
4. 시설물안전법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사회재난과	2026년 4월~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대표과제]**블랙아이스 AI감지시스템 구축	디지털산업과	2026년 1월~
2. 전국최초「AI 당직원」구축 운영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1월~
3. 민간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2월~
4.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4월~
5.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디지털산업과	2026년 4월~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 직원 AI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3월~
2. 도민 AI 역량 강화	디지털산업과	2026년 3월~
3. 엔비디아(NIDIA) 교육센터 연계 의료 AI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산업과	2026년 4월~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방정부혁신) 과제

1. 알아서 척척 작성해주는 AI 근로계약서	지능정보정책과	2026년 5월~
2. 순살 NO! 튼튼 안심 아파트 OK! 골조단계 품질점검 도입	건축과	2026년 1월~

Ⅱ. 추진과제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1 도민 정책 공감 전략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주관부서	대변인실	협조기관/부서	
담당자	홍준오 주무관	연락처	033-249-2134

□ 추진배경

○ 도민의 미디어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정책 홍보 수요 증가

○ 일방적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양방향 소통 창구 마련

○ 수혜자 특성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데이터 기반의 소통 결과를 활용한 객관적 정책 효과 분석 및 환류(Feedback) 체계 구축

□ 세부 추진사항

○ 도민 소통·공감 확대를 위한 '전략 SNS 채널' 운영

- 분기별 핵심 현안·정책을 선정하여 집중 기획 콘텐츠 제작 및 발행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숏폼(Shorts)' 영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핵심 혜택을 직관적으로 요약·제공

○ 이벤트 및 타깃 마케팅을 통한 관심 유도와 참여 확대

- 운영 기간 내 질문, 댓글 등 도민 참여형 게시물 중심의 집중 소통 전개
- 정책별 맞춤형 이벤트 개최로 홍보 시너지 창출 및 소통 활성화 도모

○ 도민 소통 데이터 축적 및 유관 부서 정책 환류

- 댓글, 문의 사항 등을 데이터화 및 정책 실제 수혜 후기 수집
- 운영 결과(주요 여론, 공감 사례, 개선 의견 등)를 협업 부서에 정기 공유하여 실질적 정책 개선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홍보 매체 다각화를 통한 정책 수혜 대상자 확대 및 도민 체감도 향상
-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
- 양방향 소통 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 및 개선 노력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홍보방식) 오프라인 매체 중심의 단방향 정책 홍보	• (홍보방식)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로 홍보 매체 다양화 및 홍보 시너지 창출
• (소통체계) 정책을 알리기 위한 일방적 소통 및 홍보	• (소통체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양방향 도민 의견 청취
• (효과분석) 정책 시행 후 별도의 의견 수집 절차(조사 등) 필요	• (효과분석) 소통을 통해 수집된 정책 후기 및 의견 등을 데이터화하여 정책 개선 및 향후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

□ '26년 소요예산

○ 전략 채널 홍보 콘텐츠(디자인, 숏폼 등) 제작 및 구입 : 19,200천원

○ 전략 채널 콘텐츠 확산을 위한 온라인 매체 타깃 광고 : 12,000천원

○ 전략 채널 참여형 이벤트 경품 구입 : 4,000천원

□ 추진일정

○ 핵심 정책 선정 및 전략 채널 운영(분기별)

기간	정책	콘텐츠	협업부서
1분기	강원육아수당	제도 핵심 요약, 실제 수혜 사례, 신청 절차 안내	복지보건국
2분기	강원생활도민	제도 취지, 발급 방법, 온오프라인 발급 이벤트	지역소멸대응정책관
3분기	가까운 강원	SOC 비교, 생활 인프라 변화 사례 및 인식 개선	건설교통국
4분기	고향사랑기부	기부 절차, 특산품 소개, 활용 사례 중심	지역소멸대응정책관

1-2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 제안제도·공모전 운영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협조기관/부서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담당자	김예진 주무관	연락처	033-249-2934

□ 추진배경

○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해 강원자치도 정책이나 행정제도에 우수제안을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 혁신을 촉진

○ 정책수립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 운영” 구현

□ 세부 추진사항

○ 도 제안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 접수 및 관련부서 심의 : 수시
- 도 우수제안 채택심사·포상 : 연 1회
- 제안 마일리지 점수 우수공무원 선정 : 상장 및 강원상품권 지급(연 1회)
- 제안 실행 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최대 0.3점

○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운영

- 톡톡 Idea 공모전 : 필요시 추진, 주제 제시를 통한 국민 공모제안

○ 채택제안 관리 주기적 실시

-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의 관리를 위하여 채택제안 관리카드 작성 및 현행화 실시(반기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국민신문고 우수제안 채택심사·포상 : 연 1회(하반기)
- 제안 마일리지 점수 우수공무원 선정 : 연 1회

- 제안 실행 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최대 0.3점
- 톡톡 Idea 공모전 : 필요시 추진, 주제 제시를 통한 국민 공모제안
- 채택제안 관리 실시 및 점검 : 반기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수시제안 접수 등 미실시 시, 주민들의 다양하고 우수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기회가 적음 ○ 제안(접수제안,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 미실시 시, 접수된 제안이 미답변 되거나 채택제안이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음	○ 수시제안 접수 및 우수제안 선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화 및 업무혁신 도모 ○ 제안(접수제안,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강화 마련으로 주민들이 신청한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수한 제안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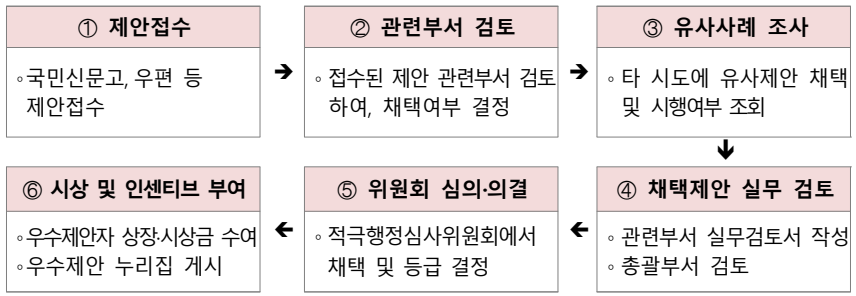
□ ’26년 소요예산

○ 도민제안 시상금 : 3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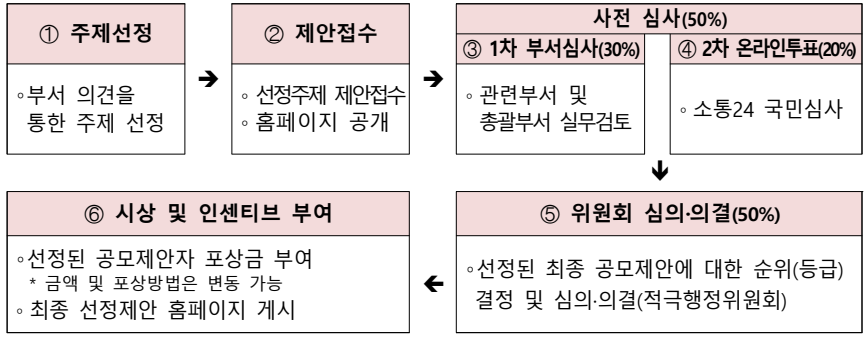
○ 공무원제안 시상금 : 1.3백만 원

□ 추진체계

○ 도 우수제안 선정 절차



○ 톡톡 Idea 공모전 절차(필요시)



□ 추진일정

○ '26년 강원자치도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 '26. 3.

○ '25년 제안실행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26. 4.

○ '26년 우수제안 및 마일리지 적립 우수 공무원 선정 : '26. 12.

○ '26년 톡톡 Idea 공모전 개최 : 정책수요 발생 시

○ 채택제안 실행여부 점검 : 반기별

□ 홍보계획

○ 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우수제안 사례 홍보

○ 도청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제안 관련 공모전 홍보

1-3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비상기획과	협조기관/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이은례 주무관	연락처	033-249-3022

□ 추진배경

○ 단발성 행사로 인한 지속성 부족 및 실질적 소통 한계

- 1박 2일 연찬회 형태로 특정 지역 관광 및 체험 중심 일정

- 관광 및 외부 활동 중심 일정으로 실제 군장병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시간 부족

○ 사후 관리 및 피드백 체계 부족

- 체계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미흡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축적이 어려움

□ 세부 추진사항

○ 구조화된 소통 설계

- 사전 질문지 등 활용하여 주제별 소통 및 의견 수렴 확대

○ AI 기반 의견 수집 및 패턴 분석

- 반복되는 불만 내지 요구사항을 AI를 통해 패턴화

○ 정책 반영 및 피드백

- 도출된 의견 중 예산 부담이 적고 즉시 실행 가능한 민군관 협력 과제를 정책으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참여자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

○ 상시 소통 창구 운영

- 담당자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군장병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을 위한 민원 접수 상시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연 2회 연찬회 시 개선 과제 도출(10건~15건)
- 개선과제 선정(3건~5건)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1박 2일 단발성 연찬회 중심 운영 • 관광·체험 위주 실질적 소통 부족 • 형식적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미흡 • 프로그램 이후 지속 관리 및 피드백 부재	• 상시 소통 체계 구축 • 구조화된 의견 수렴 • 정책 후보 10건 내외 발굴, 이 중 30% 정책 반영 • 비예산 생활밀착형 개선 사항은 즉시 반영 • 소통-정책화-피드백의 선순환 구조 정착

□ '26년 소요예산

○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예산 14,600천 원

□ 추진일정

○ 단기 간부(5년 미만) 대상 연찬회 개최('26. 6.)

○ 모범 중·장기 간부(5년 이상) 부부 대상 연찬회 개최('26. 10.)

□ 홍보계획

○ 도내 콘텐츠 채널 활용하여 부대 소개 및 소통 창구 홍보 등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2-1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토지인허가 원스톱 매뉴얼 제작

주관부서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이수빈 주무관	연락처	033-249-3645

□ 추진배경

○ **사업자/민원인 고충, 고질적인 인허가지연 및 행정 불확실성의 문제**

- **(설문조사[1] 결과)** 부동산 개발업 종사자의 66%가 '인허가 처리 지연'을 사업의 최대 장애물로 응답
- **(지연사유)** 관계부서 간 소통부재(칸막이 행정) 및 법령 중첩에 따른 인허가 협의 장기화(핑퐁민원 등)가 주요 지연사유로 분석됨

○ **실무자 고충, 개별부서 중심의 경직된 검토관행 및 전문성 축적의 한계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 **(도 간담회 결과)** 道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담당공무원 간담회 결과,
  * 지역도시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관광개발과, 투자유치과 등 6개 실·국 15개팀 참석

  ①부서 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인해 개별부서의 입장 고수가 우선시되는 경향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②참석범위 확대(농정국, 해양항만과, 산림환경국 등)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 **(시군 간담회 결과)** 18개 시·군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간담회 결과, 신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의논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 제기

강원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 간담회 (2024. 5. 21.)



18개 시·군 담당공무원 간담회 (2025. 12. 12.)



1) 부동산 개발 인허가 지연에 디벨로퍼 66% "큰 어려움", 매일신문(2025.06.17.)
해당 설문은 건축공간연구원(auri) 실시(2025.06.15.)

○ **강원특별법과 개별법 사이 인허가절차 공백, 특별법 활용의 어려움**

- 강원특별법 특례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운영실태)** 4대 완화규정 중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절대농지 해제)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만으로 사업이 완결될 수 없으며 별도로 후속 인허가절차**(도시계획시설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등) **이행이 필수적임**

문 제 점

▸ 강원특별법 상 지구지정 이후에도 사업완결을 위해 **평균15개의 부서협의가 재차 수반됨**
(사례)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일원의 토속어종산업화센터(연구시설) 건립사업

「강원특별법」 절차
24. 6.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안) 신청
24. 8.~ 관련부서 협의
24. 11.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
25. 10.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고시
26. 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고시

「국토계획법」 절차
24.10. 인제군 관리계획(안) 작성 / 주민공람
25. 7.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입안 신청
25. 7. 관련부서 협의 (약 6개월 소요)
26.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6. 2.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 고시



- **(현황 검토결과)** 최근 지정된 2차 농촌활력촉진지구[2](6개소)는 6개소 모두 절대농지 해제 이후 개별법으로 사업추진 예정이며, 4개소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2개소는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으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 이행예정

(1) 강원특별법 특례로 규제완화



(2)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인허가 절차 필요**



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505호(2025. 12. 5.)

□ **세부 추진사항**

○ **강원특별법 특례 200% 활용을 위한 '강원자치도형 매뉴얼' 마련**

- 현행 법령 체계에서 실무자의 업무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강원특별법의 효율적인 적용 지원
- (협업체계) 부서 간 협력을 위해 워크샵·간담회 등 업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애로사항 등 공유 ⇨ 디지털 콘텐츠 병행, 교육용 PPT 함께 제작하여 시군 공무원 및 사업부서 교육에 즉시 활용
- (인허가 로드맵) 도 유관부서 간, 광역-기초 지자체 간 실질적인 인허가 소요기간 등 인허가 프로세스를 수록하여 행정의 불확실성 해소

○ **오픈행정 구현을 위한 '인허가 심의 노하우' 자체 제작**

- 과거 5년간 축적된 단골 지적사항과 재심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유형화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공개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매몰비용 낭비 방지
  * (예시) 도시계획 유형별 심의사례, 항목별 심의내용 등 수록

○ **도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컨설팅' 활성화**

- 입지, 법적기준,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은 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계획변경, 관계부서 재협의 등으로 인해 수개월의 시간과 과도한 설계 비용이 소모됨
- 사업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컨설팅(부서합동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필수사항 검토 등 정식 신청 전 선제적으로 안내
  * (예시) 도시계획-농정-관광 3자 합동 컨설팅
- (체크리스트) 법적 검토기준, 필수서류 등을 통합제작 및 공유하여 참고자료로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인허가 신속추진의 동력 마련**

- 강원특별법 활용을 지원하여 사업의 완결성 확보
- 인허가 가이드라인 제시로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도내 투자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 **예산절감 효과, 행정 투명성 UP**

- 국토교통부 조사(2024)에 따르면, 인허가 기간이 단 1개월만 단축되어도 약 3,0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됨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직접 제작을 통해 일반운영비(10,000천원) 수준의 저비용으로 고품질 실무 지침서 확보

○ **원팀(One-Team) 강원행정 실현**

- 도와 시·군 간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공통의 매뉴얼을 통해 도민중심의 통합된 행정서비스 구현

□ 추진일정

분기	추진계획	비고
1분기	○ 기획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작 기반마련 - 강원특별법 특례 적용 사례 검토 - 간담회에서 도출된 인허가 지연요인 및 실무 고충 사항 기반으로 강원형 매뉴얼 목업구성	
2분기	○ '인허가 심의 노하우' 제작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 과거 5개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회의록, 결과 분석 ○ 강원연구원-도시계획 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	
3분기	○ 사전컨설팅을 위한 실무협의체 간담회 ○ 시군 간담회, 워크샵(9~10월中)을 통한 사전자료 수집 - 시군 인허가 관련 민원 및 실무진 애로사항 파악	
4분기	○ 강원형 통합 인허가 매뉴얼 최종 발간(온-오프라인 공식 배포) ○ 도민홍보 및 시군 설명회 개최 - 매뉴얼 기반 '도시계획 사전컨설팅' 집중 홍보 ○ 사용자 피드백 수렴 및 모니터링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및 사업 홍보자료 지속 배포

2-2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이경택 주무관	연락처	033-249-3587

□ 추진배경

○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운영 도모

□ 세부 추진사항

○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 조례 개정 및 제도 재정비를 바탕으로 도민감사관 활동 실효성 제고
- 종합감사 현장제보 등 도민감사관의 조사·감사 참여 강화
- 공익제보(법령 위반사항, 주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 직무교육·워크숍 개최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연간 활동실적 평가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열린 감사 운영**

- 감사 비공개 사안(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감사 결과 전문 공개
- 연간 감사 주요시책 및 감사계획 등 주요 정보 및 제도 안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026년 도민감사관 5개 시군 정기 종합감사 참여(회당 2~5명)
- 2026년 도민감사관 직무교육(2회) 및 연찬회(1회) 개최
- 2026년 감사 결과 전문 공개(비공개 사안 외 감사위원회 회기 후 1개월 이후)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제5기 도민감사관제 운영	• 제6기 도민감사관제 운영 - 자격요건 강화, 인원 정예화 제도 정비로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 '26년 소요예산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19,100천 원

□ 추진일정

○ 2026년 4개 시군 정기 종합감사 도민감사관 참여: 2026. 상반기

○ 2026년 1개 시군 정기 종합감사 도민감사관 참여: 2026. 하반기

○ 2026년 도민감사관 직무교육(2회) 및 연찬회(1회) 개최: 2026. 하반기

○ 2026년 감사 결과 전문 공개: 연중 수시

□ 홍보계획

○ 2026년 도민감사관 직무교육(2회) 및 연찬회(1회) 개최 보도자료 제공

○ 연간 감사 주요시책 및 감사계획 등 주요 정보 및 제도 안내

2-3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구축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이금순 / 이소연 주무관	연락처	033-249-2255/5884

□ 추진배경

○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정보공개 사전정보 목록을 확대하고, 국민이 활용하기 쉽게 시기·주기에 맞는 정보 제공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 목록 강화

- 국민 관심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사전에 등록하여 정보공개 청구 전 사전창구로 활용토록 제공 * 행안부 표준모델 등 참고
-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전정보 및 국별·과별 신규 목록 추가 발굴하여 정보 게재의 주기, 시기에 맞춰 신속 정확하게 정보 제공
  * 현재 628개 → 641개 목표(행안부 평가항목 만점 610개)
- 등록된 정보가 국민이 접근·이용하기 쉽도록 작성토록 홍보

○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

- 매년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
- 종이기록물 외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추진을 통해 역대 도지사 도정활동 기록물 활용성 증대

□ 성과목표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25년 사전정보 목록 : 628개	• '26년 사전정보 목록 : 641개 (2% 이상 상향)
• 민원·정보공개청구 대응 시 신속한 검색이 불가하여 행정능률 저해	• 온라인을 통한 검색·열람이 가능하여 민원·정보공개청구 처리시간 단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25년도 정보공개 청구 : 4,978건	• '26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 최소화 (사전정보 공표 이용 홍보 등)
• 비전자기록물 검색·활용 시 어려움 발생	•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 '26년 소요예산

○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예산: 1억 원

□ 추진체계

○ 사전정보 목록 발굴

• 행정안전부	▸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배포
• 지자체(도)	▸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 전파하여 신규 목록 발굴 운영·관리
• 본청 및 직속기관 등	▸ 각 부서에서는 신규 목록 발굴 제공

□ 추진일정

○ '26년도 정보공개 사전정보 목록 발굴 및 현행화 계획 수립 : '26. 5월

- 부서별 목록 발굴 및 현행화 : '26. 5. ~ 12월

○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 : '26. 5월~

- 계약의뢰 및 업체선정 등

2-4 공사 계약 제도 운영

주관부서	회계과	협조기관/부서	전 부서
담당자	김소망 주무관	연락처	033-249-2891

□ 추진배경

○ 계약체결 전 과정의 관리를 통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도 발주공사 시 지역제한 입찰 적극 활용, 전국 입찰 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활용 등 도내업체 수주 기회 확대

□ 세부 추진사항

○ 계약이행 관리강화 및 계약행정 운영 개선

- 계약정보(공고, 개찰, 계약 등) 및 하도급 계약 현황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계약 제출 서류 간소화 및 계약 매뉴얼 정비(수시)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 지급제도 추진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하도급 직불합의제 실시
-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30일 이상, 3천만 원 초과)

○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 등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특정업체 반복 수주 자제 등 공정성 강화

- 동일업체 1인견적 수의계약 횟수 제한(연3회)

○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한 시군 대상 계약실적 평가 추진

- 시군 발주실적 대비 도내업체 계약실적 평가 우수시군 표창 수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의무화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등록

○ 공사계약 정보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계약 전 과정을 주민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시스템 활용

○ 도내업체 공사계약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계약관련 정보 주민 접근성 저하 • 특정업체 편중 및 절차 불투명	• 주민알권리 보장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3-1 기업애로 해결 통합 플랫폼 운영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기관/부서	시군 기업지원부서
담당자	김윤정 주무관	연락처	033-249-2753

□ 추진배경

○ **(현장 중심 소통 강화)**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주기적 현장 방문을 통한 현지 동향 파악 및 기업과의 직접 소통 필요

○ **(간담회 운영방식 개선)** 기존 연 4회 순회 방식으로는 18개 시·군 방문에 4.5년이 소요되어 현장의견을 적기에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 **권역별 통합 운영 및 개최 횟수 확대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 기능 대폭 강화**

○ **(경영환경 다변화 대응)**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기업 유형별 지원 수요 증가 등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신속 파악 및 적기 해결을 위한 대응 필요

○ **(수요 맞춤형 애로 해소)** 수출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 유형별로 경영 애로와 정책 수요가 상이함에 따라, 테마별 간담회를 확대 운영하여 기업 맞춤형 소통 및 지원체계 강화 필요

○ **('원팀(One-Team)' 협업 체계 가동)** 강원지방중기청, 무역협회, KOTRA, 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애로 해결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강원도 맞춤형 기업지원 간담회 확대 운영(연 4회 → 6회)

- 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기존 시·군 단위 간담회를 권역 및 테마별 간담회 확대 추진

구분	기존 운영	개선 운영
개최횟수	기업지원 간담회 4회	기업지원 간담회 총 **6회**
운영내용	시·군 단위 순회 간담회 중심	① **권역별** 통합 기업간담회(4회) ② **테마별 기업간담회(2회)**

【기존 운영】

- 운영시기: 연 4회(3·6·9·12월 셋째 주 목요일, 14시)
- 운영방식: 시·군별 기업지원 간담회
- 참석대상: 도내 중소기업, 도 및 시·군 기업지원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기업 애로사항 청취, 관련 부서·기관 답변, 향후 조치 계획 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 등

【개선 운영】

- 운영횟수 확대: 권역별 간담회 4회 + 분야별 간담회 2회 ⇨ 연 6회 운영
- 운영방식 다변화

① **권역별 통합 기업간담회(4회)**: 춘천권·원주권·강릉권·태백권(폐광지역) 등 4개 권역 순회

· 지역별 공통 애로(인력·자금·규제 등) 수렴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② **테마별 기업간담회(2회)**: 산업분야 또는 기업 유형별 간담회 운영

· **(수출기업)** 통상·관세·물류·인증 등 수출 애로 청취, 무역협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방안 논의, 수출지원사업 연계

· **(여성기업)** 여성기업 경영 애로 및 정책 수요 청취, 여성기업 제품 판로 확대, 공공구매 연계,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 논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맞춤형 기업지원 간담회 연 6회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군 순회 방식으로 간담회 개최 주기가 길어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대응 한계 ※ 연 4회 단순 순회 방식으로, 18개 시·군 방문에 4.5년 소요	• 권역별·테마별 간담회 확대(연 6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상시 발굴 및 현장 소통 주기 대폭 단축
• 기관별 개별 대응으로 애로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 및 체감도 저조	• 유관기관 '원팀(One-Team)' 협업을 통한 현장 즉시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
• 지역 위주의 일반적 상담 방식으로 산업별·기업 유형별 특성 반영 한계	• 수출·여성기업 등 테마별 특화 간담회를 통한 맞춤형 해결책 제시
• 현장 의견 반영 지연으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 경향	• 적시 애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체감형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
• 도-시·군 간의 분절적 기업 지원으로 협업 및 사후관리 미흡	• 도-시군-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기관	역할 및 임무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 간담회 홍보(언론 보도) ○ 간담회 참석 기업 및 기관 확정 ○ 기업 건의사항 기관·부서 배부 및 답변서 취합 ○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시·군	○ 간담회 홍보 및 참석기업 모집·통보 ○ 기업 건의사항 접수 및 제출(→도 기업지원과) ○ 간담회장 준비	
도(건의사항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 기업 건의사항 검토 및 답변 작성 ○ 안건별 관리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 협조	

□ 추진일정

분기	추진계획	비고
1분기	○ 2026년 운영계획 수립 및 시·군·유관기관 송부 ○ (1차) 춘천권역(바이오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간담회 개최(2.24.) ○ (2차) 여성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간담회 개최(3.18.) ○ (3차) 수출분야 기업지원 간담회(원주권) 개최(3.31.)	
2분기	○ (4차) 권역별 기업지원 간담회(원주권) 개최(6월중)	
3분기	○ (5차) 권역별 기업지원 간담회(강릉권) 개최(8월중)	
4분기	○ (6차) 권역별 기업지원 간담회(태백권·폐광지역) 개최(12월중)	

□ 홍보계획

○ **(사전 홍보 강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참여기업 안내 강화

○ **(기관 협업홍보)** 강원지방중기청,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공동 홍보 추진(기관별 홈페이지, 뉴스레터, 배너 등 활용)

○ **(사후 홍보 및 확산)** 간담회 결과 및 주요 성과 공유로 정책 신뢰도 제고 및 참여 유도

3-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주관부서	예산과	협조기관/부서	행정안전부
담당자	남현지 주무관	연락처	033-249-4159

□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하기 위한 제도임

○ 이에 따라, 도민과 사업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현재 도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저조하며 사업담당자의 관심도가 낮아 홍보·교육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함

□ 세부 추진사항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채널 다양화 및 수준별 예산교육 등 추진

- **(홍보)** 도 공식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활용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을 통한 마케팅, 라디오 광고, 홍보물 제작·배포 등
- **(교육)** 수준별(기본/심화)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강화 및 사업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 **(주민토론형 사업제안)** 각 분과별로 사업부서와 주민참여위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안사업 발굴 논의
- **(컨설팅)** 사업부서와 분과위원회 의견이 다른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제안서 수정·보완
- **(인센티브)**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우수공무원 대상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주민참여예산 편성 예산액 26억 원 이상
-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19건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부족 및 제안사업의 낮은 채택률	• 도민 제안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편성 규모 증가로 예산의 민주성 증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분과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따라 재구성하여, 분과위원회 사업 검토의 전문성 제고

* (현행)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 (개정)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산업, 안전건설

□ '26년 소요예산

○ 위원회 운영 등(위원수당, 홍보비, 교육 추진) : 29,120천 원

○ 이벤트 당첨자 및 공모사업 채택자 인센티브 제공 : 1,000천 원

□ 추진체계

주민제안공모 (2월~6월)	제안사업 및 일반참여사업 숙의 채택 (7월~10월)	예산요구 (10월~)
■ 공모사업 접수 ■ 접수 된 제안사업 검토부서 지정 및 부서 검토 ■ 불채택 사업에 한하여 예산과 숙의 과정	■ 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1차 분과위원회) - 컨설팅 사업 선정 및 현장점검 * 사업부서와 위원의 의견 불일치 시 ■ 주민의견서 작성(2차 분과위원회) ■ 온라인투표 실시 ■ 제안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운영위원회) * 온라인투표 결과 안건 산정 시 우선 고려 ■ 제안사업 최종 채택(총회)	■ 예산(안) 제출
예산과+사업부서	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부서

□ 추진일정

○ 도민 제안사업 정기공모(2~5월)

○ 도민제안사업 사업부서 및 분과위원회 검토(6~8월)

○ 분과위원회 채택사업의 도민 대상 온라인투표 실시(9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사업 채택 및 예산편성 요구(9~10월)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연중

- 교육 : 위원회 대상(4~5월 집중), 일반도민 대상(도민사이버배움터, 수시)
- 홍보 : 도 SNS, 블로그,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 적극 활용

□ 홍보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도 홈페이지, SNS, 라디오, 리플릿, 홍보물품 등)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활용한 공유·전파

3-3 '우리동네 재난 전문가' 재난현장 민간지원을 이끄는「지역 자율방재단」

주관부서	자연재난과	협조기관/부서	강원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담당자	김진호 주무관	연락처	033-249-3653

□ 추진배경

○ 지역 밀착형 재난 대응 필요성 증대

- 재난의 대형화·다양화에 따라 재난관련 행정력 사각지대 발생
-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구성된 방재 인력을 통한 행정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민간 주도의 선도적인 재난대응 역할 수행

□ 세부 추진사항

○ 재난 대비 상시 예찰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재난 대비 예찰 활동 시 지역자율방재단 적극 활용, 해당지역별 재난취약시설(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자체 점검 실시
- 기상 특보 시 취약지역 순찰 및 무더위·한파 쉼터 1:1 매칭 점검

○ 민간 재난대응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마련

- 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방재기술 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전문 지식 습득·공유
- 우수 활동 시군 선정 및 민·관 협력 교류 활동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 활동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관 주도적 재난 대응 및 복구 한계	• 민간 주도의 선도적 재난 대응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총 133.6백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 지원 : 5백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비 등 : 26.6백만 원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참석비 지원 : 2백만 원
- 2026년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지원 : 40백만 원
- 제9회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 지원 : 32백만 원
- 2026년('25년도)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 : 28백만 원
- 시군 청년자율방재단 지원 : 28백만 원

□ 추진체계

○ 자연재난과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총괄

○ 시군 방재부서 :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동 총괄 및 협업

□ 추진일정

○ 2026년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 5월 중

○ 제9회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 : 하반기

○ 2027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계획 수립 : 9월 중

○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자율방재단 평가 : 9월 중

○ 타 지역 재해복구 지원 : 수시

□ 홍보계획

○ 연합회 규모 활동 시 보도 게재

3-4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주관부서	자연재난과	협조기관/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승교 주무관	연락처	033-249-2916

□ 추진배경

○ 재해예방 사각지대 즉, 재해취약지의 관리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취약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가 절실함

○ 주민 체감형 행정 요구 반영 및 홍보 효과 기대

- 관공서의 사업 발굴보다 실제 거주하는 도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재해 위험요소(사면, 노후 소교량 등)들을 직접 발굴하고 신청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홍보의 효과 제고 기대

○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 일반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비 보조 재해예방사업 대비 총사업비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재해예방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않아 추진이 어려움

- 이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보조)하여 소규모 재해취약지에 대한 보수·보강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안전정책과 관리 예산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규모 : 16개 시·군 17개지구(사면6, 하천3, 소교량7, 기타1)

○ 도민 참여형 추진 절차

- 제안 : 도민이 직접 재해취약지 개선 대상지를 제안
- 검토 및 선정 : 시·군에서 사전 검토 후 도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사업 추진 관리 : 서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 관리

※ 현장 방문 시 주민과의 소통(안전조치 체감 여부 등) 병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026년 내 13개(70%) 재해취약지 정비 완료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 제고 노력 및 예산 집행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도민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체감 저조 • 소규모 사각지대의 재해 위험 방치	• 도민 직접 제안으로 홍보 효과 및 위험요인 제거 체감 제고 • 소규모 대상지의 보수·보강을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람」(행정안전부)

※ 개정계획 없음(잠정)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30억 원

- 도비(재난관리기금) 15억 원, 시군비 15억 원

□ 추진체계

○ (도) 사업 선정 계획 수립, 서류 및 현장 검토, 사업선정, 도비(기금) 보조

○ (시·군) 주민 제안 점수 및 사전 검토, 시군비 확보, 사업추진

○ (도민) 마을 지역 내 재해취약지 발굴 및 개선 아이디어 제안

□ 추진일정

○ '26년 신규사업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 '25. 7월

○ 신규 사업 수요조사 결과 취합 : '25. 7월 ~ 8월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25. 8월

○ 신규 사업 선정 및 통보(가내시 : '25. 11월) : '25. 9월

○ 보조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26. 1월 ~ 12월

○ 사업추진 현황 관리 : '26. 1월 ~ 11월(상시)

□ 홍보계획

○ 사업 선정 절차 시 시·군청 및 읍·면·동 게시판, 기관 홈페이지 공고

- 도민제안 방법 및 절차 안내(필요 서류 서식 및 선정 대상 기준)

○ 재해 예방의 중요성 및 유의사항 병행 홍보

- 신청서 서식에 생활 밀착형 재해 예방 홍보 문구*를 작성

* 예시) 생활주변 위험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신념으로 항상 주변을 둘러봅시다.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4-1 응급의료 대응 강화 및 공급 사각지대 해소

주관부서	공공의료과	협조기관/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담당자	여원일 주무관	연락처	033-249-2672

□ 추진배경

○ 춘천·원주·강릉 제외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

○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전국 대비 하위권 수준**

- 권역응급의료센터 61.8%로 전국 13위(기준시간 60분)
- 지역응급의료센터 53.6%로 전국 12위(기준시간 30분)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 개선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042백만 원(국비 100%)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구분	개소 수	총예산(백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2	469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1	2,385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2	188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 응급환자 이송 지침 개정 관리
-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활성화(이송병원 선정 기능 강화)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추가 배치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포함) 15개소 운영비 지원

- 응급의료센터 2, 응급의료기관 11개소, 당직의료기관 2개소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 응급환자 이송 지침 개정(1회),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등록관리(응급의료기관 23개소),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인건비 지원(2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축 초기 단계로 체계 개선 필요	• 병원 전 단계 이송 체계 개선으로 협업기관 간 소통 활성화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 개정('26년 하반기)

- 응급환자 이송 지침('24.10월 제정, '25.9월 개정) 현장 의견 수렴, 사례 검토를 통한 지침 개정 지속 추진
- 8대 중증질환 응급의료자원 기반 지역별 응급이송 체계 정비

* 8대 중증질환: 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소아, 분만, 정신, 화상

□ '26년 소요예산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042백만 원(국비 100%)

- 응급의료센터 2개소: 469백만 원
- 응급의료기관 11개소: 2,385백만 원
- 당직의료기관 2개소: 188백만 원

○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 지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2명/개소): 160백만 원(국비 70%, 도비 30%)

□ 추진체계

기관명	부서명	주요 역할	주관·협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지침 심의·개정) 지역응급의료(실무)협의체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도 관리	주관
	구조구급과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현장 실태 및 정보 공유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파악 및 이송병원 선정 119 구급스마트 시스템 운영 관리	협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실시간 업데이트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응급환자 적극수용 응급실 수용곤란 사례 발굴	협조

□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환자 이송 지침 개정 (응급의료위원회 심의)												
119 구급스마트 시스템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4-2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및 컨설팅 지원으로 대응역량 제고

주관부서	동물방역과	협조기관/부서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방역부서 18개 시군/가축방역부서
담당자	최 민 재 주무관	연락처	033-249-2728

□ 추진배경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상시 발생 위험 구조 고착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상시 발생에 따른 외부 유입 위험 지속

  * '26년 전국 ASF 24건, HPAI 34건, 구제역 2건 발생

○ **예방접종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

- 자가접종 중심으로 접종 누락, 접종시기 불일치 및 항체 형성 편차 발생
- 접종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검증 및 사후관리 체계 미흡

○ **농가 간 방역역량 격차에 따른 위험 상존**

- 고령농가, 소규모 농가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방역 사각지대 지속 발생
- 농가별 방역수준 편차로 인해 동일 지역 내 감염 확산 위험 상존

□ 세부 추진사항

○ **예방접종 관리체계 고도화**

- 구제역·돼지열병 등 주요 질병별 맞춤형 접종관리 체계 운영

  * 일제접종 및 취약농가 보강접종, 항체형성률 상시 모니터링

- 접종 사각지대 해소 및 이행력 제고

  * 소규모·고령농가 대상 공수의 지원, 자가접종 농가 대상 현장점검 및 이행관리 강화

- 매개체(곤충 등) 기반 감염 위험 선제 대응체계 구축

  * 고공포집기 설치 및 매개체 상시 모니터링, 해외유입 가능 질병 감시체계 운영

○ **찾아가는 질병관리 및 컨설팅 강화**

- 농가 맞춤형 질병관리 지원체계 구축

  * 축종별(돼지·가금·꿀벌) 질병 컨설팅 및 진단·면역지원 확대

- 취약농가 집중관리

  * 반복 질병 발생농가, 항체 저조농가 지정 및 현장 컨설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백신 항체양성률 : 구제역 92%, 돼지열병 95% 이상 유지

  * 구제역(소·돼지·염소) 92%, 돼지열병(돼지) 95%

- 매개체(곤충 등) 예찰 : 100% 달성

  * 공중포집기 설치(1개소) 100%, 신종 해외 가축질병 검사(16회) 추진 100%

- 컨설팅 실시 : 100% 달성

  * 돼지(8호) 100%, 가금(10호) 100%, 꿀벌(2호) 100%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예방접종 일부 누락 및 형식적 관리 • 취약농가 방역 사각지대 존재 • 발생 중심 사후 대응 체계	• 전 농가 대상 체계적 접종관리 • 맞춤형 컨설팅으로 사각지대 해소 • 예방 중심 선제 대응 체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 개정계획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 7,662백만원(국비 2,552, 도비 909, 시군비 2,425, 자부담 1,776)

- 예방접종 관리 강화 : 6,772백만원
- 질병관리 및 컨설팅 : 890백만원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총괄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정책 수립 및 총괄관리)

○ 협업기관

- 동물위생시험소(검사·예찰 수행)
- 시군(현장 방역 및 사업 집행·농가 관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인력 지원 및 현장 대응)
- 민간수의사·공수의(예방접종 및 컨설팅 수행)
- 민간 전문기관(기술지원 및 검사)

□ 추진일정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26.1~2월)

○ 돼지열병·구제역(돼지) 백신접종 실시('26.1~12월)

○ 컨설팅 사업 추진('26.2~12월)

○ 구제역 일제접종(소·염소) 실시('26.3월, 9월)

○ 구제역 항체형성률 분석 및 보강접종('26.1~12월)

○ 사업별 중간점검 및 성과관리('26.6월, 12월)

○ 사업별 사업정산 및 평가('27.1월)

□ 홍보계획

○ 농가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

- 문자, 마을방송, 현수막 활용, 예방접종 일정 및 방역수칙 안내

○ 현장 중심 소통 강화

- 농가 방문 교육 및 컨설팅 연계 홍보
- 취약농가 집중 설명회 운영

○ 온라인 홍보 병행

- 도 홈페이지 및 SNS 활용 질병 발생 및 방역정보 실시간 공유

4-3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기관/부서	18개 시군(주거복지 사업부서)
담당자	전인환 주무관	연락처	033-249-3464

□ 추진배경

○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본 주거환경 조성 필요

- (구조안전) 지붕, 벽, 기둥의 노후 및 불량에 의한 붕괴 위험
- (생활관련) 난방, 급·배수, 전기·위생 설비 등 거주 환경 열악

○ 정부 주거급여(수선유지) 사업에 소외되는 차상위계층 주거지원 필요

- (정 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 지원
- (강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임차가구** 지원

□ 현황(문제점) 진단

○ 도내 노후주택 수 지속 증가 및 차상위계층 가구 수 多

- **(노후주택수)** '19~'23년, 매년 10% 증가(15만 호→21만 호)
- **(차상위계층)** '26년 2월, 9,847가구 * 차상위(일반,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개선 공사비 부담 증대

- **(건설공사비지수)** '21~'25년, 매년 3% 증가(117→132)

□ 추진방향

○ 매년 증가하는 노후주택 수와 1만여 가구의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물가상승을 고려한 지원단가 및 사업규모 확대 추진

- (~'26년) 가구당 400만원, 70~80가구 → **('27년) 가구당 590만원, 90가구**

※ 도 건축과-7854(2026.3.27.)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확대안)" 방침결재完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26. 1. ~ 12. * 2019년~계속

○ 사 업 비 : 320백만 원(도 96, 시군 224) * 도 30 : 시군 70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자가/임차)

○ 사업내용 :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가구당 400만원 지원)**

- (건축) 구조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창호 등 경보수
- (설비) 난방, 급·배수, 전기·가스, 위생, 소방 등 필요 설비
- (기타) 청소·소독, 문턱 제거, 안전대 설치 등 환경개선 수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6년도 차상위계층 주택개조 지원 **80가구 목표**

※ ('23년) 71가구 → ('24년) 70가구 → ('25년) 73가구 → ('26년) 80가구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주거급여 수급자 한정 주거개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	•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보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임차가구

□ '26년 소요예산

○ 차상위계층 주거개선 지원예산 : 3.2억 원(도 9.6, 시군 2.24)

□ 추진일정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26.1월)

○ 지원 대상자 조사·선정 및 사업 추진('26.2~12월)

- 시군 직접시행 또는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과 사업 연계 추진

○ 지원내역 및 집행실적 등 추진현황 조사(매월)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 등 사업안내 추진(연중)

4-4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

주관부서	교통과	협조기관/부서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농림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담당자	정의호 주무관	연락처	033-249-3627

□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및 교통수요 감소로 인한 버스노선 축소 등 저하된 대중교통 서비스 보완 및 개선 필요

○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단절된 이동권 보장 및 주민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교통복지 구현

□ 세부 추진사항

○ 희망택시 운영지역 선정 기준

- 2018년부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 버스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400m 이상인 지역

○ 희망택시 운행 및 관리

- 이용 요금 : 시·군별 개인부담금 1,000원 ~ 1,700원

  * 택시요금 초과분에 대해 사후 정산하여 택시 운송업체에 보조금 지급

- 배차 방식 : 시·군별 지역 콜센터 이용(콜택시와 동일)

- 운행 횟수 : 시·군 여건에 맞추어 가구·개인·마을별 운행횟수 선정

  * (가구별) 편도 4회/월 이상, (개인별) 편도 2회/1일 이상, (마을별) 왕복 2회/1일 이상

○ 보조금 정산 및 서비스 점검

- 희망택시 전용 카드 도입으로 실시간 운행 관리 및 부정수급 차단

- 분기별 운행 실적 점검, 연 1회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희망택시 운행 확대

  * ('23년) 666개 마을 ⇨ ('24년) 680개 마을 ⇨ ('25년) 798개 마을 ⇨ ('26년) 828개 마을

-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주민 생활권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버스 미운행 및 적은 운행횟수로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 거점지역과 배후지역 간 단절로 인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동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 범위 확대 • 지역 간 원활한 이동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활력 제고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 9,007백만 원(국 1,798, 도 539, 시군 6,670)

지역별	마을수	사 업 비(백만 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828	9,007	1,798	539	6,670
시 지역	270	2,927	700	210	2,017
군 지역	558	6,080	1,098	329	4,653

□ 추진체계

○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국토부, 농식품부

○ 사업신청 및 사업 시행 : 시·군

○ 사업심사,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정산 및 평가자료 작성·제출 : 도

○ 현지 실사 또는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 국토부, 농식품부

□ 추진일정

○ ‘26. 1월 ~ 12월 : 희망택시 운영 지원사업 추진(시·군)

○ ‘26. 3월 : ’27년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 지원사업 수요조사

○ ‘26. 3월 ~ 12월 : 국도비 보조금 교부(국토부, 농식품부 → 도 → 시·군)

○ ‘26. 4월 : 1분기 사업실적(운행 횟수 및 이용자 수 등) 보고

○ ‘26. 7월 : 2분기 사업실적(운행 횟수 및 이용자 수 등) 보고

○ ‘26. 10월 : 3분기 사업실적(운행 횟수 및 이용자 수 등) 보고

○ ‘27. 1월 : ‘26년 희망택시 결과보고

□ 홍보계획

○ 언론보도, 시·군정 홍보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연중 홍보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주민 대상 이용 안내 홍보

4-5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 운영

주관부서	교통과	협조기관/부서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농림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담당자	최지원 주무관	연락처	033-249-3606

□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및 교통수요 감소로 인한 버스노선 축소 등 저하된 대중교통 서비스 보완 및 개선 필요

○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단절된 이동권 보장 및 주민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교통복지 구현

□ 세부 추진사항

○ 지원대상

- 대중교통 미 운행 또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

  * 단, 기존 운행체계 개선없이 비수익노선 지원형태 불가(노선 효율화 등 필수)

○ 공공형버스 운행 및 관리

- 이용방법 : 기존 시내·농어촌버스와 동일

  * 단,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전화·어플 등을 활용하여 이용

- 운영주체 : 시·군 직접운영, 지방공기업 및 마을자치회 등 운영

- 운행방식 : 노선형, 수요응답형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운행방식 선정

○ 보조금 정산 및 서비스 점검

- 분기별 운행 실적 점검, 연 1회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공공형 버스 이용객 수 확대

  * (`23년) 2,285천명 ⇨ (`24년) 2,285천명 ⇨ (`25년) 2,305천명 ⇨ (`26년) 2,316천명

-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주민 생활권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버스 미운행 및 적은 운행횟수로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 거점지역과 배후지역 간 단절로 인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동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 범위 확대 • 지역 간 원활한 이동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활력 제고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11,786백만 원(국 5,893, 도 1,768, 시군 4,125)

지역별	마을수	사 업 비(백만 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715	11,786	5,893	1,768	4,125
시 지역	257	4,572	2,286	686	1,600
군 지역	458	7,214	3,607	1,082	2,525

□ 추진체계

○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국토부, 농식품부

○ 사업신청 및 사업 시행 : 시·군

○ 사업심사,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정산 및 평가자료 작성·제출 : 도

○ 현지 실사 또는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 국토부, 농식품부

□ 추진일정

○ '26. 1월 ~ 12월 : 공공형버스 사업 추진(시·군)

○ '26. 3월 : '27년 공공형버스 사업 수요조사

○ '26. 3월 ~ 12월 : 보조금 교부(국토부, 농식품부 → 도 → 시·군)

○ '26. 4월 : 1분기 사업실적(운행 횟수 및 이용자 수 등) 보고

○ '26. 7월 : 2분기 사업실적(운행 횟수 및 이용자 수 등) 보고

○ '26. 10월 : 3분기 사업실적(운행 횟수 및 이용자 수 등) 보고

○ '27. 1월 : '26년 공공형버스 사업 결과보고

□ 홍보계획

○ 언론보도, 시·군정 홍보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연중 홍보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주민 대상 이용 안내 홍보

4-6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

주관부서	대기환경연구부 청정대기과	협조기관/부서	도 환경정책과 / 18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
담당자	박영주 주무관	연락처	248-6454

□ 추진배경

○ 고정식 대기측정소는 설치지역에 제한된 대기질 정보 제공
- 도내 대기질 정보 취약지역의 도민 체감형 환경 정보 요구 증가

○ 대기오염 환경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필요
- 고정식 대기측정소 자료만으로는 민원 대응의 신뢰성 확보 곤란

○ 자연휴양림 등 청정지역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
- 강원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를 위한 홍보용 기초자료 필요

○ 국제 및 지역행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대기질 정보 제공 필요
- 행사장 주변 대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과 고농도 발생 시 관람객의 건강보호

□ 세부 추진사항

○ 현장 중심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 운영
-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민원 발생 및 대기질 정보 취약지역 현장 측정
- 대기질 측정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방문 시 주민과의 상담 및 설명 병행

○ 대기오염 민원 대응 신속체계 구축

민원 접수	⇨	현장 출동(대기질 측정)	⇨	결과 통보
도, 18시군 환경 부서		PM-10, PM-2.5, SO_2, NO_2, CO, O_3		연구원→해당 부서

- 대기질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 민원 대응

○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자연휴양림 대기질 조사 확대
- 분기별 순환 측정(연 4회 이상), 계절별·시간대별 대기질 변화 분석
- 대기오염물질(6항목) 외 피톤치드(모노테르펜 9종) 성분 분석

○ 각종 행사(국제 및 지역축제 등) 성공개최 지원
- 행사장 주변의 대기질 정보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국지적 대기오염 주의보(경보) 발령· 해제

○ 대기환경정책 활용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행정력 강화
- 측정 데이터 관계기관 공유 및 관광·환경 정책 연계 활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현장 대응력 강화) 민원 발생 시 이동측정차량 현장 출동률 100% 달성
- (정보 접근성 개선) 관광객 및 주민이 체류지(휴양림 등)의 대기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전광판 운영
- (찾아가는 측정 서비스 확대) 고정식 측정소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150일 이상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고정식 측정소 중심 제한적 대기질 정보 제공 • 민원 발생 시 대응 지연 및 신뢰성 부족 • 자연휴양림 대기질 기초자료 부족 • 도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 미흡	• 현장 중심 실시간 대기질 측정 서비스 제공 • 민원 발생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 • 자연휴양림 대기질 데이터 축적 및 정책 활용 • 도민 체감형 환경행정 서비스 구현 및 만족도 향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27,000천 원(도비)

○ 대기환경이동측정시스템 유지보수: 13,350천 원

○ 측정장비 소모품 교체 및 수리: 7,000천 원

○ 측정자료 전송 보안관리 등 통신비: 1,150천 원

○ 대기질 조사 업무 추진 여비: 5,500천 원

□ 추진체계

○ 주관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청정대기과

- 이동측정차량 운영 및 대기질 조사·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원대기환경정책 기초자료 제공

○ 협조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 피톤치드 등 정밀 분석 지원
- (도 환경정책과) 민원 발생 지역 정보 제공, 행정 지원
- (인제군, 양양군) 자연휴양림 측정장소 제공, 홍보 활용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업기관 협의, 측정대상지 선정('26. 2.)

○ 민원 현장 측정 상시 운영 및 분기별 대기질 조사 수행('26. 3.~11.)

- 민원 발생 지역 및 대기오염 취약지역 대기질 조사(상시)
- 도내 자연휴양림 대기질 조사(분기별)
- 주요 관광지 및 지역 축제 성공 지원 대기질 조사(하절기)

○ 데이터 분석 및 성과 평과, 결과보고서 작성, 언론 홍보('26. 11.~12.)

□ 홍보계획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신문, 방송), 기관 홈페이지 게재

○ 홍보내용

-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 운영 사례 소개
- 자연휴양림 및 주요 관광지 대기질 청정성 홍보
- 대기오염 민원 대응 및 개선 사례 공유

4-7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재난취약지역 CCTV 확대

주관부서	안전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시군 재난부서
담당자	박영민 주무관	연락처	033-249-3869

□ 추진배경

○ 재난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 및 초기 대응체계 확립

- 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 지연 및 초동 조치 미흡 차단 필요

○ 재난취약지역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초동 대응능력 강화 및 골든타임 확보

□ 세부 추진사항

○ 재난 대응을 위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추진

- 전담인력 9명(3조 3교대) 24시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초기 재난상황 전파(지휘부 및 유관기관), 재난문자 송출, 상황관리 훈련

○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확대 구축 추진(4개 시군 14개소)*

- 보조금 교부(1월) 및 사업 추진실적 확인 현장점검(6월, 9월)

* 홍천 4, 영월 4, 평창 4, 양구 2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전담인력(9명) 운영으로 24시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시군 재난상황담당자 대상 실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반기 1회)
-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재난문자방송 송출훈련 실시(분기 1회)
-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4개 시군 14개소 100% 설치 완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비상시 운영에 따른 상황인지 및 전파 지연 우려 • 현장 정보 부족으로 인한 초동 조치 및 골든타임 확보 한계 •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공백으로 인한 선제적 대응 부족 •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보고 체계의 수동적 운영	• 전담인력 배치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실시간 영상 관제와 즉각적인 상황전파로 신속 대응력 강화 • 주요 위험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난 안전망 구축 • 상시 상황실 운영을 통한 체계적·능동적 상황관리 체계 확립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 규정 일부개정으로 발송기준 등 개선사항 반영(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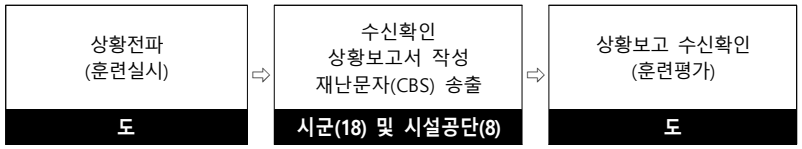
□ '26년 소요예산

○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비예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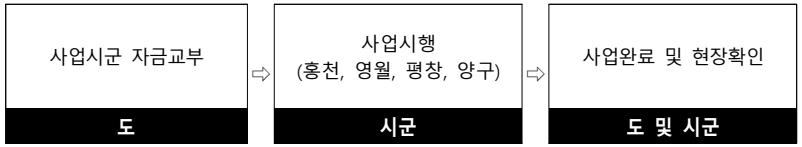
○ 재난취약지역 CCTV 14개소 설치: 2.8억 원

□ 추진체계

○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재난문자방송 송출훈련



○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



□ 추진일정

○ 초기 대응을 위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추진

- 재난·재해 대비 24시간 상시 상황관리 및 지휘부 보고체계 유지(상시)
-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재난문자방송 송출훈련 지속 실시
- 시군 재난상황담당자 대상 실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반기 1회)

○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확대 구축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1월)
- 사업추진 실적 확인 현장점검(6월, 9월)
- 사업추진 완료(12월)

4-8 전통시장 안전망 및 자생력 강화

주관부서	소상공인과	협조기관/부서	시·군 전통시장 부서
담당자	조권행 주무관	연락처	033-249-3224

□ 추진배경

○ 노후·영세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회복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 ('19. 1.) 원주 중앙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화재 발생 → 80여 개 점포 피해
('24. 1.) 태백 황지자유시장 화재 발생 → 초동 진압

○ 상인의 고령화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 화재보험·화재공제 가입지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 세부 추진사항

◎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 추진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도내 건물형 전통시장(20개소)
- 지원내용: 건물형 전통시장 민영화재보험 가입비 일부(60%) 지원

<화재공제 가입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전통시장 개별점포(6,600여 개소)
- 지원내용: 민영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개별점포의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화재공제* 가입비 일부(80%)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 지원대상: 도내 57개 전통시장, 전통시장 지킴이 149명
- 지원내용: 전통시장 경영·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지원대상: 13개 시군, 25개 시장, 27개 사업
- 지원내용: 전통시장·상점가 공동이용 구간 노후·편의시설* 개선

* 비·햇빛 가림을 위한 아케이드, 고객센터, 화장실 설치·보수, 안전시설, 시장 입구 간판, 통행로 정비, 지중화 사업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화재공제 가입률 **62%**(약 4,100여 개소) *가입률 전국 1위
-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피해 발생 **0건**
-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상인 만족도 제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25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야간 등 취약시간 화재 사고 발생 시 초기 진압 실패로 대형 화재 피해 발생	• 취약시간 지킴이 예찰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소방당국 신고로 대형 피해 예방
• 상인들의 고령화와 생업 집중으로 정부·지자체 시장 활성화 사업 대응 역량 저조	• 지킴이의 행정 업무 지원으로 각종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하여 자생력 제고
• 시설 노후화로 전통시장의 낙후된 이미지 심화	•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 및 방문객 증대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

□ '26년 소요예산

○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 지원: **52.5억**

- 화재보험 가입 지원 0.5억, 화재공제 가입 지원 2억, 지킴이 지원 50억

○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57.1억**

□ 추진체계

○ 화재보험·화재공제·지킴이 지원: 도 → 시군 → 전통시장

○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초동 진압: 전통시장 지킴이

○ 피해 발생 시 사후 보상: 민영보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추진일정

○ 2026년 안전관리 사업(화재보험·화재공제·지킴이) 추진: 2026. 1. ~ 12.

○ 2026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2026. 2. ~ 12.

○ 2027년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및 대상사업 선정: 2026. 4. ~ 12.

○ 2027년 안전관리 사업 수요 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2026. 8.~

4-9 도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주관부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	협조기관/부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련 기관
담당자	우종민 주무관	연락처	033-249-2322

□ 추진배경

○ 도내 체류 외국인 증가 및 체류 유형 다양화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이 고유업무 성격에 따라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 필요

※ 도내 장기체류외국인 현황('25.12월 말 기준)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명)	20,710	24,100	27,504	30,218	33,621

-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대비 '25년에 33,621명으로 62.3% 증가함.

□ 세부 추진사항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도 공무원 파견을 통해 외국인 체류 업무 지원

- 비자 업무 · 외국인 등록 업무 지원 및 비자업무 관련 지자체 연락

○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렴

- 외국인 정책 추진 관련 유관 기관 광역 네트워크 형성
- 주요제도 개선, 현안대응,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회의 추진

《광역 실무협의회 구성(안)》

협의체	**1. 외국인 정책 협의체** - 외국인 비자, 적응·정착, 취·창업 등 관련기관 정책실무협의체 * 시군, 외국인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민간 기업 등 **2. 외국인 관리 협의체** - 불법체류자 방지, 외국인 안전, 범죄 대응 등 관리협의체 *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정원, 경찰청, 교육부 등 관련 중앙기관
자문단	**3. 외국인 정책 자문단** - 전문가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회, 연구원, 대학교수, 외국인단체 등 자문단 구성 * 대학, 연구기관, 학회, 외국인단체, 법률단체, 협회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외국인 정책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분야별 정책 현안 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
-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 현안 발생 시 기관 정보 연계 부족 및 대응 지연	• 기관간 협력을 통한 정책 연계 및 효율성 제고 및 행정수요 사각지대 해소 •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26.2.27.)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따른 강원 외국인 체류 등 운영에 관한 특례 법무부 업무협의(~10월)

- 도내 4개* 구역 입주기업 · 기관 근무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체류기간 *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관광특구 · 관광단지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체계

○ 협력체계 구성

- **(도)** 외국인정책 광역 네트워크 구성,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 **(유관기관)** 분야별(교육, 경제, 생활, 안전 등) 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공유, 현안논의

《협력체계 구성(안)》

분야	유관 기관	주요 분야
교육	교육청, 대학,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및 지역 정착
경제	고용노동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제진흥원, 상공회의소	외국인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지역 산업 인력 수급 대응,
생활	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외국인주민	외국인 정착지원(한국어교육, 행정서비스 접근 개선, 생활정보 제공 등), 사회통합
안전	경찰청, 소방본부, 국정원,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	범죄예방, 재난대응, 인권 보호

□ 추진일정

분기	추진계획	비고
1분기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도청 공무원 파견(1년) •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추진	
2분기	• 광역 네트워크 구성 - 외국인정책 정보공유 및 현안문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3분기 / 4분기	• 2027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수시)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완료 • 파견 공무원 성과 평가, 추가 파견(안) 검토	

4-10 고령화 사회 대응 농촌지역 중·소형 폐가전 수거체계 구축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이순환거버넌스
담당자	김동윤 주무관	연락처	033-249-3519

□ 추진배경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회수·재활용 대상**으로 포함

○ 중·소형 폐가전의 경우 **배출 방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 수거체계 미흡**으로 일반폐기물로 혼합 배출되는 등의 사례 다수 발생

- 기존 **무상방문* 수거는 소량 배출 시 이용에 불편** 초래

  * 중소형 폐가전 일정 수량(5개 이상) 이상 배출 시에만 신청 가능

-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노인가구 비율이 높고, 배출 장소 접근성이 떨어져 중소형 폐가전 **분리배출이 어려움**

※ 농촌지역(읍·면) 내 중소형 폐가전 이동식 수거함 설치가 미흡한 실정
(도내 197개소[공공기관·공동주택] 중 읍·면 지역 29개소 불과)

□ 세부 추진사항

○ **(수거방식 다변화)** 폐가전 수거방식 및 운영체계 개선

- **무상방문 수거(다량)와 거점 수거(소량) 병행** 운영

○ **(생활밀착형 거점 구축) 읍면동 중심** 중·소형폐가전 **수거거점 운영**

- 노인층 이용빈도 높은 생활밀착형(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수거함(이동식) 설치
- **분리배출 취약지역 선정**·우선 배치 * 시군별 2~3개소 설치

○ **(대주민 소통) 수거체계 운영 지원 및 현장 대응 강화** * 이순환거버넌스 협조

- 수거함 설치부터 수거 주기 등 운영 전반 주민 요구사항 상시 수렴·반영
- 시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불편 사항에 선제적 대응하고, 현장중심 개선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도 전역 행정복지센터 중심** 중·소형 폐가전 **이동식 수거함 설치* 확대**

  * '26년2월 5개 시군 34개소[공공기관] → '26년 말 51개소 이상(50% 증대 목표), 이후 지속 확대

- 폐가전 **분리배출 정착**을 통한 일반폐기물로의 **혼합배출 감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농촌지역 중심 수거 인프라 부족**으로 혼합배출 등 발생 • 무상방문 수거 중심 체계로 **소량 배출 대응 한계**	• **(서비스 접근성)** 거점 수거함 확대로 상대적으로 수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까지 포용하는 분리배출 기반 구축** 및 배출 사각지대 해소 • **(자원순환) 폐가전 회수율 증가** 및 고품질 폐자원 재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도)** 총괄 운영
- **(시군)** 설치 수요조사, 집하공간 제공 및 주민 소통창구 역할
- **(이순환거버넌스*)** 수거 인프라 지원, 재활용센터 운반 및 재활용 등

*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인가

□ 추진일정

○ 중소형 폐가전 **이동식 수거함 설치·운영 계획** 수립: 4월

○ 시군별 수거함 설치 **수요조사** 실시: 4 ~ 5월

- 분리배출 취약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우선 선정

○ 폐가전 **수거함 설치·운영 개시**: 5 ~ 6월

- 운영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 등 점검: 7 ~ 9월

○ 수거실적 분석 및 우수사례 등 발굴: 12월

□ 홍보계획

○ **폐가전 이동식 수거함 설치 및 참여 안내** * 시군 협조

- 고령층 배려 마을 단위(경로당 등) 안내문,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 시군 이통장 회의, 마을단체 회의 등 개최 시 안건 반영하여 적극 홍보

○ **폐가전 분리배출 절차 홍보·안내**(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 무상방문 수거 및 거점 수거 이용방법 등 안내 병행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5-1 결핵 ZERO 실현, 꼼꼼한 어르신 결핵 검진으로!

주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 감염병관리과	협조기관/부서	질병관리청, 시군,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등
담당자	남현미 주무관	연락처	033-249-4645

□ 추진배경

○ **도내 결핵 발생률 현황**

-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 OECD 국가 중 2위, 전국 대비 강원 3위

  * 인구 10만명 당 신환자율('25년) 전남(43.3), 경북(42.4)에 이어 강원(37.4) 3위, 전국(26.9%)보다 높은 수준.

○ **65세 이상 결핵 발생 비율 매년 증가**

- 우리나라 결핵 발생은 지속 감소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 발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결핵 발생의 62.5% 차지**

  *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 ('23) 57.9% → ('24) 58.7% → **('25) 62.5%**

- 특히, **강원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25년 73.8%)은 **전국** (62.5%) **대비 11.3%p 높게 발생**

  * 최근 3년간('23년~'25년) 65세 이상 결핵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국			강원도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전체 결핵	인구10만명 당**	38.2	35.2	33.5	51.6	48.0	**46.6**
65세 이상 결핵	환자수(율)	11,309 (57.9)	10,534 (58.7)	10,669 (62.5)	**542 (68.8)**	**516 (70.9)**	**519 (73.8)**
	인구10만명 당**	119.5	105.8	101.5	151.7	137.6	**131.8**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확정통계

** 국가통계포탈-시군구/성/연령5세 주민등록연앙인구(2023~)

○ **결핵 조기검진으로 고위험군·취약계층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 관리 중요**

- 전체 국민의 30%가 잠복결핵감염*으로 추정, 이중 최대 10% 향후 결핵으로 발병 가능성 높음.
- 적극적인 예방적 치료를 할 경우 결핵 최대 90%까지 예방

* 전세계 전체 사망원인 중 10위, 감염병 중 코로나19 다음으로 2위임.

- 무증상 결핵, 조기 발견시 치료 성공률 향상
- 증상있는 결핵환자 성공률(76.4%) 대비 10%p 높음

(국립보건연구원 결핵 코호트 연구분석결과)

□ 세부 추진사항

○ **결핵 예방 및 검진 강화**

- 찾아가는 결핵검진 및 무료결핵검진 운영(연중)
- 원격결핵관리 등 결핵환자 지속 관리(연중)
- 고령층 대상 결핵인식 제고 및 예방교육 실시(3월)

○ **지역사회 결핵관리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 결핵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상·하반기)
-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상·하반기)
- 결핵예방 홍보 강화(연중)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수검률: 90% 이상**

-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목표 인원 중 결핵검진 실시자의 비율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유소견자 수검률: 40% 이상**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통해 발견한 유소견자 중 추구검사 실시자 비율

○ **민관합동 고령층 대상 결핵예방 교육 실시**

-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 65세 이상 자원봉사자 대상 결핵예방교육
- (협업)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도 및 11개 시군 보건소,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휴대용 결핵진단검사 장비 등 고가의 장비를 각 시군마다 구입 시 예산 낭비 • 집단 및 가족 내 결핵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필요 • 시군 결핵관리전담의사 부재에 따른 전문의료 사각지대 존재 •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개별 운영 및 활용으로 비효율성 증가	• 대한결핵협회 도지부 이동검진 차량 및 휴대용 X선 진단 장비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 도 결핵관리의사 지정 및 원격화상관리를 통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료관리율 제고 •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의 자원 활용도 제고로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 용이

□ '26년 소요예산

○ 어르신 결핵검진사업: 2,314백만원

□ 추진일정

○ **무료결핵검진 운영: 연중**

- 보건소 내소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흉부 X선, 객담검사 등) 실시

○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 기간: 2026년 1월 ~ 12월
- 대상: 18개 시군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취약노인 등
- 추진내용: 결핵검진(흉부 X선, 객담검사 등) 실시
  - 대한결핵협회 도지부(검진수탁기관) 계약체결: '25년 12월
  - 보건소-대한결핵협회 도지부-시설 간 결핵검진 일정 협의: ~ '26년 3월
  - 결핵검진 실시: 대한결핵협회 도지부

○ **원격결핵관리 등 결핵환자 지속 관리: 연중**

- (원격결핵관리)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도 결핵관리의사와 시군 보건소 결핵실을 연결하여 환자 관리 자문
- (의료기관 및 보건소) 민간과 공공보건기관 협력으로 치료 중인 결핵환자 복약 확인 및 상담 등 철저한 환자 관리를 통한 치료 중단(포기) 방지

○ **고령층 결핵인식제고 및 예방교육 실시**

- (실시) ‘26. 3. 16.~ 3. 27.
- (대상) 대한노인회강원연합회 65세 이상 자원봉사자 2,200명
- (내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결핵검진 중요성, 예방수칙

○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개최: 2회(6월, 11월)**

- 구성인력 : 19명(질병관리청, 도,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대한결핵협회 도지부 등)
- 역　　할 : 결핵관리사업 추진 방향 공유, 결핵 고위험군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논의 등

○ **시군 담당자 및 결핵관리전담요원 역량강화 교육: 2회(2월,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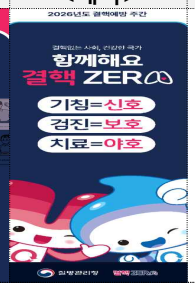
- 국가 결핵관리 지침 교육 및 결핵의 이해와 치료 등
-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사례 실습

○ **결핵예방 홍보 강화: 결핵예방주간 집중 홍보(3월), 일반 홍보(연중)**

□ 교육 홍보계획

○ 결핵예방주간 운영

- ’26. 3. 22. ~ 28. 18개 시군,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결핵협회 도지부 참여
- 「결핵예방의 날」을 계기로 결핵예방주간을 통한 결핵 예방 및 검진 활성화 유도

<메인 포스터>	<배너>	<홍보물 부착용 스티커>
		

○ 고령층 결핵인식제고 및 예방교육 홍보

- 결핵 리플렛 및 홍보물 제공, 언론 보도자료 배포(강원일보 등)

5-2 강원·충북 연대로 만든 소아 응급 생명라인

주관부서	공공의료과	협조기관/부서	5개 시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담당자	정영주 주무관	연락처	033-249-2145

□ 추진배경

○ 의료인 집단행동 이후('24. 4.) **원주·충주권역* 소아응급·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제한 발생**

- 전공의 공백 장기화 및 업무 과중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퇴사 및 소아 응급 진료 제한 발생

< 응급의료권역 구성(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강원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원주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 원주·충주권역 소아응급 진료를 위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간 범지역적 대책 마련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 사업기간: 2025. 7. ~ 2027. 12.(3년)
- 사업대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사업참여: 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충주시, 제천시
- 총사업비: 1,500백만 원(도비 20%, 시군비 70%, 병원 자부담 10%)
- 사업내용: 응급실 소아전담전문의(2명) 인건비 지원

〈 연도별 예산 〉

(단위 : 백만 원)

연도	총계	도비(20%)	시군비(70%)	자부담(10%)	비고
합계	**1,500**	**300**	**1,050**	**150**	
2025	300	60	210	30	6개월
2026	600	120	420	60	12개월
2027	600	120	420	60	12개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원주·충주 응급의료권역 내 5개 시·군(원주, 횡성, 영월, 충주, 제천) 사업 참여 및 시·군비 차등 분담 체계 구축·운영

  * (이용비율) 원주 58.6%, 횡성 4%, 영월 2.5%, 충주 6.9%, 제천 8.7%, 그 외 19.3%

-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서비스 상시 제공을 통한 지역 내 응급의료 대응체계 안정화
- 지역 내 의료이용률 제고를 통한 소아 응급환자 진료 접근성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제한 • 응급 상황 발생 시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증가 및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 발생 • 지역 내 소아 응급의료 접근성 저하	• 전문의 추가 확보 및 기존 인력 이탈 방지 • 24시간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진료 체계 안정적 운영 및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진료 공백 해소 및 권역 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 '26년 소요예산

○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600백만 원

(도 120, 시군 420, 자부담 60)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도 공공의료과) 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 **협조기관**

- (5개 시군 보건소) 예산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비고
연중	○ 전문의 인력 운영 및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상시 운영	
분기별	○ 운영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분기별 실적 확인)	
연말	○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환류	

5-3 베테랑 시니어 전문의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주관부서	공공의료과	협조기관/부서	고성군, 속초의료원
담당자	고영인 주무관	연락처	033-249-2181

□ 추진배경

○ 도 분만취약지역: 15개 지역(춘천, 원주, 동해 제외)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임산부 산전관리 및 부인과 질환 진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2010년부터 운영

※ 찾아가는 산부인과 수행지역

연 도	사업수행 지역	비 고
2020년	5개 군(횡성, 평창, 정선, 고성, 양양)	지역 내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으로 **사업 대상지 감소**
2021년	4개 군(횡성, 정선, 고성, 양양)	
2022년	3개 군(정선, 고성, 양양)	
2023년	3개 군(정선, 고성, 양양)	
2024년	2개 군(정선, 고성)	
2025년~	**1개 군(고성)**	

○ 기존 위탁수행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의 사업 포기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중단 위기 발생

○ 분만취약지 군단위 지역 의료격차 심화 및 타 지역 의료이용 증가 우려에 대응, 군 보건소 및 의료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규 위탁수행기관(속초의료원) 및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사업 지속 추진

○ 임상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 제고 기반 마련

- ('25년~) 위탁수행기관(속초의료원) 및 수행전문의(산부인과 시니어의사)

□ 세부 추진사항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사업기간: '26. 1월 ~ 12월
- 사 업 비: 200백만 원(도비 25%, 군비 75%)
- 사업지역: 고성군('25년부터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 수행기관: 속초의료원(위탁 운영)
- 추진방법: 보건소 내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및 부인과 검진(월 2회)
- 진료내용: 산전초음파,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찾아가는 산부인과: 24회 운영, 120명 진료
- 찾아가는 부인과: 24회 운영, 100명 진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산부인과 병·의원 부재로 의료취약지 여성의 기본 진료 접근성 부족 • 취약지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지속 및 필수의료 공백 및 의료격차 상존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의료취약지 여성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사각지대 개선 • 취약지 여성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시니어의사의 경험·전문성 활용으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 완화 및 도 내 의료격차 해소 기여

□ '26년 소요예산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00백만 원(도 50, 군 150)

□ 추진일정

분기	추진계획	비고
1분기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침 개정 ○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모니터링(실적) ○ 찾아가는 산부인과 1분기 운영(6회)	
2분기	○ 찾아가는 산부인과 2분기 운영(6회) ○ 분기별 사업 모니터링(실적)	
3분기	○ 찾아가는 산부인과 3분기 운영(6회) ○ 분기별 사업 모니터링(실적)	
4분기	○ 찾아가는 산부인과 4분기 운영(6회) ○ 사업 성과 결과 보고 및 사업운영 현장 점검	

5-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기관/부서	LH강원지역본부, 강원개발공사
담당자	이영섭 주무관	연락처	033-249-2386

□ 추진배경

○ 도내 인구비중 불균형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청년↓, 고령자↑)

- 청년층(18~39세) 수도권 유출 가속화로 지역 인구 감소

  * 청년비율(도내 총 인구대비) : 22.8%('23년) → 22.3%('24년) → 22.1%('25년)

-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65세~) 인구 비중 급증

  * 고령자비율(도내 총 인구대비) : 23.9%('23년) → 25.3%('24년) → 26.8%('25년)

○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 증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초기 정착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역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 (추진목표) 매년 2개소 이상, 18개 시군 1개소 이상 공급

  · 추진 중 : 8개 시군 742세대(영월,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삼척, 평창)

  * '25년 준공 : 영월(102호) / '26년 신규선정 : 2개 시군(삼척 120호, 평창 100호)

- (총사업비) 2,555억 원(국비 628, 도비 320, 시군비 1,607)

- (사업시행) (도) 국·도비 지원, 사업계획 승인, (시군) 설계·시공, 운영

- (사업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 1~2인 가구 맞춤형 평면,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 절반), 장기거주(30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국토부 선정	⇨	강원형 공공주택 선정	⇨	건설추진 및 입주
사업대상지 확보, 투자심사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등 검토		국·도비 지원 설계·시공 및 입주

○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사업

- (공모유형) 고령자복지, 일자리연계형, 청년특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공모절차) 시군 제안서 제출 ⇨ 도 ⇨ 국토부 ⇨ 현장실사·심의 ⇨ 공모선정
- (공모대상 및 시기)

구분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특화주택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	시군별 수요에 따라 상이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20%, 2인 10% 가산)			
특화공간	관리실, 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프로그램, 상담실 등	공유오피스, 회의공간, 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	서가, 다이닝, 피트니스룸, 테라스, 세탁실 등	입주 대상별 맞춤형 시설 설치
공모시기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사업절차	공모 선정 ⇨ 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각종 인·허가) ⇨ 6월	실시설계 및 착공 ⇨ 1년	입주자 모집 ⇨ 1년 준공 입주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 ’27년 신규사업 선정(2개소), 기존사업 신속 추진(7개소)
  - 사업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 실무협의체 운영(반기 1회)

사업지구	2026년 성과목표	주요협업 내용	향후계획
홍천 북방지구 (80세대)	- 공공주택 건립 추진 ⇒ 공정률 80%	- 예산지원(국·도비) - 공정관리 등 건립추진	- 입주자 모집·선정 - 준공 및 입주
태백 황지지구 (100세대)	- 공공주택 건립 추진 ⇒ 착공(5월), 공정률 25%	- 예산지원(국·도비) - 공사발주 (착공신고, 건설사업관리) - 공정관리 등 건립추진	- 건립공사 추진 - 입주자 모집·선정
정선 남면지구 (70세대)	- 공공주택 건립 추진 ⇒ 착공(6월), 공정률 20%		
강릉 입암지구 (80세대)	- 공공주택 건립 추진 ⇒ 착공(5월), 공정률 25%		
화천 신읍지구 (90세대)	- 공공주택 건립 추진 ⇒ 착공(4월), 공정률 25%		
삼척 도계지구 (120세대)	- 공공주택 건립 추진 ⇒ 착공(6월), 공정률 20%		
평창 횡계지구 (100세대)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사업계획승인	- 설계 검토 - 사업계획승인 협의	- 착공 및 건립공사

-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사업
  - 공모제안서 작성, 수요 및 사업비 분석 등 사업추진 전반 컨설팅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주거필요계층(청년,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 공급 부족 - (민간주택) 중대형 평수 위주 공급 - (공공주택) 고령자, 주거약자 위주 공급 • 아파트 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 가중 - 초기 주거자금 마련 부담 • LH에 의존한 공공주택 공급 한계 - 수요 대비 소극적 임대주택 공급	•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청년, 신혼부부 등 시군별 수요에 맞춰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화 기여 • 주변 시세대비 반값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 완화 - 초기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사다리 역할 수행 • 도·시군 협업을 통한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지자체 중심의 공공주택 적기 공급

□ ’26년 소요예산

○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 6개 시군, 44,901백만 원

구 분	합 계	강 릉	태 백	삼 척	홍 천	정 선	화 천
합 계(백만 원)	44,901	9,099	13,340	5,408	5,218	4,000	7,836
국 비	15,243	4,859	3,462	2,686	-	-	4,236
도 비	3,300	1,000	-	300	1,000	1,000	-
시군비	26,358	3,240	9,878	2,422	4,218	3,000	3,600

□ 추진일정

구분	강원형 공공주택	국토교통부 특화주택 공모
1분기	· (삼척 도계, 정선 남면) 사업계획승인 · (강릉 입암, 삼척 도계) 착공식 개최	· 상반기 사업설명회
2분기	· 건설공사 착공(5개소) - 태백 황지, 정선 남면, 강릉 입암, 화천 신읍, 삼척 도계	· 도-시군 실무협의 · 상반기 공모사업 검토 및 신청 (입지, 수요 등 타당성 검토)
3분기	· (홍천 북방)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27년 신규사업 선정(2개소 이상)	· 하반기 사업설명회
4분기	· (평창 대관령) 사업계획 승인	· 도-시군 실무협의 · 하반기 공모사업 검토 및 신청 (입지, 수요 등 타당성 검토)

□ 홍보계획

○ 언론사, 방송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 신규사업 선정 등에 따른 도내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홍보

5-5 소아환자 야간진료 운영 활성화(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주관부서	공공의료과	협조기관/부서	3개 시군 및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담당자	정영주 주무관	연락처	033-249-2145

□ 추진배경

○ 초저출생 심화에도 불구하고 소아의료 수요는 지속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등으로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심화

* 도내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5개소(홍천·평창·화천·양구·인제)

○ 소아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쏠림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이용 곤란

○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 외래 진료 확대**를 통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 편의성 제고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추진방향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23. 2. 보건복지부)

- (비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 (추진과제)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완화)

***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및 운영 추진('24년~)**

○ 취약지-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 확대방안 발표('26. 4. 보건복지부)

- (국정과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달빛어린이병원 미 지정 시군 대상 지정 추진('26년~)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기반 마련**

□ 세부 추진사항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24년~)**

- 지원기준: 응급의료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사업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보조금), 야간 수가 지원

* 수가청구: 지정된 요일·시간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약국)

- 지정절차: (신청) 의료기관 → (심사) 시군 → (지정) 도 → (보고) 복지부·심평원·국중원

- 지정현황: 총 3개소(춘천 1, 원주 1, 강릉 1)

시군	의료기관명	지정기간		운영시간	운영비
춘천	우리소아과 의원	최초	'24 4. 1. ~ '26. 3. 31.	토 09~21시, 일·공휴일 09~18시 (일부요일 운영)	- (수가만 적용)
		재지정 (완료)	**'26 4. 1. ~ '28. 3. 31.**		
원주	우리들 소아청소년과의원	최초	'24. 4. 6. ~ '26. 4. 5.	평일 18~23시, 토·일·공휴일 09~18시 (일반 운영)	160백만원
		재지정 (완료)	**'26 4. 6. ~ '28. 4. 5.**		
강릉	아이앤맘 소아청소년과의원	최초	'25. 5. 1. ~ '27. 4. 30.	토·일·공휴일 09~18시 (일부요일 운영)	75백만원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26년~)**

- 사업기간: 2026년 4월 ~ 12월 ※ 추후 연례반복 가능
- 사업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 시·군·구 당 최대 1개소 선정 / 강원 공모 신청: 3개소(태백, 속초, 영월)

- 사업내용: 의료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원(야간·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

※ 지자체 유사 사업 통합 운영(도 자체사업 의료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 보강) 연계

- 선정절차: 의료기관 및 지자체 참여 신청 → 선정위원회(복지부) 심사
- 최종선정: 총 3개소(태백 1, 속초 1, 영월 1)

시군	구분	의료기관명	운영시간	운영월
태백	종합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월~금) 18~23시	'26. 4월~
속초	종합병원	속초의료원	(월·수·목) 18~23시 (화, 금) 18~20시	'26. 4월~
영월	종합병원	영월의료원	(월~금) 18~23시	'26. 4월~

* 기존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사업(도비) → **국비 사업으로 전환('26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3개소 이상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3개소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소아 경증외래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이용 불편 및 진료 공백 발생 •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로 응급실 과밀화 및 중증응급환자 진료 지연 우려 •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지역 소아 진료 접근성 격차 상존	• 소아 경증환자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 • 소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부담 완화 →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기반 구축·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아진료 체계 확립

□ '26년 소요예산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35백만 원
(응급의료기금 118, 도 35, 시군 82)

* 운영형태·운영시간·소아 인구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안): 900백만 원
(응급의료기금 180, 지방비 720)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사업 추진상 역할
보건복지부	사업운영 지침 마련 및 운영비 예산 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야간진료(조제)관리료 기준 제정 및 수가 지급 * 달빛어린이병원에 한함
강원특별자치도청	선정 여부 결정 및 지정 현황 보고·관리
시군 보건소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모니터링(점검)
의료기관	사업 신청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
협력약국	의료기관 야간휴일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 추진일정

○ 연중 소아 야간·휴일 진료 상시 운영

○ 분기별 운영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상시)

○ 연말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정산보고 등

5-6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주관부처/부서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협조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고담슬 주무관	연락처	033-249-2706

□ 추진배경

○ 농촌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나, 관련 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부족**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 '23): 농촌 25.7% / **강원 25.3%** / 전국 18.6%

** (강원) 의료기관 수('25.12월): 군 313개소(17.8%), 시 1,441(82.1%)

☞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어촌 구현)** 의료, 돌봄, 식품 등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주민들은 생활서비스 중 **보건·의료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낮음***('24년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농진청)

* 만족도 조사 결과 보건의료 중요도는 85.9점이나, 만족도는 49.7점에 불과

○ 농촌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도입('24~)

- 서비스 내용: 양방 또는 한방, 치과 치료, 구강검사, 검안, 근골격계 질환 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 대상지역: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하며, **농촌 지역** 중 병의원이 없거나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을 우선 선정

- 운영현황: 매년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수 확대 중

* ('24년) 3개소 → ('25년) 19개소 → ('26년) 32개소

○ '26년은 대상지역, 수혜자 수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반영***

* (강원) ('25년) 19개소, 648백만원 → ('26년) 32개소, 996백만원(348 증)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농촌 왕진버스 사업
- 사업대상: 12개 시군(32개소)

  * 춘천(2), 원주(1), 강릉(3), 삼척(3), 홍천(4), 횡성(5), 영월(2), 정선(1), 철원(6), 인제(1), 고성(2), 양양(2)

- 사 업 비: 996백만 원(국비 398, 지방비 299, 농협자부담 299)
- 주요내용: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도내 거점 의료기관이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농촌 지역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기회가 부족함	○ 농촌왕진버스 순회 운영을 통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기초의료서비스 지원 및 수혜 혜택 편중 해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도내 농촌 지역의 의료 혜택 부족으로 농촌주민 기초 의료 지식 부족	○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통한 기초검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주민 건강증진 도모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996백만 원(국비 398, 시군비 299, 농협 자부담 299)

- 지원기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개소당 24~36백만원

□ 추진체계

○ 농촌 왕진버스 추진체계

▪ 추진체계

- 참여 병의원 모집**(농협중앙회)** ⇨ 협약체결**(농협·참여병의원)** ⇨ 시행**(시군·농협)** ⇨ 왕진버스 순회**(협력병원)**

□ 추진일정

○ 사업 공모 신청접수('25. 9월) → 공모선정('25. 12월) → 왕진버스 운행('26.4.~11월) → 사업추진점검(6월, 12월) → 사업정산('27. 1월)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농협 등 안내: 연중

5-7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운영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25개 기관(도, 18개 시군, 유관기관 6개)
담당자	이경아 주무관	연락처	033-249-3005

□ 추진배경

○ 전국 최초의 **광역형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및 운영**

- **(CCTV연계)** 도·시군 및 유관기관[25개]의 **CCTV 영상정보**[29,685대] **통합**
- **(도시안전서비스)** 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기관**[115개]에 **CCTV 영상 실시간 지원** 및 **특화서비스 제공**

<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운영 개요 >

◦ 운영기간: '20. 7. 1. ~ 계속

◦ CCTV 연계 현황: 25개 기관 29,685대(도·시군 26,600, 유관기관 3,085) *'26.3월 말 기준

– 도·18시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강대해양연구소, 산림청(동부·북부)

◦ 활용기관: 115개 기관

– 도 및 18개 시군,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군부대, 행안부, 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방송국(KBS, G1) 등

◦ 서비스 종류: CCTV 영상 실시간 지원, CCTV 영상 특화 서비스

CCTV 영상 실시간 지원	① 긴급출동지원, ② 전자발찌 위치추적 지원, ③ 군부대 영상 지원, ④ 재난상황 대응 지원
CCTV 영상 특화서비스	① 문제차량검색 지원, ② AI 해양안전 지원, ③ AI 실종자 추적 지원, ④ AI 산불 조기감지 지원

○ 재난 등 각종 사고 대응 및 안전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연계** 및 **확충 지속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근거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25.7.8.개정)

** 국정과제 72·73 관련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AI·CCTV 등 활용 과학적 재난관리)

□ 세부 추진사항

○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19. 6월 ~ ‘20. 6월

○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21. 9월

○ AI 기반 CCTV 특화서비스 구축 및 운영: ‘22. ~ 계속

- AI 해양안전 지원시스템 연계(삼척·고성·양양, 7지방어항): ‘22. 10월 ~
- AI 실종자 추적 지원 서비스: ‘24. 8월 ~
- AI 산불 조기감지 서비스(산불방지센터·시군, 산불CCTV 220대): ’24. 12월 ~

○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현장영상 지원 고도화: ’25. 12월 ~

- 소방차량 및 산불헬기 등 현장영상 248대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연계

○ 도 산하 CCTV 연계 및 도로관리사업소 터널 CCTV 개선: ‘26. 2 ~ 5월

- (CCTV연계) 56개소 501대, (CCTV개선) 6개 터널(24대 설치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도·시군·유관기관 등 CCTV **연계 확대**를 통한 **도시안전서비스 강화**

- 유관기관 CCTV 연계 및 국민 안전기관 도시안전서비스 제공 확대

○ **지방도 및 터널 내** 교통사고, 폭설 등 긴급상황 대비 **CCTV 개선 추진**

- 터널 내 CCTV 개선 및 지소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광역형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 긴급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 기관에서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영상 확인	• 긴급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 기관에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실시간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 **도 산하 CCTV 연계**	
• 도 산하 56개소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연계 부재에 따라 국민안전 기관에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 어려움	• 도 산하 56개소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CCTV영상을 실시간 파악하여 신속한 대응
▢ **도로관리사업소 터널 CCTV 개선**	
• CCTV가 없거나 노후화된 터널에서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 파악이 어려움	• 터널 내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조치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751백만원(도비 441, 특교세 310)

-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364백만원
- 스마트강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 77백만원
- 도 산하 CCTV 연계 및 도로관리사업소 터널 개선 사업: 310백만원

□ 추진체계

○ **(강원특별자치도)** 광역형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 CCTV 통합·연계,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운영 등
- 도(부서·사업소) 및 18시군, 유관기관 간 업무 조율

○ **(18개 시군)**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지원, 소방·경찰 등 신고 이벤트 발생 시 지자체 집중 모니터링 대응

○ **(CCTV연계기관*)** 기관별 구축·운영 중인 도내 CCTV 정보 제공 및 연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강대해양연구소, 산림청(동부·북부)

○ **(도시안전서비스 활용기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실시간 영상 지원 및 CCTV 특화서비스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 지원

□ 추진일정

○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운영: ‘20. 7월 ~ 계속

- 25개 기관 CCTV 29,685대 연계, 115개 기관 활용

○ 도 산하 CCTV 연계 및 도로관리사업소 터널 CCTV 개선 사업 추진: ’26. 2~5월

- CCTV 연계를 위한 물품 납품 및 현장 설치: ‘26. 4월
- CCTV 설치 완료 후 시범 운영 및 운영자 교육: ’26. 5월

○ 경찰 재난대응 관련 도시안전서비스 지원 추진: ‘26. 4월 ~6월

- 경찰 CCTV 영상 제공 방법 등 관련 강원경찰청 업무협의: ’26. 4월
- 경찰 재난 대응 관련 도시안전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26. 5월
- 경찰 재난 대응 관련 도시안전서비스 운영: ’26. 6월~

5-8 청년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주관부서	일자리청년과	협조기관/부서	경제진흥원 일자리부
담당자	박혜영 주무관	연락처	033-249-4335

□ 추진배경

○ 도내 미취업 청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자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사업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사업대상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 400명**

○ 시행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재)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 예　　산 : 1,330,000천원(운영비 130,000 , 지원비 1,200,000)

○ 추진상황

- 「국민취업지원 제도 시행」(2021.1월, 고용노동부)로 인해 지원조건 변경 및 대상인원을 감축하는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 민선8기 공약을 통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개정(2023.12.29.)에 따른 **청년연령기준 상향** 적용(18~39세 이하 → 18~45세 이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도내 미취업 청년 400명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경제적 부담 증가 및 아르바이트 의존도 증가 • 지역청년인구 전출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 집중환경 조성 •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유도 (취업 성공금의 지원) • 지역안착 유도 및 지역 내 소비촉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등) 및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지원 등)

<지침 개정계획>

○ '27년 취업청년준비 쿠폰 지침수립시 주요 지원내용 개정계획

□ '26년 소요예산

○ 1,330,000천 원

- 구직활동 지원금 : 400명 × 6개월 × 500천 원 = 1,200,000천 원
- 사업운영비 = 130,000천 원

※ 위탁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55,000천 원, 홍보 및 광고비 50,000천 원
사무관리비(프로그램 운영, 회계검증 등) 20,000천 원
사례발굴 지원 및 만족도 조사 4,500천 원
국내여비 500천 원

□ 추진체계

단 계	수행방법	추진주체
계획수립	운영계획 및 업무지침 수립	도
업무위탁 및 협약체결	업무 위탁 및 수탁 협약체결 사업비 신청 및 교부	도, 경제진흥원
사업공고	사업공고 실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	경제진흥원
신청자모집	신청 전 사전 자격요건 확인	경제진흥원
요건 확인 후 최종선정	자격요건 확인 후 적합자 선정 선발 공고 및 선정자 통보	경제진흥원
예비교육	선정자 예비교육 실시 및 복지몰 가입안내	경제진흥원, 협력기관
예산지원	강원청년카드 발급 및 포인트 배정	경제진흥원, 협력기관
사업비 정산 및 평가분석	사업비 정산 및 실적(취업 등) 평가 사업전반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도, 경제진흥원

□ 추진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취업성공금 지급
'26.2월	'26.3월~4월	'26.5월~10월	~'26.12월

□ 홍보계획

○ (온라인) SNS, 배너 광고 활용

- SNS : 카드뉴스 등 이미지 게시등(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배너광고 : 카카오톡, 당근마켓 등

○ (오프라인) 지역방송사, 버스광고, 옥외전광판 광고 활용

- 버스광고 : 시내버스 내·외부 이미지 게시
- 옥외전광판 : 영상광고
- 지역방송사 : 라디오 음원, TV 스크롤
- 현수막 : 18개 시·군 게첨대 현수막 게시

5-9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6개 시군,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정순주 주무관	연락처	033-249-3973

□ 추진배경

○ 기구축 경로당에 대한 이용 만족도와 참여 수요 요구로 확대

- 경로당이 단순 여가공간 → 소통·건강 기반 플랫폼으로 기능 확장

※ '25년 3개 시군(춘천·원주·홍천) → '26년 6개 시군 확대(횡성·영월·정선 추가)

○ 초고령 사회 대응한 고령층 일상 영역의 디지털 전환 대응 필요

- 고령층의 정보 단절·사회적 고립·건강취약은 지역 필수 대응과제

○ 농·산·어촌·고령화 비중이 높은 강원자치도에 적합한 모델 구축 필요

- 경로당은 복지·건강·디지털 서비스를 가장 가까이 체감하는 거점

○ AI디지털 배움터·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 가능

- 단일 사업이 아닌 복지·건강·디지털 통합 모델로 확장 가능성 확보

□ 세부 추진사항

○ **비대면 여가교육 화상장비 및 플랫폼 구축 (162개소)**

- 단순 강의 시청 중심이 아닌 참여형·소통형 비대면 플랫폼 구축
- HW 기반 경로당 특화 양방향 화상장비 설치

⇨ **경로당 간 연결을 통한 공동 여가·학습 환경 조성**

○ **여가복지 특별프로그램 운영('25. 66개소 + '26년 162개소)**

- 비대면 강사 배치·운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시범수업 프로그램 운영
- 흥미 유발형 콘텐츠로 참여율·만족도·기대감 제고

⇨ **"강의만 보는 화면"이 아닌 경로당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 플랫폼으로 확장**

○ **건강관리 장비 및 플랫폼 구축 (162개소)**

- 기존 만성질환 관리 중심에서 근감소증 기반 노쇠 예방 모델로 고도화

- 혈압계·체성분계·악력계·신체활동 측정기 등 건강측정 장비 구축

⇨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 중심의 지역 보건 패러다임 전환**

○ **건강정보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25년 66개소 + '26년 162개소)**

- 경로당 매니저 지도하에 주 1회 이상 건강 측정 문화 정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민감정보 동의 기반 운영체계 구축

⇨ **건강데이터가 실제 상담·예방·관리 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026년 스마트 경로당 6개 시군 162개소 구축 확대
- 경로당 중심의 여가·건강·디지털 교육이 연계된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 근감소증의 건강관리 체계 도입 → 고령층 건강예방관리 기반 마련
- 화상 플랫폼 기반 경로당 간 교류 활성화 → 사회적 고립 완화

○ 기대효과

구 분	시행 전 (AS-IS)	시행 후 (TO-BE)
경로당 기능	• 단순 여가·휴식 공간 중심	• 여가·건강·디지털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플랫폼
여가 프로그램	• 대면 중심·강사 의존 구조	• 화상 기반 참여형·양방향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간 교류	• 개별 경로당 단위 운영	• 시군 간 연결형 공동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방식	• 개인 자율 관리 중심	• 정기 측정 기반 건강관리 습관 형성
건강관리 수준	• 만성질환 사후 관리 중심	• 근감소증 예방 중심 사전 관리 체계
건강데이터 활용	• 단순 측정 또는 기록 수준	• 데이터 기반 상담·예방·관리 서비스 연계
정책 연계	• 개별 사업 단위 추진	• 디지털배움터·노인일자리 등 연계 운영
정책 효과	• 단편적 서비스 제공	• 복지·건강·디지털 통합 서비스 제공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관련 업무지침 마련

- 디지털 장비 운영 및 관리 기준 정비
- 건강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반영
- 스마트 경로당 운영 관리 기준 마련

○ 관련 사업 연계 운영 기준 검토

- AI디지털 배움터 연계 교육 운영 기준 마련
-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운영 기준 검토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80억 원 (국비 126, 도비 16.2, 시군비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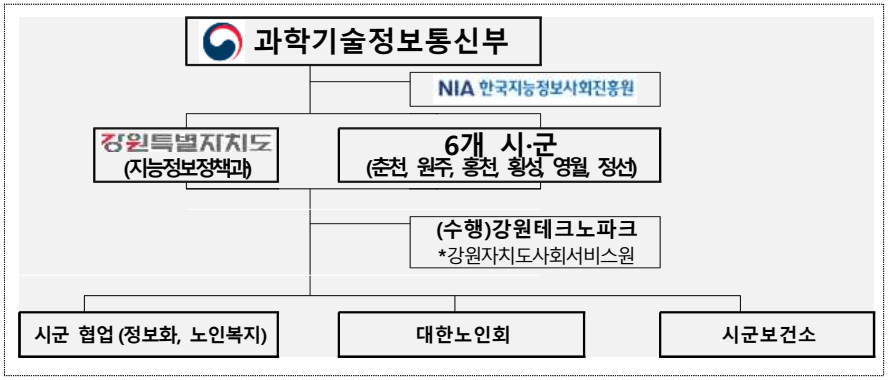
- '26년 사업비 : 40억 원 (국비 28, 도비 3.62, 시군비 8.4)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구 분	합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합 계	180.0	20.0	**40.0**	40.0	40.0	40.0
국 비	126.0	14.0	**28.0**	28.0	28.0	28.0
도 비	16.2	1.8	**3.6**	3.6	3.6	3.6
시·군비	37.8	4.2	**8.4**	8.4	8.4	8.4

□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 사업 추진 전략 스마트 경로당 총괄 관리
(전담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스마트 경로당 총괄 사업 적정성 검토 ▪ 사업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주관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스마트 경로당 사업 총괄 운영 ▪ 재원 확보 및 유관기관(대한노인회, 복지관 등) 협력 등 ▪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기본 계획 수립
(참여지자체)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정선)	▪ 경로당 수요조사 및 스마트 경로당 구축 ▪ 사업 수행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 관련부서 협업체계 구축
(수행기관) 강원테크노파크	▪ 스마트 경로당 인프라 구축 ▪ 서비스 개발 및 구축 ▪ 여가·복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 추진일정

○ ’26년 사업 추진 계획 공유(道 → 6개 시군) : ‘26. 1월

○ ’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道 ↔ 6개시군 ↔ 강원TP) : ’26. 2월

○ 관계부서·기관 간 실행 로드맵 및 역할 분담 협의 : ‘26. 2월중

※ 道 지능정보정책과·노인복지과(통합돌봄TF팀), 사회서비스원, 강원테크노파크

○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및 플랫폼 구축 용역사 선정 추진 : ~ ’26. 3월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 ~ ’26. 12월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사업 추진성과 홍보

○ 시군 협조를 통한 지역 홍보 강화

○ 경로당 이용자 참여 사례 발굴 및 확산

○ 화상 기반 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 **“어르신이 즐거워야 진짜 디지털” 체감형 정책 사례 확산**

5-10 건강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 및 환경관리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협조기관/부서	18개 시군
담당자	유철수 주무관	연락처	033-249-3538

□ 추진배경

○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의 비산으로 호흡기질환(폐암 등) 발생 등 도민 건강피해 우려로 생활 속 환경유해물질 관리 필요

- 총물량 82,932동, 기 처리 35,786동, ’26년 계획량 2,081동

○ 법정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이용시설의 환경유해인자(실내공기질) 능동 관리를 통해 포용적 건강관리 공공서비스 구현 필요

※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라돈 등

□ 세부 추진사항

○ 석면슬레이트 제로화를 위한 연차별 정비사업(철거·지붕개량) 지속 추진

- 주택・비주택(축사・창고 등)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2,081동)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394동)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120개소)
- 기준 초과시설 환경개선 컨설팅 및 실내공기질 관리지원(40개소)

※ 단순 측정에 그치지 않고 환기시스템 보완책 강구, 상시 측정기 보급 등으로 관리 지원

○ 유해환경 개선 수혜자 만족도(설문) 조사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 수혜자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차년도 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슬레이트 제거실적(실적/계획), 성과목표 80%
-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및 시설개선 추진율(실적/계획), 성과목표 90%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비산으로 도민 건강피해 우려 및 노후화에 따른 지역 미관 저해	• **(생활환경)**사업 대상지역 석면 슬레이트 제거로 생활 속 환경유해물질 제거, 지역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법적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환경유해인자)의 인식 및 관심도 낮음	• **(안심환경)** 실내공기질 측정부터 컨설팅, 시설관리까지의 지원을 통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 환경망 구축에 기여
	• **(인식개선)**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환경보건 인식 전환 및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자기관리 역량 강화

□ 관련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재정지원)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

□ '26년 소요예산

○ 건강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 및 환경관리 106억원(국 53, 도 10, 시군 43)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05억원(국 53, 도 10, 시군 42)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0.8억원(도 0.2, 시군 0.6)

□ 추진일정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사업공고 및 공사업자 선정('26.1~2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26.3~5월)
- 공사(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추진('26.6~11월)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대상시설 선정 및 사업 추진('26.1~6월)
- 관리시설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 실시('26.7월)
- 관리기준 초과시설 개선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원('26.8~12월)

□ 홍보계획

○ 석면 슬레이트, 실내공기질 내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 관심도 제고, 신청방법·지원비용 등 수요자 중심 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지역소식지,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5-1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주관부서	소상공인과	협조기관/부서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6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카카오)
담당자	홍혜진 주무관	연락처	033-249-3212

□ 추진배경

○ 고물가·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 이자지원(2%) 중심의 금융지원으로 정책 체감도 제한

○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지원은 있으나 적용 기준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실효성 미비

□ 세부 추진사항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 자금규모 : 2,000억 원(상반기 1차 1,500, 하반기 2차 500)
- 사 업 비 : 10,684백만 원(이자지원 7,577, 보증료 2,880, 위탁수수료 227)
- 대출조건 :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5년(일시 또는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지원(2~3%, 2년간), 보증수수료 지원(0.8%, 2년분), 영세 소상공인 우대 금리(0.5%, 은행부담)

○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

- 영세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완화(6천만 원 이하 → 1억 4백만 원 미만)
-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기본 2% + 추가(2자녀 0.5%, 3자녀 이상 1%)
- 전체 소상공인 대상 우대금리 0.3% 지원(전체 은행)

○ **추진상황**

- 출연규모 협의(1월), 업무협약 체결 및 상반기 자금(1,500억 원) 개시(2월)

○ **기관별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계획 총괄	-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다자녀 소상공인 대상 이자 추가지원(2~3%)
강원경제진흥원	이자지원 사업 집행	
강원신용보증재단	심사 · 보증지원	특례보증 지원
금융회사(은행)	신청접수· 대출실행	-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0.5% 지원 - 전체 소상공인 우대금리 0.3% 지원 *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카카오뱅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규모 운영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 전체 소상공인 우대금리 0.3% 지원, 영세 소상공인 기준 완화 및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도입을 통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대출시 2년간 2% 이자지원(도비) •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 적용 기준 제한(연매출 6천만 원 이하)	• 전체 소상공인 대상 우대금리(0.3%) 지원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 • 영세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1억 4백만원 미만) •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도입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 '26년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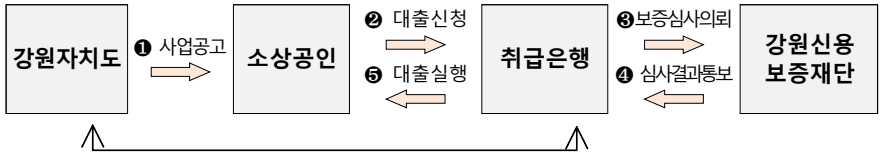
○ 도비 10,684백만 원(이자지원 7,577, 보증료 2,880, 위탁수수료 227)

- (道→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29억 원) 지원
- (道→강원경제진흥원) 이자(76억 원) 지원업무 위탁(수수료 2억 원)

* (강원경제진흥원→참여 은행) 대출자금 규모에 따른 분기별 이자지원

□ 추진체계

○ 지원체계



❻ (기본·영세 소상공인)이자지원 금액 신청 및 지원(은행←도·경제진흥원, 분기별)
❻-1 (다자녀 소상공인)이자 추가지원(대상자 → 경제진흥원 신청 / 경제진흥원 → 대상자 지급, 분기별)

□ 추진일정

○ 협약 관련 은행사별 준법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 : 2026. 1.

○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2026. 2. 2.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반기 자금개시(1,500억 원) : 2026. 2. 9.~

○ 하반기 자금개시(500억 원) : 2026. 7~

○ '27년 은행별 출연규모 확정 및 차년도 사업 자금 개시일 협의 : 2026. 10.

□ 홍보계획

○ 도·시군 누리집 공고게시, 강원신보 및 참여은행(6) 상품홍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회 공문 발송 등

5-12 모두를 위한 하천과 계곡, 공공의 가치를 세우다!

주관부서	하천과	협조기관/부서	도 관계부서 / 18개 시군
담당자	고동현 주무관	연락처	033-249-3491

□ 추진배경

○ 하천과 계곡의 관행적 불법 점유 종식과 공공성 회복

- 사유화된 공공자원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고착화된 불법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 질서 확립

* 불법 시설물(평상, 천막 등), 무단 경작, 영업 행위 등

※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26.2.24) 및 정부 정책 병행 추진

-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자원의 본래 가치 회복

○ 기후 위기 대응 및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수해 위험 요인 선제적 정비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청정 강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질서 위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의 토대 마련

□ 세부 추진사항

○ 강력한 추진 동력 확보 : 기관별 역할 분담 및 TF 가동

- 도·시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강원 하천·계곡 정비 추진단' 운영
- 도 총괄 부서(하천과 중심), 협업부서(산림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자연생태과)
- 시군은 분야별(환경·건설·산림·건축·위생부서 등) 참여

○ 정밀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화

- (전수조사) 도·시군 합동 점검을 통한 불법시설 실태 파악 및 관리대장 관리
- (체계적 DB 관리) 불법시설 유형·위치·규모의 이력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계별 조치

- (단계별 정비) ❶자진 철거 유도 → ❷행정명령 → ❸행정대집행의 이행
- (실효성 강화) 반복 위반자 집중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 재해예방을 위한 ‘집중 정비기간’ 운영
- (시기별 집중단속) 우기 전·후 등 연 2회 이상 점검
- (위험지역 우선 관리) 피해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정비

○ 도민 중심 거버넌스 : 주민 참여형 감시·소통 체계 구축
- 주민 신고센터 운영, 상시 접수 체계 마련(안전신문고 활용)
  *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 검토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정례화

○ 실효적 갈등관리 : 현장 대응력 강화 및 맞춤형 해결책 강구
- 주요 민원 현장 방문 및 직접 소통 확대
-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갈등 조정 병행 추진
- 자율 정비 유도 및 지역 맞춤형 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불법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80% 이상 정비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사후 단속 중심 대응 • 반복적 불법 점유 및 악순환 발생 • 주민 갈등 및 민원 증가 • 기관·부서별 분산 대응	• 선제적 예방 및 정기 점검 체계 • 지속 관리로 재발 원천 차단 •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및 협력 관리 • 통합 TF 기반의 신속·강력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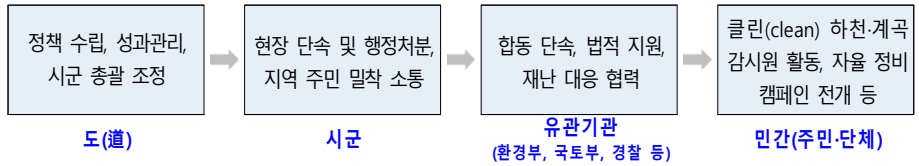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개정 사항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집중 정비 및 기반 구축
- 2026. 3월 : TF 구성 및 운영 *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대상 확정
- 2026. 4~6월 : 불법 점용시설 우기전 집중단속 및 자진 철거 계도

○ 성과 확산 및 환류
- 2026. 7~8월 : 1차 집중 정비기간 운영
- 2026. 9월 : 중간 점검 및 보완
- 2026. 10~11월 : 2차 정비 및 사후관리
- 2026. 12월 : 성과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 홍보계획

○ (전략) 법 집행 안내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가치 중심적 설득
- ‘깨끗한 하천·계곡 만들기 주민 참여 캠페인’ 추진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강원 청정 하천·계곡 브랜드화

○ (추진 방법)

구분	홍보 내용	맞춤형 홍보 매체
인식 개선	하천 사유화의 위법성 및 환경·재난 위험성 안내	지역 언론(기획 보도), TV 공익 광고, SNS 카드뉴스
실행 안내	자진 철거 기간 및 행정 지원책, 법적 처벌 수위 고지	마을 방송, 현수막, 개별 문자 발송, 리플릿
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취지 설명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현장 소통 캠페인
참여 확산	정비 전·후 비교(Before & After) 및 우수사례 전파	도·시군 홈페이지(전용 페이지) 등

5-13 위치기반 정전 알림 서비스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협조기관/부서	안전정책과(재난안전상황실), 각 시·군
담당자	이찬수 주무관	연락처	033-249-2960

□ 추진배경

○ 정전 발생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 한전 내부 시스템 이용 문자발송 시 세대주에게만 정전 안내 발송

* 현재 한전 CBS(재난문자발송 시스템)사용은 **대규모 정전 발생시**에만 가능

○ 지자체 협업을 통한 주민 알권리 보장 필요

- 정전 원인, 복구 예정 시간 안내를 통한 정전지역 주민불편 최소화

□ 세부 추진사항

○ 한전 → 지자체 요청시 정전 발생지역내 위치기반 재난알림문자발송

- 중대한 정전* 발생시 해당 시·군 또는 도청에 문자발송 요청

* 1,000호 + 1시간 이상 정전 추정시, 4,000호 + 5분 이상 정전시

** 단일 시·군내 정전 발생시 해당 시·군에서 발송, 2개 이상 시·군 동시 정전 발생시 도에서 발송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중대한 정전 발생시 해당 건물의 세대주에게만 정전알림 문자 수신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제한 및 불편 초래 • 정전 관련 정보 미전파로 인한 민원 응대 품질 저하	• 정확한 상황 전파로 인한 정전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및 행정 신뢰성 제고

□ 추진체계

○ 한국전력공사 - 정전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중대한 정전 발생 관련 문자발송요청(→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 한전 요청시, 해당 정전지역에 위치기반 재난 알림문자(CBS) 발송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별표1](발송기준)

- 사회재난, 전력, <전력계통고장 정전 시> 항목에 “중대한 정전” 포함

5-14 일상돌봄으로 생활복지 안전망 강화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기관/부서	보건복지부 18개 시군
담당자	신승욱 주무관	연락처	033-249-2419

□ 추진배경

○ 1인 가구 증가·고령화 현상 심화와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증가로 고독사 및 일상생활 돌봄 필요 대상 증가

○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를 구축하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일상돌봄 제공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일상돌봄 서비스

○ 사업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만13~64세), 가족돌봄청년(만39세 이하)

○ 사업내용: 기본서비스(돌봄·가사),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간병 등) 제공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 납부

※ 기초생계수급자, 타 바우처 사업대상자(국민마음건강지원 등) 중복지원 가능

〈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3종)	특화 서비스(10종)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면 제	5%
120% 이하	10%	15%
120~160%	25%	30%
160% 초과	100%	100%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수행 시군 확대(18개 시군)
-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인원 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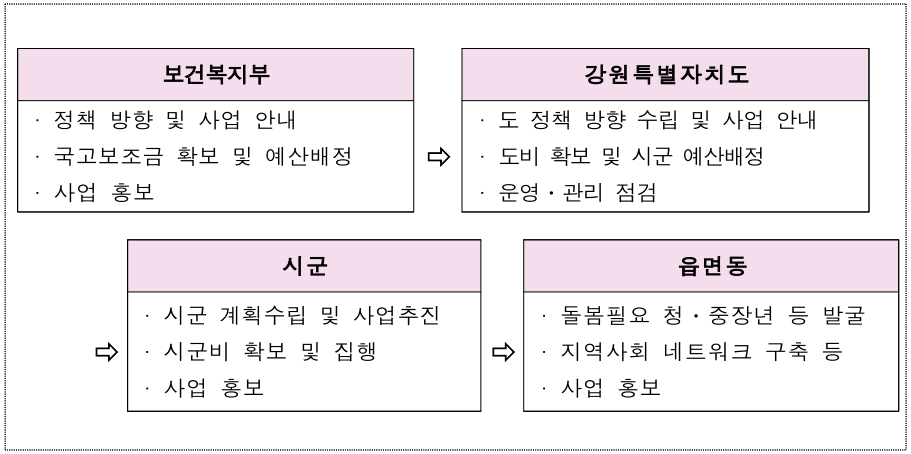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접근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관계망 형성 기회 부족	•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26년 소요예산

○ 사업예산: 2,269백만 원(국 1,626, 도 329, 시군 314)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 연중

- '26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보건복지부) : 2~3월
- 시군 사업수행기관 선정(3~4월), 시군·유관기관 업무담당자 교육(4월)
- 사업홍보(포스터, 리플릿 등), 대상자 모집 및 사업추진(연중)

□ 홍보계획

○ 사업의 이해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 추진 시기: 2월 ~ 12월

○ 추진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오프라인: 사업 안내 리플렛, 지침 배포

5-15 사회적 고립 해소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기관/부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연구원, 사회서비스원, 18개 시군
담당자	위충성 주무관	연락처	033-249-3697

□ 추진배경

○ 도내 사회적 고독 및 고립 위험군은 약 10만명 추정

- 고령 1인 가구 97천명*

* (고령 1인 가구) 65세 이상 독립생활 가구 97천 가구['24년 국가데이터처]

- 고립·은둔 청년 16천명*

* (은둔·고립 강원 청년) 전국 19세~34세 54만 명의 3.1%['22년 국조실 조사 추정]

○ 사회적 고독 및 고독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추진

□ 현황(문제점) 진단

○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국민 증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연대 취약자 및 복지 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 사례 지속 발생 →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요인 해소를 통한 **고독사 발생 위험 억제 필요성** 대두

※ 도 1인 가구 : ('20년) 231,371 가구 → ('24년) 277,109 가구 / 45,738 가구 증가 (19.77% 상승)

○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한 돌봄 필요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자립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부재 → **전담조직 통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필요**

○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부재 → **전담조직 통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추진

- 복지부-도-시군 연계 지역 특성별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추진

▷ 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內 인적자원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 사회적고립가구 생활개선지원 등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 고독사 위험자 밀집지역 대상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등 사후관리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개요 >

□ 사업기간 : ’25년 1월 ~ ’25년 12월(1년)

□ 사업추진 : 복지부-도-18개 시군 연계

□ 사업내용 : 4개 유형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사업 수행

사업유형	사업내용
안부확인	▪ **(인적 자원망 활용)**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등 활용하여 대면·비대면(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ICT 활용)** AI,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 **(생활환경 개선)** 저장강박, 낙상 등 고독사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 ▪ **(생활행태 개선)** - 고독사 위험자 발굴조사 및 안부확인용 소액 현물지원(도시락 등) - 고독사 위험자의 외출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쿠폰 지급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공간 운영)** 고독사 위험자가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또는 여타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 **(유품정리·특수청소)**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및 강원형 진단 기준표 개발

▷ (조사기간)’26. 1.~ 9. (조사대상)도내 18세 이상 1인 가구(1,500가구 내외)
(조사방법)온라인 설문 및 고위험군 대면조사 병행 [여가원]

○ 위기 아동·청년 전담 지원 사업 추진

- 복지부-도-전담조직 연계 강원 맞춤형 위기 아동·청년 전담지원

-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연령, 규모, 원인, 기간 등 심층조사)

▷ (조사기간)’26. 3.~11. (조사대상)도내 고립·은둔 청년(300명 이상) (조사방법)대면조사[여가원]

< 위기 아동·청년지원 전담지원(안) 개요 >

□ 추진일정

추진계획 수립 및 위탁심의**(4~5월)** ⇨ 지자체 선정 및 청년미래센터 지정**(5월)**

⇨ 센터 공간 확보, 리모델링, 전담인력 채용, 교육**(~8월)** ⇨ 청년미래센터 개소**(9월)**

□ 사업개요(안)

-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운영
- 운영기관(수탁):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조율중)
- 운영장소: 춘천 시내(아동·청년 접근성 유리한 지역, 수탁기관과 협의 결정)
- 사업기간: 2026. 9. ~ 2029. 8.(3년)
- 위탁업무: 청년미래센터 운영 1식(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지원 업무 일체)
- 인 력: 15명(센터장 이하 2팀 구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 • 시군별 맞춤형 사업 부족	•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 시군 주도형 맞춤형 사업 발굴(3건 이상)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부재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100명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심층 관리 부재 • 시군별 맞춤형 사업 부족	• 고독사 위험군 관리를 통한 고독사 예방 • 시군 주도형 사업관리로 고독사 예방 효과 증대
•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 맞춤현 지원 부재 • 고립은둔 청년 지원 부재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선제적 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개정 예정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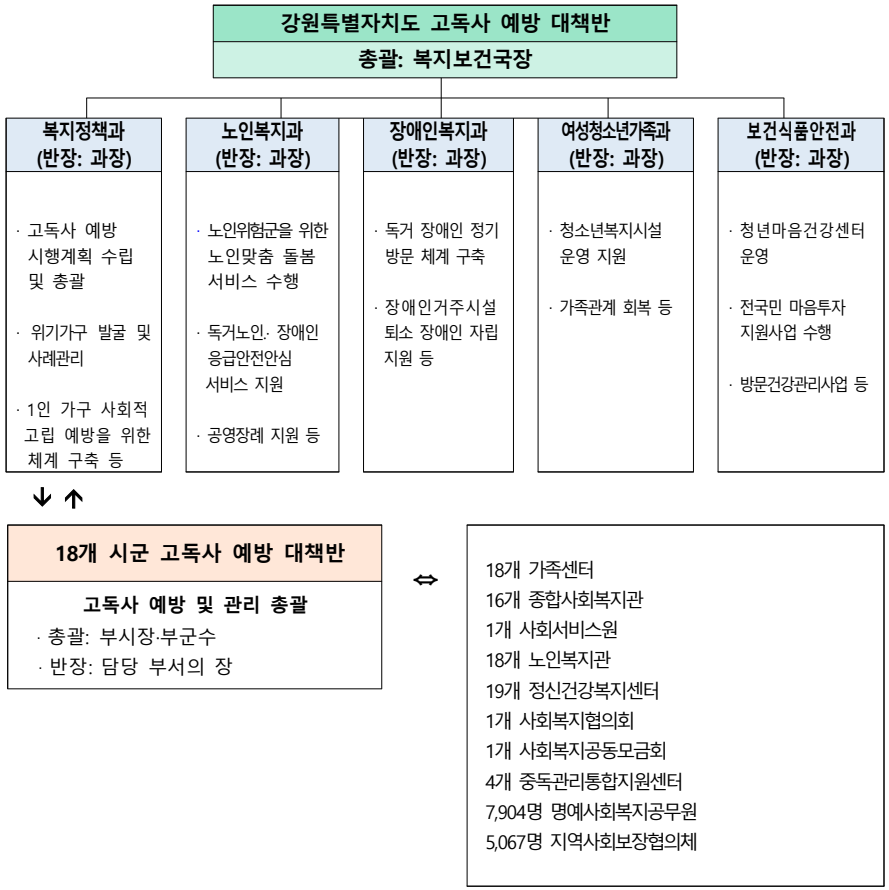
□ '26년 소요예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990백만 원(국 495, 도 297, 시군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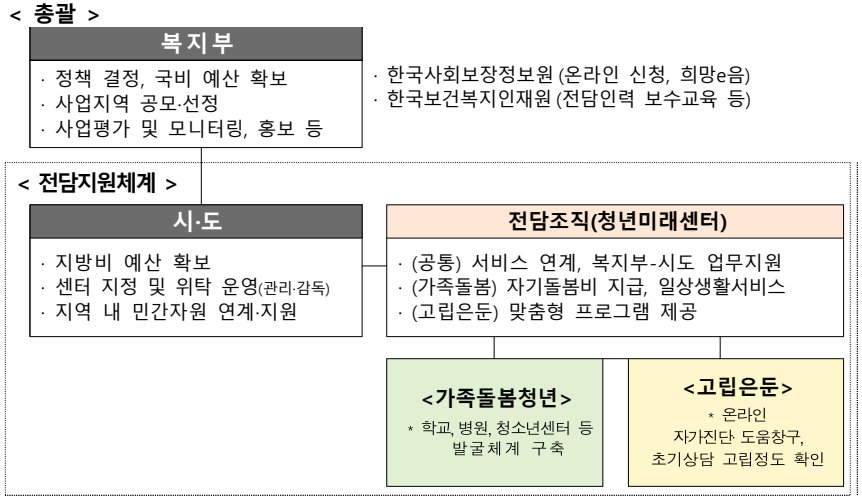
○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안) : 782백만 원(국 337, 도 445)

□ 추진체계

○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추진



○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담지원 사업



□ 추진일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 연중
- '26년 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 1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연찬회 및 홍보추진 : 2회(상·하반기)
- 타 지자체 우수사례 시군 공유 및 제안 : 연중

○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담지원 사업
- '26년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담지원 사업계획 수립 : 4~5월
- 위탁 심의 및 도의회 동의, 예산반영 : 6~7월
- 위수탁협약, 공간 조성, 인력 채용 등 개소 준비 : 7~8월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전담조직) 개소 : 9월

□ 홍보계획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담당자 교육 및 현수막·책자 제작 등을 통한 시군별 홍보 추진 : 연중
- 시·군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이·통장회의 자료 송부 : 연중
- 인적안전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료 송부 : 수시

○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담지원 사업
- 보도자료 배포 및 도 및 시군,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홍보: 8~9월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6-1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주관부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	협조기관/부서	18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
담당자	오성진 주무관	연락처	033-249-2311

□ 추진배경

○ 고향사랑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소상공인 경제 활동 지원

○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면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발굴·추진으로 기부의 선순환 체계 마련

□ 세부 추진사항

○ 道-시군-답례품 제공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 현대인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답례품의 발굴 및 개발 독려
- 주요 기관·기업 대상으로, 道-시군 및 답례품 제공업체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기부 활성화

  * 답례품 개발업체 제휴 온·오프라인 홍보, 수도권 지역 박람회 참가(2회) 등

○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효율적 홍보

- 민간플랫폼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자체 고객정보로 잠재기부자들을 정밀 타겟팅**하여 답례품 및 각종 이벤트의 홍보

  *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영 등 유명 제휴사 플랫폼

  ** 한 민간플랫폼은 약 400만 명의 잠재기부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연령·기부 여부 등을 선별하여 홍보 가능함

○ 감동을 주는 기부사업의 발굴·추진 및 홍보

- 기부자의 정서를 고려한 기부사업의 발굴·추진으로 기부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재기부 유도
- 기금사업에 대한 기부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기부자로 하여금 강원도에 대한 실질적·지속적 관계성 형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모금액 150억 원(道 + 시·군)

  * ('23년) 53억 원 → ('24년) 70억 원 → ('25년) 92억 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도-시군 개별 현장홍보 중심 운영으로 확장성에 한계, 일회성 기부에 그침	• 온라인 기반의 홍보로 전환함으로써 전국으로 대상 확대, 관계인구 확보에 기여
• 기금사업이 소규모의 주민지원 사업에 한정됨	• 기금의 비약적 증가로 인프라 개선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해짐

□ '26년 소요예산(道)

○ 소요예산 : 525백만 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비고
합 계		525,385	
고향사랑기금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201-01)	20,000	
	답례품 구입 (201-01)	150,000	
	박람회 홍보관 운영 (201-01)	17,000	
	이벤트 추진에 따른 보상금 (301-14)	15,000	추경 증액
	플랫폼 이용 수수료(201-01)	85,000	추경 편성
	민간플랫폼 이벤트 경품 구입(301-14)	20,000	추경 편성
일반회계	고향사랑 기부제 행사(307-04)	170,000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분담금 (308-13)	18,385	
	고향사랑기부 이벤트(201-01)	30,000	추경 과목변경

□ 추진체계

○ 道-시군 협업

- 道는 각종 현장홍보에서 모객 등을 통해 시군의 모금 활동을 지원 (방문기관 섭외, 박람회 준비 등)

○ 道-시군과 답례품 제공업체 간 협업

- 道와 시군은 인기 답례품에 기반한 홍보계획 및 이벤트 마련
- 답례품 제공업체는 온라인 채널-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해 기부제 홍보

○ 민간플랫폼 협업

-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여 민간플랫폼에 제안
- 민간플랫폼은 광고 시행, 홍보전략 마련, 이벤트(내용・시점) 등을 지자체에 제시

□ 추진일정

○ 주요 답례품 제공업체 홍보 협업(3개~5개) : '26. 3월

○ 도- 시군 합동 현장홍보 : 월 1회

○ 시군 민간플랫폼 도입 독려, 道 도입 추진 : ~'26. 11월

<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

○ **(모금액*)** 761명, 82백만 원

* ('23년) 330백만 원 → ('24년) 456백만 원 → ('25년) 574백만 원

○ **(답례품)** 55개 업체, 85종 답례품 운영 → 25백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기금사업)** 4개 기금사업(1,138백만 원) 추진 ※ '26년 첫 추진

※ **강원지역 모금실적 : 970백만원**(3월 현재)

- **삼척** 95, **강릉** 94, **고성** 78, **속초** 70, **양구** 65, **횡성** 63, **도청** 등)

6-2 지역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주민참여 확대

주관부서	접경지역과	협조기관/부서	도내 시·군, 국방부·군부대, 민간
담당자	김수현 주무관	연락처	033-249-2283

□ 추진배경

○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2020년~현재)

-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최소화 및 평화지역과 軍의 상생협력 도모
- 접경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軍 간 총 143안건* 협의

* 긍정 72, 추가검토 50, 불가 21/ 추진중(26건) 안건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중

○ **접경지역 중심으로 운영되어 협력범위 제한적**

- 전체 시군을 포괄하지 못하고 민간 참여가 부족하여 정책 수용성과 실효성이 저하되는 한계 존재
- 최근 민·관·군 간 협력 수요 증가 및 갈등 구조 복합화로 통합적 협력 거버너스 구축 필요성 증대
- 「강원특별법」 개정(3차*)에 따라 민·관·군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강원특별법」(제73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26. 3. 31. 본회의 의결)

⇨ **도 전체(18개 시군)를 아우르는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협력체계 확대)** 접경지역 중심 협의체를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 개편

○ **(위원회 구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

○ **(협의기능 강화)** 군사규제 개선, 미활용군용지 활용, 민·관·군 갈등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 수행

○ **(운영체계 구축)**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및 필요 시 수시회의 운영

○ **(현장소통 강화)** 주민대표 민간인 위촉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반영**

○ **(정책연계 강화)** 시·군 건의사항을 도 및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정책 반영 및 환류체계 구축**

○ **(협력사업 발굴) 軍·지자체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강원특별법 제73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 》

목적	강원자치도 내 민·관·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 추진
협의사항	①강원특별법 상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와 군(軍)이 협력하여야 할 사항 ③그 밖에 민관군 상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정수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
공동 위원장	①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강원자치도 부지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 ①강원자치도 내 관할부대의 장 ②관할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강원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도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민관군 협력위원회 구성 가능
회의 개최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
기타	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시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026년내 도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 완료
- 연 2회 이상 정례회의 개최 및 수시회의 운영체계 확립
- 연 5건 이상 민·관·군협력사업 발굴
- 주요 갈등 사안의 50% 이상 해결
- 민간 참여 비율 확대를 통한 정책 참여성 제고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접경 5개 군 중심	•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 확대
• 軍-지자체 중심	• 민·관·군 통합 협력체계
• 사후 개별 대응	• 사전 예방·조정 체계 구축
• 정책 수용성 낮음	• 주민 참여 기반 정책 수용성 향상
• 제한적 사업 발굴	• 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확산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강원특별법」 제73조의2에 따른 민·관·군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반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마련

○ 시군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표준조례 제정

○ 협의사항 범위, 의결 절차 및 운영 기준 구체화

□ '26년 소요예산

○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운영비 등 일부 예산 소요

□ 추진체계

○ 강원특별자치도 : 위원회 총괄 운영 및 정책 조정

○ 국방부 : 군 관련 정책 협의 및 지원

○ 시·군 : 지역 현안 발굴 및 사업 추진

○ 군부대 : 협력사업 참여 및 갈등 조정

○ 민간 : 정책 자문 및 주민 의견 반영

□ 추진일정

○ 2026. 4~7월 : 시행령 및 표준조례 마련

○ 2026. 8~9월 : 위원회 구성 준비

○ 2026. 10~11월 : 위원 공개모집 및 구성 완료

○ 2026. 12월 : 위원회 출범 및 운영 개시

6-3 응급의료 대응 강화 및 공급 사각지대 해소

주관부서	공공의료과	협조기관/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담당자	여원일 주무관	연락처	033-249-2672

□ 추진배경

○ 춘천·원주·강릉 제외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

○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전국 대비 하위권 수준**

- 권역응급의료센터 61.8%로 전국 13위(기준시간 60분)
- 지역응급의료센터 53.6%로 전국 12위(기준시간 30분)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 개선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042백만 원(국비 100%)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구분	개소 수	총예산(백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2	469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1	2,385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2	188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 응급환자 이송 지침 개정 관리
-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활성화(이송병원 선정 기능 강화)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추가 배치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포함) 15개소 운영비 지원

- 응급의료센터 2, 응급의료기관 11개소, 당직의료기관 2개소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 응급환자 이송 지침 개정(1회),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등록관리(응급의료기관 23개소),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인건비 지원(2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축 초기 단계로 체계 개선 필요	• 병원 전 단계 이송 체계 개선으로 협업기관 간 소통 활성화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 개정('26년 하반기)

- 응급환자 이송 지침('24.10월 제정, '25.9월 개정) 현장 의견 수렴, 사례 검토를 통한 지침 개정 지속 추진
- 8대 중증질환 응급의료자원 기반 지역별 응급이송 체계 정비

* 8대 중증질환: 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소아, 분만, 정신, 화상

□ '26년 소요예산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042백만 원(국비 100%)

- 응급의료센터 2개소: 469백만 원
- 응급의료기관 11개소: 2,385백만 원
- 당직의료기관 2개소: 188백만 원

○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 지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2명/개소): 160백만 원(국비 70%, 도비 30%)

6-4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추진

주관부서	농정과	협조기관/부서	도 관계부서 / 시군
담당자	이서원 주무관	연락처	033-249-2138

□ 추진배경

○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제49조)로 지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로 인구감소 대응과 민간투자 촉진 등 농촌활력 창출

□ 세부 추진사항

○ 특례내용: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 도지사에게 위임된 총량(4천ha) 범위 내 면적 해제 가능(3년 한시)

○ 존속기간: 2024. 6. 8. ~ 2027. 6. 7. / (존속기한) 3년

*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이후 시행, 중앙부처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 결정

○ 신청방법: 신청[시군]→농지관리위원회 자문·종합계획심의[도]→지정·고시

○ 추진실적: 20개 지구, 294ha(진흥지역 176ha 해제)

구분		지정개소	지정면적(진흥지역)	위임총량 활용	지정일자
계		20개 지구	294ha(176ha[53만평])	누적 4.5%	
2024	1차	4개 지구(4개 시군)	143ha(61ha [18만평])	1.5%	11. 22.
2025	2차	5개 지구(4개 시군)	70ha(55ha [17만평])	1.4%	4. 11.
	3차	6개 지구(5개 시군)	58ha(46ha [14만평])	1.2%	12. 5.
2026	4차	5개 지구(4개 시군)	23ha(14ha [4만평])	0.4%	4월 말 예정

* 지정시군: 강릉[3], 삼척[1], 홍천[2], 횡성[1], 영월[1], 정선[1], 철원[3], 화천[1], 양구[1], 인제[3], 고성[1], 양양[2]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지구지정) 농촌활력촉진지구 신규발굴·지정 10개소
- (특례존속) 농식품부 성과평가 대응 농지특례 존속기한 연장 도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농지 등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정체 및 민간투자 약화로 인구소멸 가속화 • 중앙정부의 농지해제 등 행정절차로 인한 농촌개발 지연 및 규제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 발생	• 체계적인 농촌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및 지역균형 발전 • 도지사 권한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안정적이고 적기의 민간투자 유치가능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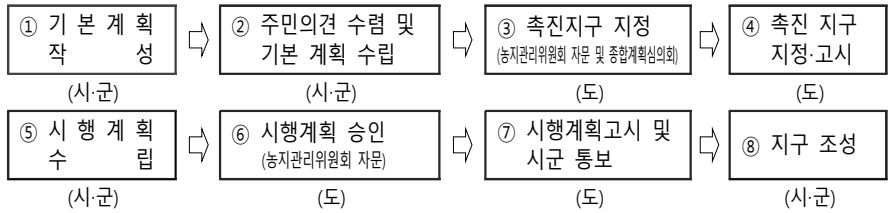
○ 자치법규 개정계획

- (대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개정조항) 제5조(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승인 등)
- (개정사유) 불합리 중첩 규제에 대한 개선

* 기본계획 승인 후, 별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통한 농지해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중복으로 이는 시·군의 개별 인허가 등 착수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 '26년 소요예산: 해당없음(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 추진일정

구 분	세부내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지구 발굴	지구신청 및 승인·고시 등												
시행계획 관리	승인 시군 현장점검 등												
농지특례 활용	시군 모니터링 및 실적DB												
제도홍보	제도설명회, 대외홍보 등												

□ 홍보계획

○ 홍보기간: '26. 1월 ~ 12월 / 수시

○ 홍보내용

연 번	홍보구분	횟 수	비 고
1	유인물(브로셔·가이드북ST)	10,000부 이상	시군 읍면사무소, 농업교육원 등 비치
2	시군 컨설팅	20회(상10, 하10)	시군 현장컨설팅(부서 합동)
3	제도 설명회	10회(자 2, 타 8)	(자) 집합교육, (타) 부서 설명회 등
4	기자 간담회	3회	2 / 3 / 4분기 * 이슈에 따라 변동
5	부 처 협 의	수 시	농식품부 성과평가 협의 등
6	기 타	연 중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

6-5 폐광지역개발기금 활용 지역 균형발전 추진

주관부서	폐광지역지원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신동천 주무관	연락처	033-520-7389

□ 추진배경

○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인구 감소(1988년 44만 명 → 2020년 18만 명) 및 지역경제 침체 심화에 따라 지역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상품 지원을 통한 지역 유입 및 관계인구 형성 기반 마련 필요

○ 개별 시군 중심 관광사업 추진 시 관광객 분산 및 한계 발생에 따른 차별화된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광역 연계 필요

□ 세부 추진사항 (주요내용)

○ (사 업 명)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지원사업

○ (사 업 비) 400백만 원

○ (사업내용) ※사업 추진 중 변경 가능

① 석탄산업전환지역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석탄산업전환지역 연계 관광콘텐츠 구성(선정기준 : 지역 내 청년기업 연계, 체류형 상품 구성 여부 등) 공모를 통한 4개 여행사 모집
- 여행사당 모객 인원에 따른 홍보마케팅 및 팸투어 운영비 지원

② 석탄산업전환지역 연계 스탬프 투어(관광패스) 운영

- 석탄산업전환지역 연계 스토리형 콘텐츠 발굴, 코스 개발
- 발굴 코스 대상 스탬프 투어 제작 및 기념품 증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코스, 콘텐츠, 축제 등 정보제공 페이지 제작

③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 여행 관광상품 및 관광콘텐츠 기업 체험상품 홍보
- SNS 및 정보플랫폼 연계 홍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사업 추진 중 변경 가능

-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 4개사 선정
- 여행사 모객 및 스탬프투어(관광패스) 참여 인원 2,000명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단순 방문형, 경유형 관광 중심 • 당일 방문 위주 • 시군별 개별 관광 운영	• 체류형, 스토리형 관광 중심 전환 • 1박 이상 체류형 관광 정착 • 4개 시군 광역 관광체계 구축

□ 추진일정

분기	추진계획	비고
1분기	○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분기	○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 공모 - 기간 및 규모 : 5월 중, 총 4개사 선정 - 선정기준 :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 협업, 체류형 상품 구성 등 ○ 스탬프투어(관광패스) 콘텐츠 발굴 및 코스 개발 - 스탬프투어(관광패스) 및 기념품 제작 -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 정보페이지 제작	
3~4분기	○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 지원 - 여행사당 모객인원에 따른 사후 지원 - 석탄산업전환지역 상품개발 팸투어 운영 ○ 스탬프투어(관광패스) 추진	

6-6 지역의 힘, 강원산업의 미래! 강원연고산업 육성 프로젝트

주관부서	전략산업과	협조기관/부서	강원테크노파크, 시군 등
담당자	김용해 주무관	연락처	033-249-3483

□ 추진배경

○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특색 있는 지역 산업 고도화 필요**

-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분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강원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원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소멸 대응 및 경제적 자립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주최/주관 : 도, 시군 / (재)강원테크노파크
- 사업규모 : 총 6개 과제(신규 3개 과제 / 계속 3개 과제)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분야 사업화(비R&D) 지원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내 산업여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

□ 지원대상 : 인구감소(89개) 및 관심지역(18개) 등 총 107개 기초지자체

□ 수행주체 : (재)강원테크노파크

- 주관기관은 (재)테크노파크로 일원화하고, 참여기관은 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소, 지자체출자·출연법인 등) 간 컨소시엄하여 과제 추진 가능

□ 지원기관 : 과제당 2년

□ 지원내용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주 요 사업내용	•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도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컨설팅
	•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 획득 지원
	•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sns홍보, 거래망 확보 등)
	•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 해외 바이어 연계 및 해외 거래처 발굴
	• 백화점, 마트 등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 패키지 지원(컨설팅→제품개발→사업화→마케팅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지역별 특화 목표

- 인제·양구(로컬푸드 산업) : 신규 제품 출시 4건, 디자인 개발 2건
- 강릉(세라믹 소재부품) : 시제품 제작 5건, 제품 고급화 5건
- 삼척(수소 산업) : 시제품 제작 5건, 성능시험 인증 2건
- 횡성(식품산업) : 신규 제품 출시 4건, 디자인 개발 5건
- 홍천(천연물·바이오) : 시험분석(효능 등) 4건, 사업화패키지(시제품제작, 인증 등) 5건
- 태백·영월(광물자원) : 시제품 제작 5건, 탄소배출 저감 방안 컨설팅 4건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지역 특화자원의 체계적 활용 미흡으로 부가가치 창출 제한 • 일자리 창출 부족 및 고령화 심화로 지역 활력 저하 및 경제 침체 가속화 • 고령화 심화, 청년층 수도권 이동으로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 특정산업 편중으로 경제 다양성 및 회복력 부족 •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정책으로 시군별 불균형 발전 초래	• 지역 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 • 지역 특화자원 사업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 유입 및 정착유도 •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매출 증대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으로 균형발전 기반 마련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도 향상 및 자생력 강화

□ '26년 소요예산

○ 강원연고산업 육성 프로젝트 : 3,880,000천 원

□ 추진일정

분기	추진계획	비고
1분기	○ '26년 사업계획(사업목표 설정, 지역기업의 수요 조사 등) 수립	
2분기	○ 사업 착수 및 참여기업 모집(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참여기업 선정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및 최종 선발	
3분기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반기 성과평가회의 개최 ○ 1회 추경 예산 확보 ○ 기업지원,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사업화 연계 등	
4분기	○ 성과 모니터링(매출, 일자리 등 성과 파악) ○ 환류 및 개선(모니터링 결과 바탕 차년도 사업 개선 및 보완)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7-1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주관부서	세정과	협조기관/부서	도내 시군
담당자	홍영표 주무관	연락처	033-249-2314

□ 추진배경

○ 비용 부담 등으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와 국세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세부 추진사항

○ 무료 세무상담 추진을 위한 마을세무사 위촉

- 도내 18개 시군에 총 37명의 세무사 위촉

○ 지방세 및 국세 무료 세무상담 추진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상담
- 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 상담
- 방문상담, 전화상담,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추진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추진

- 전통시장 등 주민들에게 홍보 및 상담이 용이한 장소 방문
- 영세상인, 소상공인 등과 무료 세무상담 진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시군별 위촉된 마을세무사를 통한 안정적 세무상담 운영

  * 모든 시군에 마을세무사 각 1명 이상 위촉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비용 부담으로 인한 접근성 미흡 • 복잡한 세법으로 세무 사각지대 발생	• 주민부담 완화로 상담 접근성 용이 • 전문 세무 상담을 통한 세무이해도 향상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시군별 마을세무사 위촉

- 춘천10명, 원주8명 등 각 시군별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진행

□ 추진일정

○ 지방세 및 국세 무료상담 연중 운영

○ 제도의 공로가 있는 마을세무사에게 포상(표창장) 수여

□ 홍보계획

○ 도내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및 시군 홈페이지 등

○ 마을세무사 이용방법 등 무료 상담안내

7-2 강원 디지털 행정 서비스「강원혜택이지」운영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행안부, 도 실과 및 시·군
담당자	박명철 주무관	연락처	033-249-3726

□ 추진배경

○ 현장 방문 및 분산된 서비스 신청 구조로 도민 불편 지속

- 기존 행정서비스는 기관 방문 및 구비서류 제출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방문하는 등 불편·번거로움 가중
- 혜택 정보가 부서·기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있어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이용 비효율 발생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계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안내 부족
-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신청 누락 및 미수혜 발생

○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요구 지속

- 분산된 혜택 서비스를 통합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구비서류 간소화 및 비대면 신청 확대 등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강원혜택이지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도내 분산된 복지·행정 혜택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도민이 한 곳에서 쉽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 PC·모바일 기반 접근 가능한 통합 창구로서 편리한 이용 환경 제공

○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간편 신청 서비스 구현**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자동 확인·검증하여 구비서류 제출 최소화
- 비대면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맞춤형 혜택 알림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정보를 분석하여 혜택 자격요건을 선별하고 맞춤형 서비스 추천
- 이용자 상황(본인·거주특성, 생애주기 등)을 반영한 자격 분석·매칭을 통해 서비스 자동 추천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강원도민증 발급 3만 건
- 혜택 서비스 및 강원패스 이용건 수 1만 건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방문 및 서류 제출 등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 분산된 정보로 혜택 확인 어려움 및 신청 누락 발생	• 비대면·간편 신청으로 절차 간소화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통합·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혜택 수혜율 및 정책 체감도 제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강원혜택이지 플랫폼 운영비 26,000천 원 * 유지보수비(15,700천 원) 포함

□추진체계

○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참여기관) 도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 추진일정

○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 '강원혜택이지' 구축 : '24. 10월

○ 강원혜택이지 플랫폼 정식 오픈 : '25. 3월 ~

○ 강원혜택이지 플랫폼 기능 고도화 추진 : '25. 11월

○ 도서관 회원증 연계 및 서비스 전환(앱→웹) : '26. 4월

○ 생활도민 대상 숙박·소비 인증 시 혜택 서비스 제공 : '26. 9월

□ 홍보계획

○ 도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 : 상시

○ 서비스별 모집기간별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상시

7-3 스마트빌리지 시군 특화 모델 구축 및 도 단위 확산 체계 마련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과기부/디지털사회기획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양구)
담당자	박신영 주무관	연락처	033-249-3132

□ 추진배경

○ **(현황)** 지형적 제약에 따른 기본 서비스 불균형 및 고령층 디지털 격차 심화

○ **(목표)** 주민 실생활과 밀착된 지능형 정보기술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 **(전략)** 지역 맞춤형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강원형 스마트빌리지**」 표준 모델 정립 및 성과 확산

□ 세부 추진사항

○ **시군별 특화 서비스의 전략적 운영 및 성과 관리**

시군	사업명	2026년 집중 성과 및 혁신 가치
강릉	AI 멀티소스 다중센서 기반 연안 그린 인프라 자원 생육 서비스	AI 기반 연안 모니터링 정합성 확보 및 과학적 행정 신뢰도 제고
동해	빈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DB 기반 맞춤형 케어 시스템 실증
속초	스마트 생활안전체험관 구축 사업	교육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 재난 대응 역량 표준 지표 마련
양구	지능형 한우 번식 효율 개선 사업	시스템 안착 및 노동력 절감 실증, 2027년 수익성 가시화 기반 구축

○ **시군별 특화사업의 도 대표 모델 구조화 및 선순환 체계 구축**

- **(스마트 서비스 유형화)** 해양환경·주민건강·생활안전·지능형 축산 등 4대 핵심 분야를 「**강원형 스마트서비스**」 **대표 모델로 체계화**
- **(범용적 확산 기준 마련)** 기술 규격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여

동일·유사 수요가 있는 **타 시군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확산 기반 조성**

- **(성과 기반 환류 체계)** 2026년 우수모델 데이터 및 시행착오를 자산화하여 **2027년 차기 과제 기획 시 성과 연계 및 재활용 극대화**

○ **도 주도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 품질 고도화**

- **(상시 모니터링)** 시군 및 수행기관 대상 **예산 집행률·성과 달성도·운영 현황 정기 점검**으로 사업 추진 동력 상시 확보
- **(전주기 리스크 관리)** 현안 발생 시 긴급 점검 회의 소집 및 과제별 잠재 리스크를 **'월간 점검 체계'로 제도화**

○ **대주민 소통 강화 및 현장 체감형 성과 확산**

- **(현장 밀착형 운영)** 정기적 현장 방문 및 실거주자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환류(Feedback) 체계 가동**
- **(스토리텔링 중심 홍보)** 단순 시스템 구축 실적을 지양하고 '도민의 삶의 질 변화'를 중심으로 **실질적 우수사례 발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구분	사업명	주요 성과지표 (정량 목표)	추진 과제 (정성 목표)
강릉	AI 멀티소스 다중센서 기반 연안 그린 인프라 자원 생육 서비스	· 데이터 수집량 **연 7,000건↑** · 이용자 만족도 **60점 이상**	· 데이터 기반 연안 재난 대응 의사결정 체계 정착
동해	빈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 서비스 수혜자 **연 3,000명↑** · 솔루션 만족도 **90% 이상**	· 주민 건강증진 개선 사례 발굴
속초	스마트 생활안전체험관 구축 사업	· 체험관 이용객 전년 대비 **20%↑** · 교육 만족도 **20% 향상↑**	· 실감형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양구	지능형 한우 번식 효율 개선 사업	· 발정 감지 **정확도 90% / 수태율 80%** · 송아지 **생산율 57%** 달성	· 농가-전문가 실시간 소통 및 상시 기술 지원 체계 고도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군별 현안 대응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 • 시스템 구축 중심 인식으로 성과 축적 미흡 • 기술 중심 사업 추진으로 주민 체감도 저하 우려 • 우수사례가 단일 시군 성과에 국한	• 시군 특화 성과를 도 단위 확산모델로 구조화 • 운영·성과·확산이 연계된 스마트 서비스 체계 정착 • 현장 중심의 도민 체감형 실증사업 구현 • 차기 과제 기획 및 타 시군 확산 기초 자료 활용

□ '26년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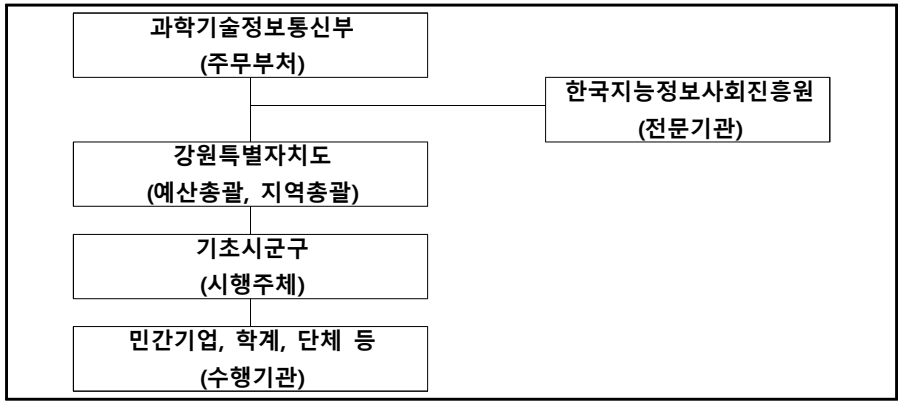
○ 사업예산: 3,100백만 원(국 2,480, 도 186, 시군 434)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100**	**2,480**	**186**	**434**
선도사업*	**강릉시**	**700**	560	42	98
	동해시	**800**	640	48	112
	속초시	**850**	680	51	119
	양구군	**750**	600	45	105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예산 매칭 비율(국 80%, 도 6%, 시군 14%)

□ 추진체계



□ 기관별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종합성과 및 점검 o 광역시·도의 예산신청서 검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o 지자체별 수행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o 광역시·도의 예산신청서 검토 o 지자체 대상 스마트빌리지 사업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o 지역별 예산 집행 및 추진과제 성과 점검
광역시·도 (예산신청, 지역총괄)	o 예산계획 수립, 과제 기획 등 총괄 관리 o 예산·신청 및 집행 관리, 추진과제 실적 점검 o 지역 전략계획 수립, 성과관리
기초시·군·구 (시행주체)	o 과제 기획, 추진 o 과제 진행 관리, 추진상황 점검·보고(기초→광역→주무부처) o 수행사업자 선정 및 과업 수행
민간기업, 학계, 단체 등 (수행기관)	o 수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o 서비스 개발, 구축, 납품 등

□ 추진일정

○ 시군별 사업수행계획서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6. 3월

○ 시군별 용역 발주에 따른 계약 또는 공모에 의한 협약 등 추진: ’26. 4월

○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현황 월간 보고(시군→도): ’26. 4 ~ 12월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실시(2회): ’26. 6월, 10월

○ 시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결과 보고(시군→도): ’27. 1월

○ ’26년 실적보고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시군→도→NIA): ’27. 3월

□ 홍보계획

○ **유관기관 협력 기반의 정책 브랜드 확산**

- **(브랜드 통합)** 4대 특화사업을 「강원형 스마트 서비스」로 브랜드화하여 도정 혁신의 대표 모델로 대내외 인지도 제고
- **(행정 채널 점유)** 지자체 누리집, 공식 SNS, 반상회보 등 기존 행정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별 핵심 성과 및 이용 방법 상시 안내
- **(정책 네트워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수 사례집 수록 및 정책 세미나 시 대표 사례로 노출 추진

○ **지역 커뮤니티 및 거점 시설을 통한 체감 성과 전파**

- **(거점 활용)** 속초 안전체험관, 동해 커뮤니티 센터 등 주요 시설 내 안내문 비치 및 현장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와 홍보 병행
- **(커뮤니티 기반 확산)** 양구 축산 시범농가 등 실제 수혜자의 ’노동력 절감 사례’를 지역 농가 네트워크 및 작목반 등을 통해 자생적 확산 유도
- **(현장 소통창구)**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주민 간담회 시 발굴된 미담 사례를 도 공식 홍보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활용

○ **온·오프라인 성과 공유 및 환류**

- **(디지털 콘텐츠 자산화)**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전·후 비교 자료 및 이용 가이드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 타 시군 배포
- **(성과 공유회 연계)** 연말 성과 보고회 및 시군 워크숍 등 기존 행사를 활용하여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분위기 확산

7-4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통한 도민 편익 도모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8개 시군
담당자	반영수 주무관	연락처	033-249-3011

□ 추진배경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통신복지 실현 필요**

- 계층·지역 간 정보 접근성 차이를 완화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공공장소 중심의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수요 증가**

-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이용 수요 지속 확대

□ 세부 추진사항

○ **공공지역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개방 및 신규 구축('12~'24년), 4,954개소**

<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12년 ~ 2024년
- **(사 업 비)** 274억(국비 18억, 시군비 67억, 통신사 81억)
- **(사업내용)**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광단국장비, 무선AP 등 설치)
  * 과기부에서 국민의 정보접근권 제공과 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 사업목표 달성 판단으로 신규 구축 사업 종료('24년)

○ 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22. 4월)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17~'18년), 품질고도화 추진('22~'23년)

○ 민간사업 공모를 통한 도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25. 12월)

- 공공시설, 관광지 등 8개 시군 공공와이파이 50개소 신규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6. 3월)

○ **민선8기 공약「도 전역 무료 와이파이 구축」추진**

- **(기간/목표)** '22~'26년 / 1,452개소(목표) → **1,478개소**(102% 달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12년부터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품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 추진

< 공공와이파이 운영현황 >

구 분	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합 계	5,524	886	912	480	216	194	202	297	338	258	153	98	252	279	176	267	190	128	198
공공지역	5,004	800	752	480	183	170	160	263	329	258	153	84	222	263	161	254	163	128	181
시내버스	520	86	160	-	33	24	42	34	9	-	-	14	30	16	15	13	27	-	17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활용도 제고)** 18개 시군 운영현황 조사 및 공공와이파이 이전·재배치를 통한 활용도 개선

○ **(서비스 품질 개선)** 내용연수 및 장애 빈도를 분석하여, 노후 운영 시설을 개선하여 속도 및 안전성 확보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과기부「공공와이파이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노후장비 증가 및 잦은 장애로 속도 저하 접속 불안정 발생 • 운영 기준 미흡 및 시군별 관리 수준 편차 발생	•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접속 안정성 확보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으로 체계적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26년 소요예산

○ 18개 시군 공공와이파이 연간 회선료: 1,893백만원(시군비)

* 공공와이파이 1회선 사용료 3~4만원 소요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와이파이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지원, 관계부처·지자체 등 정책협의 추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총괄, 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 **(지자체)** 지역별 사업 관리 및 예산 지원(월 회선료 납부), 공공와이파이 운영(설치장소, 인프라 제공 등)

□ 추진일정

○ 공공와이파이 운영 현황 현행화 및 신규 수요지 조사: '26. 4 ~ 5월

○ ('26~'29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계약 체결: '26. 8월

* 5G-WiFi7 기반 버스 공공와이버스 서비스 시작('26. 9월)

○ 공공와이파이 관리·운영 세부지침 수립: '26. 9월

* 과기부「공공와이파이 운영 가이드라인」확정 후 시군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수립

7-5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시군
담당자	유영철 주무관	연락처	033-249-2850

□ 추진배경

○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 인근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 행정안전부 지정 및 관리지침('26.2.) 및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세부 추진사항

○ 지정대상 : 개인사업자·법인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외식, 외식 외(시설이용, 강습, 수선·수리, 이미용, 세탁, 여관 숙박료 등)

○ 지정규모 : 시장·군수가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25년부터 시군별 지정목표제 운영 중

○ 지정시기 : 연 4회(일제정비 3, 9월, 현행화 3, 6, 9, 12월) 착한가격업소 지정 원칙

○ 평가기준 : 가격, 위생·청결, 가감점을 반영하여 지정여부 결정

○ 지정절차

① 지정 공고	② 신청	③ 현지 실사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

④ 지정여부 심사	⑤ 지정 결정통보 및 현판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결정사항을 신속히 해당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지정서·착한가격업소 현판 교부

○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 유지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비 일부 지원

- 국비사업 : 물품, 운영비 등 지원(업소당 최대 85만원 범위 내)
- 도 자체사업 :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등 지원(업소당 최대 230만원 범위 내)

○ 사후 관리 : 연 4회 현행화 및 재심사

- 휴·폐업, 가격 인상, 행정처분 등을 반영한 자격 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 시군별 지정목표 달성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외적 환경에 따른 소상공인의 가격인상 • 주변 착한가격업소 부재로 인한 접근성 약화	•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한 물가안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도모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 2,388백만 원(국 322, 도 620, 시군 1,446)

□ 추진일정

○ '26년 지침 및 지원계획 시행('26.2월)

○ 상반기 일제정비(신규 지정, 지정 취소 등) 실시('26.3월)

○ 상반기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26.4월~6월)

○ 하반기 일제정비(신규 지정, 지정 취소 등) 실시('26.9월)

○ 하반기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26.10월~11월)

○ 성과 분석 및 시군별 지정목표 평가('26.12월)

□ 홍보계획

○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 정보 현행화 : 분기별 1회

○ 지도앱(네이버, 카카오, 티맵) 표출 서비스 제공

- 지도앱에서 "착한가격업소" 검색 시 주변 착한가격업소 정보 제공

7-6 강원 일자리 통합 플랫폼 운영

주관부서	일자리청년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박수미 주무관	연락처	033-249-2955

□ 추진배경

○ 도내 일자리 관련 사업 정보 확대에 따른 산재된 일자리 정보 및 지원정책 연계·통합 필요

○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채용정보 및 기업, 창업정보 등의 지속적·효율적 제공으로 구인·구직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역량 강화
- 일자리정보망을 통한 도내 일자리 및 정책정보 효율적 전달·홍보

□ 세부 추진사항

○ 도내 일자리 통합 정보 및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지속 제공

○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년, 여성, 중장년 대상 맞춤형 채용공고 제공 서비스 구축·운영

○ 구인기업 대상 서비스 신설

- 구인기업 대상 인재검색 및 인재추천 기능 신설·운영

○ 이용자 참여 확대 추진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신규 유입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이벤트 추진(분기별 1회)
- 카카오 플러스 친구 및 뉴스레터 운영
-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연간 누적 방문자수 : 465천 건

- 산출내역 : 31천 명* × 15 = 465천 건(개인당 10~20회)

* '26년 2월 기준 강원 지역 실업자 수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채용정보 통합 제공 • 홍보채널 부족	• 성별/연령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재방문율 및 서비스 이용률 증가 •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을 통한 홍보 기반 마련 및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

□ '26년 소요예산

○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 2억 원

□ 추진일정

○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용역 계약 : 4월

○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및 인재검색·추천 기능 개설 : ~6월

○ 신규유입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추진 : 상시

○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 연중

□ 홍보계획

○ (청년층 대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

- 청년 취업지원 사업 및 청년정책 등 안내, 취업시기 집중 홍보

○ 카카오 플러스 친구, 뉴스레터 발송(주 1회)

- 채용정보, 교육, 박람회 등 콘텐츠 중심 홍보

○ 온라인이벤트 운영(분기별 1회) 등

- 회원가입 이벤트, 취업성공 우수사례 이벤트 등 추진

7-7 강원 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 개선

주관부서	투자유치과	협조기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통합유지보수)
담당자	김희준 주무관	연락처	033-249-3722

□ 추진배경

○ **투자 시뮬레이션 카테고리**(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접속 감소 추세**

- ('22년) 526건, ('23년) 273건, ('24년) 309건, ('25년) 182건
- 투자 시뮬레이션 사용 방법, 용어 및 지원 기준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초심자 이용 편의성 저조

○ **투자 시뮬레이션 최초 구축**('22년) **이후 기능 개선 전무**

- 현행 산업부 고시 및 도 조례 개정 사항, 지원특례 항목 미반영으로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 산출의 정확성 저하
- 국비 지원 규모만 산출 가능하며, 지방비 지원 규모는 산출 불가

투자 시뮬레이션 (현재)



[개선 방향]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및 지방투자보조금(지방비) 지원 규모 산출 정확도 향상을 위한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 개선**
- 투자 시뮬레이션 초심자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AI 챗봇 도입**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배포**

□ 세부 추진사항

○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 개선**

- 추진기간 : '26. 2~4월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용역 활용
- 추진내용 : 국비 투자보조금 산출 시뮬레이션 기능 보완*
  지방비 투자보조금 산출 시뮬레이션 신규 개설**

* (국비) 영위업종, 업종코드, 기회발전특구 등 지원 기준 설정 항목 보완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실투자 면적 입력 기능 추가
지원 특례 등 투자보조금 가산 항목 수정

** (지방비) 지원대상, 투자지역, 업종코드, 투자촉진지구 등 지원 기준 설정 항목 추가
대상별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 산출 기능 추가
타시도 이전, 신설 또는 증설 시 고용보조금 산출 기능 추가

○ **투자 시뮬레이션 이용자 편의 향상**

- 추진기간 : '26. 4~5월
- 추진방법 : 생성형 AI 활용(비예산, 자체 진행)
- 추진내용 : 투자 시뮬레이션 사용 지원 챗봇* 도입 및 매뉴얼** 제작

* (챗봇 주요 기능) 투자 시뮬레이션 이용자 문의 사항 및 투자 FAQ에 대한 응답

** (사용자 매뉴얼)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등 지원액 산출 관련 입력 항목에 대한 설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026년 투자 시뮬레이션 카테고리 접속 건수 : 1,000건 이상
- 2026년 강원 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방문 건수 : 6,000건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강원 지역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규모 산출의 낮은 정확성 • 투자 시뮬레이션의 저조한 이용 편의	• 강원지역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 • 투자 시뮬레이션 이용 편의 향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6년 소요예산

○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개선 용역 : 5,500천 원

○ 투자 시뮬레이션 사용 지원 AI 챗봇 및 매뉴얼 제작 : 비예산

□ 추진체계

추진 주체	주요 역할
투자유치과	-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 개선 용역 추진 - 투자 시뮬레이션 AI 챗봇, 사용자 매뉴얼 제작
지능정보정책과 (통합유지보수)	- 강원 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투자 시뮬레이션 카테고리 내 AI 챗봇 탑재
투자 의향 기업 관계자	- 투자 시뮬레이션 AI 챗봇 베타 테스트 참여
시군 투자 유치부서 담당자	- 투자 시뮬레이션 AI 챗봇 베타 테스트 참여

□ 추진일정

○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 개선

- 강원 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분 개편 계획 수립 : '26. 2월
-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 개선 용역 발주 : '26. 3월
- 투자 시뮬레이션 모의 테스트 및 수정, 용역 완료 : '26. 4월

○ 투자 시뮬레이션 사용 지원 AI 챗봇 및 매뉴얼 제작

- 챗봇 및 사용자 매뉴얼 초안 제작 : '26. 4월 말
- 기업 관계자 및 시군 투자 담당자 참여 베타 테스트 실시 : '26. 5월 중
- 챗봇 및 매뉴얼 업로드, 홈페이지 부분 개편 결과보고 : '26. 5월 말

□ 홍보계획

○ 강원자치도 누리집 메인 화면 배너 표출, 보도자료 배포 : '26. 5월 중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8-1 성과와 보상이 선순환되는 평가체계 확립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협조기관/부서	행정안전부·시군/ 전 부서
담당자	(성과평가) 노주영 주무관 (합동평가) 고현아 주무관	연락처	033-249-2113 033-249-2931

□ 추진배경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정과 도정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자체 성과평가 추진

○ 객관적 실적에 기반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 조성

□ 세부 추진사항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평가지표: 109개 지표(정량 95, 정성 14)
- 평가목표: (정량) 98% 달성, (정성) 우수사례 보고서 4건 선정
- 실적관리: 월별 실적점검, 지표별 컨설팅, 중점관리지표 선정·관리, 도-시군 합동 점검, 시군 연계지표 관리, 시군 종합평가 등
- 인센티브
  - ‣ (도) 우수부서·직원 포상, 조직성과평가 및 인사 가점 부여로 실행력 담보
    * (협력부서) 실적 달성에 기여도가 높은 부서 또는 직원 선정 포상
  - ‣ (시군) 우수시군·직원 포상 및 특별교부세 지급 등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

- 평가대상: 116개 부서
- 평가지표: 현안업무(318개), BSC 성과지표(456개), 공통지표(5개), 가·감점(11개)*

  * 합동평가 연계 성과지표(75개), 공통지표(1개), 가감점(7개) 선정으로 부서 협업 동력 뒷받침
- 평가방법: 현안업무 추진실적 평가 + BSC 성과평가 + 가·감점
- 인센티브: 우수부서 선정 포상 및 우수직원 선발 인사가점 부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부서 간, 도-시군 협업을 통해 합동평가 상위권 실적 달성
- 도정 현안, 합동평가 연계 성과관리와 평가로 조직의 능률성 제고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합동평가 지표별 조직 공동목표에 대한 협업 동력 부족 • 도정 핵심사업 추진 노력에 대한 인정 미흡으로 직무 몰입도 저하	• 유기적 성과 창출을 통해 **합동평가 목표 달성률 극대화 및 행정 서비스 질 향상** • 도정 핵심전략 중심 평가 및 정당한 보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 관련 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 '26년 소요예산

○ 우수부서·직원 및 우수시군 성과 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6.4억원

□ 추진체계

담당부서(시군)	평가부서	협업부서
• (담당부서)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및 실적관리 추진 • (시군) 총괄부서 중심 실적 추진 상황 점검 및 대응	• 합동평가-성과평가 연계 성과지표 선정·운영 • 실적관리 및 평가 • 부서별·시군별 협업 촉진 (인센티브 부여* 등)	• (사업부서) 규제개선, 혁신제품 구매 등 지표 성과 창출 협력 • (인사부서) 우수직원 인사가점, 도지사 포상 협조

* '평가의 스타' 선정 포상(매월): 담당·협업부서에서 대상자 선발 도지사 표창 수여

□ 추진일정

성과 창출	평가 추진	인센티브 부여
• 합동평가 및 성과평가 ('26. 1~12월) * 평가의 스타 선정 포상(상시)	• 합동평가('27. 1~4월) • 성과평가('26. 12월) * 합동평가 연계 항목 가감점 부여	• 합동평가('27. 5~6월) • 성과평가('26. 12월)

8-2 일과 성과 중심 인사 운영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박슬기 주무관	연락처	033-249-2535

□ 추진배경

○ 성과와 역량 기반 인사 운영의 중요성 증대

○ 재난안전 및 민원 등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

- 실적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및 평정 결과 공개(국단위 평정 결과)
- 우수 성과 창출 분야 실적 가산점 적용(제안채택, 평가우수 등)

○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분야 인사 우대 강화**

-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분야 근무자 실적 가산점 부여
- 재난·안전관리 분야 2년 이상 근무자 희망 보직 신청 우선 검토·반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실적 및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운영(실적 80%, 경력20%)
-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분야 근무자 경력 가산점 부여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성과와 연공 기반의 인사 운영 • 재난·안전관리 분야 인사우대 제도 운영	• **실질적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통한 공정성 및 조직 신뢰도 제고 • 재난·안전관리·민원 분야 **보상체계 내실화**로 조직 대응 역량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26. 7월)

- 특별승진 및 재난·안전관리·민원 분야 우대 규정 구체화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2026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 '26. 5월, 12월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 '26. 7 ~ 8월

□ 홍보계획

○ 인사운영계획 및 제도 변경 사항 공문 시행

8-3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함영준 주무관	연락처	033-249-3369

□ 추진배경

○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 지원

○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 지원 및 공직자 보호

-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공무원 등이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 세부 추진사항

○ 신청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치감사 대상기관

-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를 신청한 민원인(기업 포함)

* 민원인의 경우 신청 의뢰서를 작성·제출 →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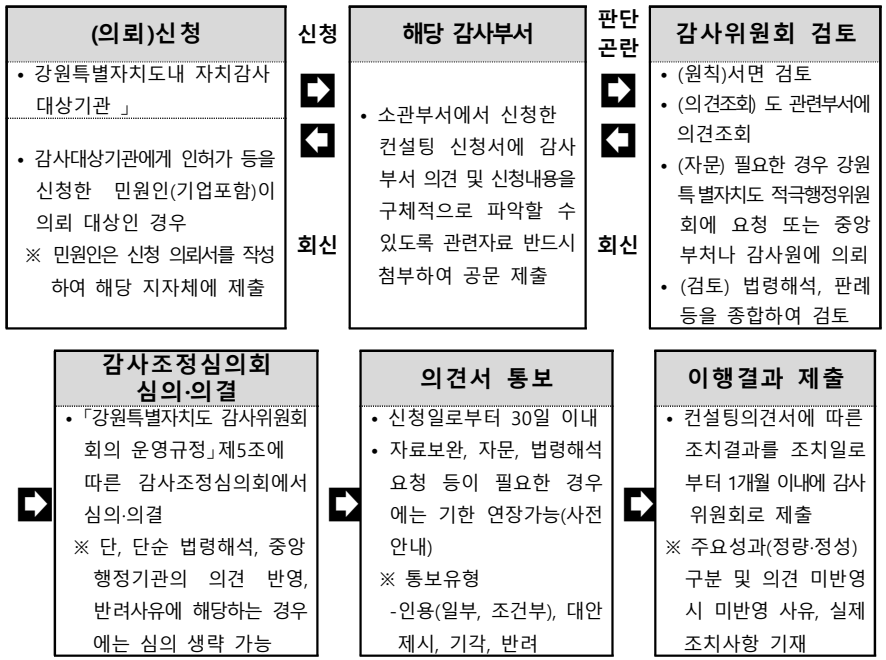
○ 신청대상

- 개발행위 인허가, 공유재산, 계약(물품·공사·계약등), 예산·회계·재정, 기타 등 전반적인 분야별로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2.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 신청 및 처리 절차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추진

- **(추진시기)** 2026년 시군 종합감사, 민원감사 기간 중
- **(추진방법)** 감사 시작 전 사전컨설팅 접수 및 감사기간 내 사전컨설팅 감사 상담 창구 운영

  * 감사기간 중 1~2일 상담 창구 운영(구체적 일정 등은 별도 안내 공문 발송)

- **(추진효과)** 사전컨설팅 제도 홍보 및 신청건수 증가,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및 신속성 확보,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제고

○ 감사면제 및 유공자 인센티브 강화

-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감사 면제
-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 활성화 등에 포상: 2026년 도지사 표창 4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확대, 시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및 다수 민원 해결에 기여

  * ('22년) 76건 ⇒ ('23년) 74건 ⇒ ('24년) 87건 ⇒ ('25년) 62건 ⇒ ('26년) 63건 목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감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 행정	• 행정처리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업무처리 가능 • 주요 현안 사업 등의 도-시군-감사기관 공유로 협업 강화
• 사후적발 위주 감사	• 사전 의사결정 지원으로 행정 내실화 • 사례 공유로 유사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2026년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계획 송부(→자치감사 대상기관): '26. 1월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시군 종합감사, 민원감사 기간 중 1~2일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의견서 통보: 연중

○ 제도 운영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제공: '26. 12월

□ 홍보계획

○ 2026년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계획 공문 송부(→자치감사 대상기관)

○ 시군 종합감사, 민원감사 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안내 및 홍보 요청(→시군 감사부서)

- 시군 감사부서에서 공문 발송, 게시판 게재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사전컨설팅 사례 공유 및 대외 홍보

8-4 강원 산불방지 통합 대응체계 구축 협업

주관부서	산불방지센터	협조기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18개 시군, 산림청, 소방, 경찰, 기상청, 군부대, 국립공원
담당자	김만희 주무관	연락처	033-649-8506

□ 추진배경

○ 산불 발생 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 한계 노출

- 강원지역 '양간지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임
- 지자체, 산림청, 소방, 군, 경찰 등 각 기관별 업무 분담으로 인한 초동 대응의 한계 존재

□ 세부 추진사항

○ 선제적 대응 및 협업체계 구축(1분기)

-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 및 18개 시군 비상근무 체계 가동, 화목보일러 합동 점검 및 기상청 연계정보 공유, 산불센터-기상청 간담회 실시, 기관 협업 주민대피체계 구축 및 모의 대피훈련

○ 대형산불 집중 대응 및 합동 예방(2분기)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4월) 가용자원 총동원 및 통합 체계 가동, 군부대, 국립공원 상황실 인력 파견, 민·관 합동 산불방지 캠페인

○ 실전 통합훈련 실시(3분기)

- 영동·영서권 통합지휘본부 운영 유관기관 합동 훈련

○ 가을철 대응 및 체계 정비(4분기)

- 입산자 관리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결과 분석을 통한 역할 재정립 및 대응절차 개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전국 유일의 유관기관 통합 지휘 체계 완성형 모델 구축
- 시·군 경계 없는 자원 통합 운영으로 중복 투입 방지 및 대응 효율 극대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기관별 분산 대응으로 통합 지휘 부재 및 대응 지연 • 정보 공유 미흡으로 상황판단 및 대응 공백 발생 • 사후 복구 중심 행정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 주민대피 체계 미흡으로 인명피해 위험 상존	• 기관별 칸막이 폐지로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 구축 • 실시간 정보 공유로 신속한 상황판단 및 공동 대응 • 예방 중심 협업체계로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사회재난과 협업 기반 주민대피로 도민 안전 확보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관련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지침 정비

-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기관별 역할 명확화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운영 규정」 등 개정 예정(26.7.~)

□ '26년 소요예산

○ 산불방지센터 예산 : 총 40,039백만 원(국비 15,873, 도비 24,166)

- 임차헬기 82억, 산림재난대응단 196억, 산불감시원 59억 등

□ 추진체계

○ 산불방지센터 : 상황관리·정보공유 총괄 및 통합 지휘본부 운영

- (도 사회재난과)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대피체계 운영(시·군)
- (산림청, 소방) 산불 발생 시 50km 이내 가용 헬기 및 진화자원 공동 활용
- (경찰) 가해자 검거, 산불현장 교통 통제 및 주민대피 지원
- (시군)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발생 초기 현장대응 총괄

  * 산불방지센터 24시간 상황실 근무(5명 : 본소 3명, 영서분소 2명)
- (기상청) 실시간 기상자료 및 건조, 강풍 특보 제공
- (국립공원)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입산객 통제 등 산불 예방활동 수행

□ 추진일정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종합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26.1월)

○ 대형산불 위험시기 시기별 특별대책 수립을 통한 선제적 대응('26.3월~4월)

○ 유관기관 합동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실전 훈련('26.9월)

○ 가을철 합동 단속 및 겨울철 건조 대비 협업체계 강화('26.11~12월)

□ 홍보계획

○ 대규모 행사·축제와 연계한 대국민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 국립공원 내 민·관 합동(도·시군·산림청·국립공원관리공단·산림조합 등) 산불방지 캠페인 실시

○ 기상특보(강풍·건조) 발효 및 주요 위험시기에 재난문자발송(CBS) 수시 시행

○ 농·산촌지역 마을방송 및 방송차량(지휘·진화차),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 알림" 방송 지속 실시

  * 민방위 경보시설 248개소 / 매주 주말 2회(10:30, 15:00) 방송

  * 산림드론감시단 순찰 드론에 스피커 부착 후 산불예방 홍보 방송 / 매주 주말

8-5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도정 협업「맞손잡기」사업 추진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협조기관/부서	실국
담당자	임형규 주무관	연락처	033-249-2911

□ 추진배경

○ 최근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강화

- AI·디지털 기반 행정 확대, 산업 경쟁력, 민생 안정 등 복합 정책과제

○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로 인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된 현안이 증대함에 따라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문제해결형 조직 필요

⇨ **부서(기관) 간 또는 공공-민간 간 협업 필요성 강조, 도정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협업 활성화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협업이란)** 다른 부서(기관)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 관련규정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

○ **(맞손잡기)** 다수의 부서(기관)가 수요자의 관점에서 목표 달성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과제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협업 활성화 프로젝트**

○ **(과제평가)** 10월 말 기준 추진실적 대상 협업 노력도,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2단계 평가

○ **인센티브 : 우수 협업과제 포상** 및 **부서 BSC 성과평가 부여**

「맞손잡기」 과제 추진 인센티브

① 우수과제 포상 : 도지사 상장(기관장), 포상금

최우수(1)	우수(3)	장려(4)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② 과제수행 전 부서 조직(부서)성과 평가 공통지표

- **주관부서** : 협업노력과 성과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부여

평가등급	S(20%)	A(30%)	B(40%)	C(10%)	D등급(미제출)
주관부서 점수	1.0	0.8	0.6	0.4	0

- **협력부서** : 주관부서가 과제 수행비중 등을 감안하여 협력부서의 점수 배분(타 기관 해당없음)

* 예시) 주관부서 점수가 1.0점이고, 협력부서가 3개인 경우

A부서(기여도 50%)	B부서(기여도 30%)	C부서(기여도 20%)
0.5(주관부서 점수 × 기여도 50%)	0.3(주관부서 점수 × 기여도 30%)	0.2(주관부서 점수 × 기여도 20%)

* 협력부서 기여도의 총 합이 100% 또는 그 이하 여야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부서별 2건 이내 협업과제 제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화 • 행정환경 복잡.다양화로 인한 현안 해결 난항	• 협업 우수사례 공유, 협업 관련 사업 설명회 안내 등 협업 정보 제공을 통해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 '26년 소요예산

○ 도정 협업사업 '맞손잡기' 운영 : 5,100천 원

□ 추진일정

부서별 협업과제 발굴(3월~4월) ▶ 협업과제 선정(4월) ▶ 전문가 컨설팅(7월) ▶ 추진상황 점검(8월) ▼ 최종 성과보고서 제출(10월) ◀ 1차 평가(11월) ◀ 2차 평가(12월) ◀ 우수 협업과제 선정·시상(12월)

8-5 공간혁신에서 시작되는 현장 행정 구현 '강원형 워케이션'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협조기관/부서	실국
담당자	임형규 주무관	연락처	033-249-2911

□ 추진배경

○ (현장 행정 구현) **현장 사무공간 확보 및 강원형 관광모델 발굴**

① 지사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지난 3년간 차량 주행거리 14만 4천㎞, 도민을 위한 현장 행정 몸소 실천**, 규제 풀고 산업 키우고 **도민의 삶 제고**"

② 관광트렌드로 자리 잡은 **'워케이션' 체험을 통한 강원형 관광모델 발굴**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소비 활동 참여 및 지역 현장 체험**

①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주중 생활 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② **지역 근무 경험이 적은 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군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직원 만족도 제고) **공간 분산 기반 유연한 근무, 직원 민원 해소**

①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유연한 근무 형태**로 **업무 몰입도·만족도 제고**

② **공간 분산**을 통해 도 **본청 소속 공무원의 최다 민원**인 **'주차 문제' 해소**

'강원형 워케이션' 추진을 통한 일거삼득(一擧三得) 효과 창출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 (가칭)도민 곁으로 'w:on(work on, with one) 오피스'

○ 운영대상 : 도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직원 중 50명 선정

- (단 위) 팀 단위 선발 ※ 직무 우선순위 고려 선발, 협업부서, 프로젝트 추진 등

○ **운영기간 : 2026년 1월 ~ 11월 ※ 관광 비수기 2~4월, 9월~11월 집중 운영**

○ **소요예산 : 5,000천 원 ※ 당초예산 확보 필요 (1인당 최대 100천원)**

- **(지 원)** 2박 3일 기준, 오피스 사용료(50천원), 관광 체험비(50천원)

○ **운영방향 : 관광 비수기, 지역소멸위기지역 주중 체류인구 확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도 직원 50명 워케이션 시범사업 실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공간제약으로 인한 창의적 업무 해결 난항 • 도 소속 공무원 지역 근무 경험 부재로 정책 현장 이해도 낮음	•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유연한 근무 형태로 업무 몰입도·만족도 제고 • 지역 근무 경험이 적은 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군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26년 소요예산

○ 강원형 워케이션 시범사업 추진 : 5,000천 원

□ 추진일정

○ 회차별 추진 : 1차(4~5월), 2차(5월~6월), 추후 접수상황에 따라 접수

신청·접수		대상자 확정		워케이션 실시		결과 제출
부서→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참여직원	⇨	부서→자치행정과
회차별 추진		회차별 추진		회차별 추진		7일 이내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9-1 청렴·반부패 대책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조성 (직원이 보호받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형 청렴혁신 모델 구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협조기관/부서	전 부서
담당자	이혜림 주무관	연락처	033-249-2062

□ 추진배경

○ 종합청렴도는 상승하였으나, 내부체감도 저조 및 인사·계약·보조금 분야 공정성 우려 지속.

○ 불합리한 관행, 수직적 조직문화, 신고 부담, 보상 부족으로 청렴 정책의 현장 체감성과 실행력 한계 존재.

○ 단속·교육 중심에서 예방·보호·보상·참여 중심으로 전환하여 직원과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행정 구현.

□ 세부 추진사항

① 기관장 중심 책임경영형 청렴 거버넌스 구축

- 도지사 주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분기별 운영
- 실국별 청렴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 정례화
- 고위직 청렴 리더십 실천 릴레이 운영

② 참여와 보상이 있는 자율 청렴문화 확산

-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 교육·제안·캠페인 참여 실적 점수화
  - 근무성적평정 가점 연계
-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 강화
- 세대별 맞춤형 청렴교육 및 주1회 자가학습 운영

③ 부패취약분야 구조 개선 및 공정성 강화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패널티 제도 운영
- 수의계약·보조금·채용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외부개입 기록제 및 이해충돌 예방체계 강화
- 사전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 보호

④ 직원 보호 및 도민 체감형 소통시스템 구축

- 강원 안심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익명 대리신고)
- QR 기반 청렴 피드백 시스템 운영
  - 민원 종료 후 즉시 만족도·불편사항 접수
  - 결과 분석 후 부서 환류 및 제도개선 연계
- 현장 방문형 청렴 파트너십 간담회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평가성과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 내부체감도 +3점
- 참여성과 마일리지 참여율 70%, 교육이수율 95%
- 현장성과 피드백 3,000건, 부적정 집행 20% 감소
- 신뢰성과 익명신고 제도 인지도 70%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청렴정책이 의무교육 중심	• **직원이 참여하는 실천형 정책**
• 신고 시 불이익 우려	• **보호받는 조직문화 정착**
• 공정성 논란 반복	• **기준·절차 중심 행정 확립**
• 민원 후 소통 단절	• **실시간 피드백·환류 체계**
• 청렴이 감사부서 업무	• **전 부서 공동 책임체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공익제보의 접수·처리, 보상금의 지급 등 관련 조례 구체화 '26. 7.까지

○ 제정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례안

- 부당집행 정의, 적용 범위, 제정적 패널티, 책임성 강화, 결과 환류 등 '26. 7.까지

○ 개정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가대상 제외 사유 구체화 및 제외되는 자치법규 사전 알림·공개 '26. 9.까지

□ '26년 소요예산: 74,520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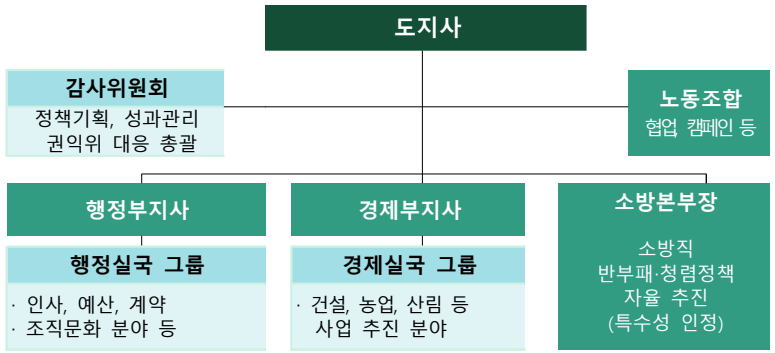
○ 열린 감사행정 실현 -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 추진

- 청렴 홍보·교육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49,840천 원
- 민간인 신고 보상금 및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기타보상금 : 5,980천 원
- 공무원 신고 보상금 및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보상금 : 8,700천 원
- 청렴홍보 공기관위탁 : 10,000천 원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체계

○ 직급 기준이 아닌 **기능적 관점(업무관점)**에서 추진체계 구성

○ 소방업무의 자율성 부여, 노조와의 협업을 통한 직원 참여 활성화



□ 추진일정

○ 연중 상시 추진하되, **분기별 성과관리 체계**로 운영

시기	추진내용
• 1분기	• 2026 실행계획 확정, 추진단 회의, 부서별 목표 부여, 제도정비
• 2분기	• 청렴마일리지 본격 시행, 안심변호사 확대 운영, 청렴교육 집중 실시
• 3분기	• 청렴 피드백 운영 강화, 취약분야 집중점검, 현장 간담회 추진
• 4분기	• 종합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미흡과제 개선, 차년도 계획 반영

[3월]		[6월]		[9월]		[12월]
종합계획 수립	➡	중간점검	➡	청렴도 집중관리	➡	성과평가·포상

□ 홍보계획

○ 직원 참여와 도민 체감을 동시에 높이는 내부+외부 이중 홍보전략 추진

① 내부 홍보(직원 대상)

- 도 행정정보화시스템 배너 및 소통 게시판 활용
- 청렴마일리지 참여 안내 카드뉴스 배포
- 주별 청렴뉴스레터 발행(청렴자가학습시스템 활용 주간 이슈 및 법령 등)
- 우수사례 공유 릴레이 게시

② 외부 홍보(도민 대상)

- 도 대표 누리집·SNS·보도자료 활용 정책 홍보
- QR 청렴 피드백 참여 안내 홍보물 배부
- 민원실·사업현장 홍보 배너 설치
- 청렴 캠페인 및 지역행사 연계 홍보

③ 콘텐츠 홍보

- 숏폼 영상, 웹툰, 카드뉴스 제작
- "직원이 보호받아야 도민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메시지 확산
- 청렴 우수사례 인터뷰 콘텐츠 제작

직원 청책인지도 80% 이상, 청렴 피드백 참여율 30% 향상, 도민 정책인지도 상승

9-1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기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
담당자	이승연 주무관	연락처	033-249-2542

□ 추진배경

○ 도 조직 구성원으로서 신규·전입 공무원의 조직문화 적응도 향상 및 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신규·전입 공무원 적응도 향상
- 신규·전입 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소속감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세부 추진사항

○ 신규·전입 공무원의 조직문화 적응 및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합동 공감톡톡 소통캠프」 추진

- (소통 활성화 및 공감력 향상 프로그램)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이해를 통한 조직 내 협업 강화
-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지휘부 및 노조와의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이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여 소속감을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신규·전입 공무원의 소속감 부재로 인한 행정 신뢰도 저하	• 협업하는 조직문화 체감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노사합동 공감톡톡 소통캠프」 운영 예산 12백만 원

□ 추진체계

○ (강원특별자치도) 「노사합동 공감톡톡 소통캠프」운영 총괄

○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노사합동 공감톡톡 소통캠프」운영 후원

□ 추진일정

○ 「노사합동 공감톡톡 소통캠프」추진('26. 3월)

□ 홍보계획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9-3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김다민 주무관	연락처	033-249-2912

□ 추진배경

○ 과업 중심의 경직된 행정문화에서 탈피하여, 협업과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 성과 도출 필요

○ MZ세대의 공직 유입 확대와 가치관의 다변화 등 조직 구성원의 변화에 발맞추어, 상호존중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정립 요구

□ 현황 진단

○ **(조직문화 진단)** '25년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에서, **전체 평균 5.4점(7점 만점)**으로, 전반적인 조직문화는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나, **형식주의 및 문제 제기 창구 부족 등 개선 필요 사항도 다수 존재**하였음.

※ ('25년 조직문화 진단) '25. 11. 10.~11. 18. / 222명 참여(9.28%, 대상자 2,391명)

< 2025년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지표별 평균(5.48점/7점) 이하 지표 >

지표	진단 내용	평균 점수
불합리한 관행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의 해소 수준	4.94점
공직 만족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자긍심, 안정성, 사회적 평가 만족도	5.08점
혁신 지향성	실패를 용인하고 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문화의 존재	5.39점
업무 효율성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	5.34점
심리적 안정감	두려움 없이 발언할 수 있는 환경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의 조성 여부	5.45점

○ **(익명게시판 분석)** '25. 1월~'26. 3월까지 **청내 익명 게시판 게시글 382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조직문화' 관련 게시글은 감소했으나, 관련 게시글이 전체의 15.1%를 차지하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4년) **조직문화 관련(139건, 26.1%)** 〉 홍보, 분실물 등(128건, 24.1%) 〉 관련부서 문의(127건, 23.7%) 순
('25년) 관련부서 문의(105건, 27.4%) 〉 **조직문화 관련(58건, 15.1%)** 〉 정보교환(47건, 12.3%) 순

□ 세부 추진사항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목표 설정 및 5대 중점과제 수립

비 전

출근이 소풍처럼 즐거운 강원도정

목 표

조직문화 진단 하위지표 전년 대비 5% 이상 개선

추진전략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강원 PICNIC' 실천

P	Passion 업무는 열정적으로!	N	Neighborliness 동료에게는 친절하게!
I	Innovation 언제나 혁신적으로!	I	Inclusivity 포용과 배려의 자세로!
C	Collaboration 동료와 협업하며!	C	Change 불합리한 관행은 바꾸고!

중점과제 2026년 '강원 PICNIC' 5대 중점과제



○ 5대 중점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1 일은 줄이고, 성과는 늘리고! 업무 효율성 제고
① '강원형 범정부 오피스(문서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
② 일하는 방식 부서 평가 시 '메모보고 활용도' 반영
2 각자 따로 NO! 함께, 제대로! 일 잘하는 협업 공식
① '강원형 워케이션 시범 사업(W:ON office)' 운영
② 충실한 인계인수 문화 조성을 위한 '온나라 인계인수' 활성화 추진
③ 신규 공직자·전입자 적응 지원을 위한 '웰컴키트' 및 멘토링 추진
3 불합리한 관행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
①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캠페인 운영
② 희망보직제 활성화 및 청렴 마일리지 가점 신설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③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캠페인 추진'
4 일도, 삶도 존중받는 유연한 직장 문화 조성
① 주4.5일제 시범사업(쉼표 더하기(+0.5) 프로젝트) 운영
② 육아시간·유연근무제 활용 우수부서 '워라밸 1번지' 현판 수여
③ 육아 휴직자 및 복직자 대상 '도지사 격려 편지' 발송
5 소통은 자유롭고 신뢰는 든든하게! 소통과 신뢰를 잇는 조직문화
① 도정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한 전 직원 혁신 아이디어 수렴 및 도정 적용
② 점심시간 리버스멘토링 '런치앤런' 정례화(격월 운영)
③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 보호 창구 운영
④ 전 직원 대상 소통 교육 및 수평적인 소통 문화 활성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6년 조직문화 진단 시 '25년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지표별 평균(5.48점/7점) 이하 지표 **5% 이상 개선**

지표	2025년	2026년 개선 목표
불합리한 관행 해소	4.94점	5.18점
공직 만족	5.08점	5.33점
업무 효율성	5.34점	5.61점
혁신 지향성	5.39점	5.65점
심리적 안정감	5.45점	5.72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구성원들의 조직문화 개선 체감도 부족 • 유연근무제 활용 저조	• 구성원들의 조직문화 개선 체감도 증가 • 주4.5일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 '26년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10,400천 원

- 신규공직자·전입직원 웰컴키트 지급: 6,000천 원
- 도정혁신 추진단 및 조직문화 캠페인 운영: 4,400천 원

□ 추진체계

○ **(자치행정과)**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부서 통보, 기관 단위 조직문화 개선활동 추진(전 부서 공통 개선과제)

○ **(전 부서)** 부서별 특성에 맞는 개선과제 선정 및 개선활동 추진

□ 추진일정

주요내용	소관기관	일정
1.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 수립		
①-1. 추진계획 수립 및 안내	자치행정과	'26. 4. 6.까지
2. 추진단위별 개선 추진		
②-1. 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추진	자치행정과	연중
②-2. 부서별 개선과제 선정 및 계획서 제출	개별부서	'26. 4. 30.까지
②-3. 부서별 개선활동 추진	개별부서	'26. 5~10월
②-4. 도정혁신 추진단 운영 및 개선과제 추가 발굴	자치행정과	연중
②-5. 익명게시판 조직문화 관련 이슈 관리	자치행정과	연중
3. 우수사례 발굴		
③-1. 개선활동 추진실적 제출	개별부서	'26. 11월
③-2. 우수부서 선정	자치행정과	'26. 11월
③-3. 우수사례 행안부 응모	자치행정과	'26년 중
4. 조직문화 진단		
④-1.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실시	자치행정과	'26. 5월·10월
④-2. 결과 분석 및 통보	자치행정과	'26. 11월

□ 홍보계획

○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실시계획 공문 통보

○ 개선 활동 추진 시 내부 행정망 웹배너·홍보글 게시 등 활용 홍보

○ 도정혁신 추진단 논의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및 부서 참여 유도

9-4 시설물안전법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협조기관/부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담당자	이종범 주무관	연락처	033-249-3821

□ 추진배경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취합기관*은 실태점검(연 1회 이상)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함

*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결과 등을 승인하는 자(도지사·시장·군수)

○ 다만, 관리주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미흡, 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단순 실태점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 및 교육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정기 안내(도→시군, 관리주체)

- 점검 주기, 대상 시설물, 조치기한 등 구체적 기준 안내(매월 1회 이상)

*** 공문을 통한 반복 안내 실시(예산 편성 시기 필히 안내)**

○ 관리주체 시설물 담당자 인계·인수 및 교육 강화(취합기관)

- 인사이동 시 담당자 간 업무 인계·인수 철저 안내(분기별)
- 신규 담당자 대상 「시설물안전법」 교육 실시(분기별)

*** 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 협업**

○ 시설물 관리대장 현행화 실시(관리주체)

- 관리대장 작성 및 정비 상태 수시 점검
- 시설물 누락 여부 상시 확인 체계 구축

*** 신규·변경 시설물 등록 여부 지속 확인**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시설물 관리주체의 법령 이해도 및 책임의식 강화
-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률 제고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시설물안전법 의무 미이행 사례 지속 발생 ⇒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 초래**	•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률 제고 ⇒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

□ 추진체계

○ (도) 도↔시군 간 정기적입 업무 공유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관리주체(공공·민간) 대상 「시설물안전법」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26. 4월 :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안내(도→시군, 관리주체)

○ '26. 5월 : 관리주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26. 7월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철저 및 교육 실시 등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1 [대표과제] 블랙아이스 AI감지시스템 구축

주관부서	디지털산업과	협조기관/부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자	김영웅 주무관	연락처	033-249-2167

□ 추진배경

○ 강원(춘천)은 지형별 특성으로 인한 도로 위험 상황(안개, 블랙아이스 등)이 빈번하여, AI 기반 도로 위험 상황 조기탐지와 선제 대응 플랫폼 구축으로 교통안전 확보 필요

- 춘천시는 분지형태로 강과 호수로 인해 안개 및 블랙아이스 발생률이 높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 세부 추진사항

○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운영: 연 2회

- 2024. 9월, 11월, 12월 / 2025. 4월, 10월, 11월 / 2026. 2회 예정

○ 후속 대형·중장기 프로젝트 전략 수립: 2025. 8~12월

○ 도로위험 기상정보 수집 및 가공: 2024. 5월~

○ AI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 분석 및 디지털트윈 개발: 2024. 5월~

○ 웹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24. 5월~

○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지원계정) 최종 선정: 2025. 7.

성과지표	2024년	2025년	2026년(목표)
지역 디지털 혁신 일자리 창출	11명	11명	11명
지역 디지털 기획 역량 강화	1건	1건	1건
지역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	개발 1식	개발 1식, 실증 1건	검증 1건
지역 디지털 강소기업 성장	5.26%	8.58%	10%
지역 디지털 혁신체계 구축	3건	3건	2건
지역 디지털 혁신 만족도	-	84.9%	91.6점
도로위험 기상정보 판별 정확도	89.28%	92.8%	94%
기상 데이터 수집	300건	400건	500건
춘천시 3D 스캔 데이터	202,707장	15,056장	8,000장

○ 사업방향(3차년도): 도로위험상황 선제대응 시스템 실증 및 확산

* 프로젝트 기획과 데이터 수입(2024년-1단계), 프로젝트 개발 및 고도화(2025년-2단계)를 거쳐, 당해연도(3차년도)에는 최종 BM 개발 및 확산을 실시하고 중장기 사업 발굴

○ 주요내용



<도로위험 기상상황 선제대응 플랫폼 핵심 기술 구성도>

- **(정보생산)** 도로위험 기상정보 탐지 프로토타입 고도화 및 현장 실증
- **(시뮬레이션)** VMS 등 공공 시설물 데이터 실시간 디지털트윈 연동
- **(서비스 실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실증
- **(중장기 전략수립)** 3개년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중장기 사업 발굴
- **(성과확산)** 3개년 성과 확산 및 시민 체험 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구분	성과 지표	주요 내용 및 산출물	목표
공통 지표	지역 디지털 혁신 일자리 창출	ㅇ (내용)과제 직접참여를 통한 신규고용 ㅇ (산출물)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11명
	지역 디지털 기획 역량 강화	ㅇ (내용)혁신프로젝트 로드맵 도출 ㅇ (산출물)연구결과보고서 등	1건
	지역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	ㅇ (내용)지역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실증 ㅇ (산출물)개발 및 실증결과보고서 등	실증1건
	지역 디지털 혁신 만족도	ㅇ (내용)디지털 혁신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ㅇ (산출물)참여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91.6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안개·블랙아이스 등 기상 악화 시 사고 위험과 높은 사회적 비용 발생 • 기존의 예방시스템은 전문가 중심의 데이터 활용 및 단순 모니터링 위주의 관제	• AI 기반 실시간 위험 탐지 및 정보 제공으로 교통사고율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 시각화 플랫폼으로 시민이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의사결정 효율성 증대 도모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2026년 사업비: 9억 원

주요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일자리 창출(신규고용 지원)	222.5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월드텍, ㈜더픽트, ㈜이앤지테크
지역 디지털 기획 역량 강화	50.0	
지역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통합서비스 개발)	548.8	
지역 디지털 혁신체계 구축(거버넌스 운영)	4.2	
지역 현안 해결 달성도(리빙랩 운영)	7.5	
도로위험 기상정보 판별 정확도(SW 개발)	5.0	
기상 데이터 수집(데이터 관리)	12.0	
춘천시 3D 스캔데이터 수집(데이터 관리)	50.0	
합계	**900**	-

□ 추진체계

기관명	역할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방비 매칭, 도·시 정책 연계 사업화 지원	지자체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전반운영 및 관리, 사업 네트워킹 지원	주관
(주)월드텍	도로위험기상 탐지 솔루션 개발	참여1
(주)더픽트	AI기반 디지털트윈 기술 개발	참여2
(주)이앤지테크	웹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참여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개발 자문기관	자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술개발 협력기관(인증 및 성능평가)	협력

□ 추진일정

○ 도로위험 기상상황 선제대응 플랫폼 구축: 2026. 1~12월

○ 서비스 플랫폼 시범 운영: 2026. 6~12월

○ VMS 및 문자알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26. 6~12월

○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운영(연 2회): 2026. 3~12월

○ 프로젝트 확산: 2026. 7~12월

○ 성과 기반 중·장기 디지털 혁신 후속 프로젝트 발굴: 2026. 6~11월

□ 홍보계획

○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전시회(2026. 10. 19. ~ 10. 23.) 참가

- 2024~2026년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추진성과(통합 플랫폼 기술, 시연 등)를 홍보함으로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도모

○ 2026년 하반기 중, 시민참여형 리빙랩(Living lab) 추진

- 실제 사용자인 시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본 사업 성과홍보와 더불어,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결과 도출

10-2 전국 최초「AI 당직원」구축 운영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담당자	정순주 주무관	연락처	033-249-3973

□ 추진배경

○ '23. 2월, 당직업무 개편 → **재난상황실이 야간 민원 응대까지 병행 중임**

○ 야간·휴일에는 악성 민원, 반복 문의, 주취자 발언 등 감정 유발 민원이 빈번
→ **행정 효율 저하 및 직원의 정신적 부담 가중**

○ 최근 2년간 당직 통화 이력 7,538건 중 93.4%가 5분 이내 종료되는 단순·반복 민원이 대다수 → **AI 자동응대 전환 필요성 확인**

【 통화 기록 분석 결과 】

◆ 통화 구간별 통화건수('23.2.~'25.6월) : 총 7,538건
◆ 민원 유형 : **악성 민원, 반복 문의, 주취자에 의한 감정 유발 응대 등**

구 분	<30s	30s-1m	1m-5m	5m-10m	10m-30m	30m이상
통화건수	3,316	1,320	2,403	322	160	17

□ 세부 추진사항

○ **생성형 AI 기반 「AI 당직원」 구축 및 운영**
- 도 대표번호 연계 야간·휴일 민원응대 AI 상담 서비스 구축
- 음성 기반 민원 응대(STT·TTS) 시스템 운영

○ **민원 데이터 기반 AI 학습체계 구축**
- 콜센터 상담데이터 가명처리 후 AI 학습 데이터셋 활용
- 반복 민원 유형 분석 및 응답 정확도 개선

○ **민원 유형 분류 및 대응체계 고도화**
- 단순 문의·안내형 민원 자동 응답 처리
- 담당부서 안내 및 민원 처리 절차 안내 기능 제공

○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 야간 당직 근무자의 단순 반복업무 감소
- 민원 대응 공백 최소화

○ **대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 365일 24시간 민원 안내 가능 체계 구축
- 도민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 이용 가능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AI 당직원 민원 응대율 60% 이상 달성
- 반복·단순 민원 자동 처리율 향상
- 야간 민원 대응시간 단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공무원 피로도 해소	• 전국 최초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의 선도 모델
• 야간 당직 공무원의 반복 민원 대응 부담	• 공무원 피로도 해소
• 민원 응대 시간 제약으로 서비스 접근성 제한	• 민원 서비스 접근성 강화
• 단순 민원 대응에 행정력 소요	• 행정 효율성 향상
• AI 행정서비스 적용 사례 부족	• 디지털 행정 혁신 확산 기반 마련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AI 기반 민원응대 서비스 운영 관련 내부 운영지침 마련
- AI 민원응대 서비스 운영 기준 정립
- 개인정보 보호 및 가명정보 처리 절차 반영

○ AI 행정서비스 운영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 AI 응대 민원 처리 프로세스 정립
- 민원 이관 및 대응 기준 마련

□ '26년 소요예산

○ 사업예산 : 14,700천 원 * 매월 110만 원
- AI 민원응대 서비스 이용료

- AI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지원

→ 야간·휴일 민원 공백 해소를 위한 최소 비용 구조의 AI 서비스 도입

□ 추진체계

기 관	역 할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 총괄 및 운영관리
수행기관	◆ AI 민원응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콜센터	◆ 민원 데이터 제공 및 운영 협력
관련 부서	◆ 민원 응대 기준 및 업무 협조

□ 추진일정

○ 야간 민원응대 서비스「AI당직원」도입 용역 : ‘25. 8 ~ ‘26. 9월중

○ 콜센터 스크립트(Q&A) 기반 1차 응대 학습 : ‘26.1~2월

○ 콜센터 음성데이터(2차 학습) 가명정보처리 지원 추진 : ‘26.3~5월

1단계		TEXT 전환		가명치리 (5단계)		품질건수 (가용DATA)		AI학습 활용
도 (자치행정과)	⇨	가명정보 지원센터	⇨	가명정보 지원센터	⇨	가명정보 지원센터	⇨	수행기관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AI 행정서비스 도입 성과 홍보

○ AI 기반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유

○ 타 지자체 확산을 위한 정책사례 소개

→ **“AI가 일하고, 공무원은 생각하는 행정” 실현 사례 홍보**

10-3 민간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9개 시군, KT
담당자	류동훈 주무관	연락처	033-249-3796

□ 추진배경

○ **민간 빅데이터 분석솔루션 도입·운영**(2020년 ~ 현재)

- 모바일 통신사, 카드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 및 컨설팅
- 도내 생활인구, 관광·축제데이터 등의 객관·과학적 분석자료 제공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정책방향 결정 등에 활용)

○ **도 전역을 아우르는 생활인구 통계 산출 필요성 대두**

- 행안부 생활인구 통계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으로 산출

  * 인구감소지역(12시군):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 관심지역(4시군): 강릉,동해,속초,인제 ※ 춘천, 원주 통계 없음

- 행안부 통계 산출기간 과다소요(6개월)에 따른 최근 통계 파악 불가
- 통계 부재로 인한 道 생활도민 확대정책 등 효과 분석에 한계

□ 세부 추진사항

○ **2026년 민간데이터 공동활용 사업 계약 체결**: ’26. 4월

○ **생활인구 통계 관련 추진사항**

- 도·데이터지청·KT 간 생활인구 통계 관련 협의: ’26. 2~3월
- 생활인구·체류인구 관련 데이터 신뢰도 개선: ‘26. 5월까지

  * 체류인구 통계 산출 범위 재설정(시군 단위 → 도 단위)

⇨ **민간데이터 공동활용 사업 일환으로 데이터 제공(→지역소멸대응정책관)**

○ **행정동 단위 생활인구·소비데이터 연계 분석**: 반기별

○ **실속형 축제 성과 분석(방문인구·소비데이터 연계)**: 분기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과학적 道 생활인구 통계 산출
- 생활인구·소비 연계 분석 및 축제 성과 분석 정례화
- 도 생활인구 및 관광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수립에 활용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KT 체류인구 통계(월별) 산출 가능하나, 시군별 중복 산정 등 데이터 신뢰도 저하 • 도내 신뢰도 있는 생활인구 통계 부재로 생활인구 관련 정책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어려움 존재 • 생활인구 유입 및 축제 방문인구 대비 소비효과 분석에 한계	• KT 체류인구에 대한 시군별 중복 산정 문제 해결 → 데이터 신뢰도 확보 • 신뢰도 있는 도내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용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소비데이터와 연계한 생활인구·축제 성과 분석으로 관련정책에 활용 가능

□ '26년 소요예산

○ 민간데이터 공동활용 사업: 375백만 원(도 및 9개 시군 각 37.5백만 원)

□ 추진체계

○ 지능정보정책과(주관기관)

- 민간데이터 공동활용 사업 운영·관리, 관계부서·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율

○ 시군(동해,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인제)

- 민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헌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 지역소멸대응정책관

- 생활인구 데이터 정의 및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 활용, 결과 환류

○ ㈜KT

- 민간데이터 공동활용 사업 수행, 데이터 신뢰도 개선 등 협조

10-4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행정안전부
담당자	서영욱 주무관	연락처	033-249-2173

□ 추진배경

○ 생성형 AI의 등장이 전 세계 'AI 대전환 시대'를 촉발시켰으며,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AI 대전환'에 주력하여 기업 및 공공 등 전 부문의 AI 전환 추진을 선언 ※ '25.8.22.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

○ 이에 따라,「강원 광역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군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 등을 내부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학습시켜 도·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원형 AI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함

※ AI 사업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군 공동 구축

□ 세부 추진사항

○ **AI 학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GPU 서버, 스토리지 서버, 초고속 네트워크 스위치 등 도입

○ **도·시군 공동 활용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

- 개발 대상 AI 행정서비스 선정 (수요조사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
- 선정된 AI 서비스 별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 (수집·정제 등 전처리)
- 선정된 AI 서비스 별 특화 (s)LLM 개발 및 최적화 (튜닝 및 RAG 구축)

○ **AI 행정서비스 단계적 개시**

- 다단계 시범 운영을 통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 적극 발굴·처리
- 지속 오류 개선, 보안 등 안전장치 마련, GPU 처리 효율성 지속 제고

○ **AI 행정서비스 운영 범위 확대**

- 도·시군 공무원 서비스 우선 개발 후 대도민 서비스로 범위 확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도·시군 공무원 모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행정서비스 개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유사·반복업무의 지속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 법령 등 수동 검색에 장시간 소요 • 각종 문서 직접 작성에 장시간 소요 • 대규모 인사발령시 인수·인계 난항 발생 • 외부 AI 사용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	• 유사·반복업무의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법령 등 RAG 구축으로 검색 시간 단축 • AI 기반 초안 생성으로 작성 시간 단축 • AI 기반 영구적 1:1 인수·인계 체계 확보 • 자체 시스템 활용으로 보안성 확보

□ '26년 소요예산

○ GPU 서버 도입 등 생성형 AI 운영 인프라 구축 6억

○ 도·시군 공동활용 AI 행정서비스 개발 및 운영 15억

□ 추진일정

○ 행안부「AI 공통기반」,「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연계 검토('26. 4~5월)

○ 시스템 구축 규모 및 과업 범위 등 최종 산정 후 조달계약 의뢰('26.6월)

○ 계약 체결 및 생성형 AI 도입 사업 추진('26.7월~)

□ 홍보계획

○ 사용자 친화 매뉴얼 제작·배포 및 도·시군 방문 교육 지속 실시 등

10-5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주관부서	디지털산업과	협조기관/부서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담당자	곽지우 주무관	연락처	033-249-3049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은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

- 하지만, 중소기업의 AI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지역간 격차도 큰 상황

-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활용·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격차 완화 필요

○ 우리 도는 의료기기 산업 수출 전국 2위, 강원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바이오·헬스케어분야 핵심역량 보유

- 반면, 도내 '산업용 공공 GPU센터' 부재로 기업의 AI 도입 부진, 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등의 지역문제 존재

○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특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고도화를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적

-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AI 솔루션 도입·확산, AI 활용 창업지원 및 AI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

※ 맞춤형 기업지원 간담회 시, 공공 GPU인프라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 세부 추진사항

○ 중기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사업 선정, 국비 140억 원 확보 : '26. 4. 1.

○ **(AI 인프라 구축)** 공공 GPU센터 및 운영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AI 모델 개발·학습 등 환경지원

○ **(AI 솔루션 보급 및 개발·실증)** AI전환을 위한 컨설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매칭·보급, 특화산업(바이오·헬스케어) 중심 공정·설비·데이터 문제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AI 활용 창업지원)** 1인 창업기업 실무지원 플랫폼(Agentic AI) 및 AX 아이디어 팩토리 공간 구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AI 전문인력 양성)** 청년 AI 전문가 양성 및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현장연계 AI 전환 프로젝트 운영

○ **(지역 상생협력)** 지역 AI 사업단 구축·운영 및 협력체계를 활용한 후속 연계지원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도내 최초 「산업용 공공 GPU 센터」 구축 1식

구 분		성과 목표		
		2026년	2027년	계
AI 솔루션 도입·확산	AX 컨설팅	19개사	38개사	57개사
	AI 솔루션 보급	40개사	40개사	80개사
	AI 실증 수행	4개사	4개사	8개사
	AI 실증 확산	1건	3건	4건
AI 활용 창업지원	AI활용 창업지원	10개사	10개사	20개사
	투자연계(IR)	3개사	3개사	6개사
	AI 창업공간 구축	20석	-	20석
	AI 창업개발실 활용	360명	360명	720명
AI 인재양성	청년/재직자 교육	50명	80명	130명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도내 중소기업은 AI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GPU 서버 비용과 인프라 부재로 AI 전환 어려움 • 수도권 대비 도내 중소기업 AI 도입 부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 •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및 AI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력난 심화	• 도내 최초 산업용 공공 GPU센터 구축으로 지역 기업의 저비용·안정적 GPU 자원 활용기반 확보 • AI 인프라 구축, 솔루션 도입·확산, 창업지원, 인재양성 등 종합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 AI 전환 가속화 • AI 전환 기반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 • AI 전문교육 및 현장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및 지역 정착 유도 •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확산 및 지속가능한 지역 AI 생태계조성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2026년 사업비 : 118.3억 원(국비 70, 도비 10.5, 시비 24.5, 민간 13.3)

※ 총사업비 : 236.6억 원(국비 140, 도비 21, 시비 49, 민간 26.6)

수행기관	주요내용	'26년 사업비(억 원)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AI 인프라 구축 (GPU센터 구축) 및 사업주관	58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	운영 플랫폼 및 AI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17
(재)강원테크노파크	AI 솔루션 보급 및 실증	36.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I 도입 컨설팅	2.5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AI 창업공간 구축, AI 활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2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AI 전문 인재양성	1.75
합계		**118.3**

□ 추진체계

○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총괄관리, 도·시 정책 연계 사업화 지원

○ (춘천시·원주시) 사업비 지원 및 지역 실증 추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사업 주관 및 AI 인프라(GPU 팜) 구축

○ (강원테크노파크) AI 솔루션 도입·확산 및 바이오헬스 분야 실증 수행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AI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 GPU 운영플랫폼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업 대상 AI 도입 컨설팅 수행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중소기업 AI 전환 바우처,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추진일정

○ AI 인프라(GPU 센터) 구축

▸ <GPU 팜 구축>

- GPU 팜 구축 장비도입 계획 수립 : '26. 4월
- 서버실 기반 설비 및 시설공사, 장비 구매 : '26. 9 ~ 11월

▸ <플랫폼 구축>

- GPU 팜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26. 4 ~ 5월권
- 공공 GPU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및 유휴자원 연계 협의 : '26. 6월
- 공공 GPU 클러스터 구축('26. 8월) 및 GPU 팜 운영시스템 구축('26. 12월)

○ AI 솔루션 보급·확산

▸ <AI 도입 컨설팅>

- 의료·바이오 기업 대상 홍보 및 수요조사 : '26. 4 ~ 5월
- AI 도입 컨설팅 및 공급기업 매칭 : '26. 5 ~ 9월
- AI 적용 및 추진 상황 점검 : '26. 10 ~ 11월

▸ <AI 솔루션 보급, 실증>

- AI 솔루션 공급·수요·실증기업 공모 : '26. 4월
- AI 솔루션 도입 및 실증 수행 : '26. 6~11월

○ AI 전문 인재양성

- AI 교육환경 및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 '26. 4 ~ 5월
- 교육 수요조사 및 커리큘럼 확정 : '26. 5 ~ 6월
- 재직자 및 청년 AI 교육 운영 : '26. 9 ~ 12월

○ AI 활용 창업지원

- AI 창업 공간(AX아이디어 팩토리) 구축 : '26. 4 ~ 6월
- AI 에이전트 개발(1기) 모집 및 컨설팅, 결과보고 : '26. 7 ~ 12월

○ 지역 상생협력

- 지역 AI 사업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발족 : '26. 5월
- 지역 AI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 : '26. 10월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등 사업추진 언론 홍보

○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안내 및 수요기업 모집 공고 등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1-1 직원 AI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전 부서
담당자	임주은 주무관	연락처	033-249-2128

□ 추진배경

○ 정부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 및 공직자 AI 교육 강화 정책 기조

- AX 가속화에 따른 공직자 AI 이해 및 실무 활용 역량 요구 증대
- 전 공무원 대상 AI 교육 의무화 및 실무형 AI 인재 양성 정책 추진

○ 체계적 교육 운영 및 확산 체계 미흡으로 AI 활용 역량 편차 발생

- 개인별 자율 학습 중심으로 AI 활용 수준 격차 심화
- AI 활용 경험 및 업무 적용 사례 부족으로 조직 전반 확산 한계

○ 단계별·체계적 교육을 통한 AI 활용 역량 내재화 필요

- 전 직원 대상 AI 기초·활용 교육을 통한 기본 역량 상향 평준화
- AX 워크숍·현장체험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업무 적용 및 혁신 확산

□ 세부 추진사항

○ **전 직원 대상 AI 기초 및 활용 교육 운영**

- 온라인·집합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생성형 AI 이해·보고서 작성·반복업무 자동화 등 실습 중심 교육 운영

○ **현장 중심 AI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AX 워크숍을 통한 부서별 업무혁신 과제 발굴 및 적용 방안 도출
- AI 선도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최신 기술 동향 및 활용 사례 습득

○ **단계별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전 직원 AI 기초역량 확보('26년)
- 직무·직급별 맞춤형 심화교육 확대('27년)
- AI 핵심인재 양성 및 조직 내 확산체계 구축('28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생성형 AI 기초 및 활용 교육 운영: 온라인 6회, 집합 2회
- AX 워크숍 및 현장 체험 운영: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AI 교육 단편적 운영 • AI 활용 역량 개인별 편차 존재 • 행정업무에 AI 활용 미흡 • AI 기반 혁신 사례 부족	• 단계별·체계적 AI 교육체계 구축 • 전 직원 AI 기본 역량 확보 • 보고서 작성 등 실무 활용 확대 • 부서별 AI 활용 업무혁신 과제 발굴·확산

□ '26년 소요예산

○ 직원 AI 역량 강화 교육 추진: 7,300천 원

□ 추진일정

○ 생성형 AI 기초 및 활용 교육 운영: '26. 3월 ~ 12월

- 온라인 교육(6회):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 집합교육(2회): 4월, 10월

○ AX 워크숍(1회): '26년 상반기

○ AI 선도기업 현장 체험(1회): '26년 하반기

□ 홍보계획

○ 공문 및 행정포털 공지사항 안내, 팝업 등을 통한 교육 참여 독려

11-2 도민 AI 역량 강화

주관부서	디지털산업과	협조기관/부서	춘천시 / 첨단산업과 원주시 / 첨단산업과 강릉시 / 정보통신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포항 TP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라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담당자	이승권, 변양우, 최용회 주무관	연락처	033-249-3084, 2606, 3117

□ 추진배경

○ AI 활용 역량 취업·직무 전환·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부상

- 도민 대상 기초교육과 대학 심화교육 연계 체계적 인재양성 필요
- 공공 AI 리터러시 확산과 산업 연계형 전문인재 양성 동시 추진 필요

○ AI·SW 교육사업 분산 운영으로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필요

- 초·중·고, 대학, 재직자·구직자 교육사업 개별 운영 교육정보 접근 한계

○ 대학 교육과 산업현장 수요 간 연계 부족으로 실무형 인재 공급 한계

- 대학 중심 교육과 기업 수요 간 연계 미흡 현장형 AI인재 양성 제약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정주형 전문인재 양성체계 보완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도민 대상 AI기초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초·중·고 학생, 재직자 대상 AI기초, 데이터활용, 신기술 체험교육 운영, 디지털 소외지역가지 교육 접근성 확대
- SW미래채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가상융합혁신센터 등 기존 사업 연계 대상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

○ 대학 기반 전문·심화 인재 양성 추진

- SW중심대학, AI부트캠프,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대상 기초 심화·실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
- 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형 교육, 현장실습, 전문기업 현장 교육을 확대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성과 확산 프로그램 운영

-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커톤,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성과의 현장 활용과 일자리 연계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초·중·고·대학생 및 재직·구직자 대상 AI 교육: 10,000명 이상
-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해커톤 각 1회 개최
-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전문강사 및 일자리 연계: 70명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교육사업 분산 추진되어 도민의 교육정보 파악과 참여 접근 어려움 • 대학 교육과 산업현장 간 연계부족으로 실무형 AI인재양성 한계	•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연계된 통합 AI인재양성 체계구축 • 시군·대학·진흥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공급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별도 자치법규 개정보다 기존 교육·인재양성 사업지침과 연계 추진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1,610억 원

① 도민 대상 AI 기초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총사업비) 365억 원 ※'26년 51억 원
- (주요사업) SW미래채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 (사업내용) 초·중·고 및 재직·구직자 대상 AI 기초 및 신기술 교육

② 대학 기반 전문·심화 인재 양성

- (총사업비) 1,245억 원 ※'26년 133억 원
- (주요사업) SW 중심대학, AI 부트캠프,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 (사업내용) 대학생 대상 AI 기본 교육부터 기업수요 연계 심화 교육

□ 추진체계

○ (주관) 도 디지털산업과

- 사업 추진 총괄 및 연간 수행계획 수립
- 시군·SW진흥기관·대학·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AI 교육사업 간 연계 조정 및 성과관리

○ 협조기관

- (춘천시·원주시·강릉시) 사업비 지원, 추진 상황 점검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교육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관리
-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교육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관리
- (포항TP) 예산 분배 및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관리
- (강원대·한림대·한라대·연세대) AI 교육생 모집 및 운영

□ 추진일정

○ 미래채움센터 운영 및 AI·SW체험교육, 전문강사 양성: '26.3. ~ 12월

○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재직자·구직자 실무교육: '26.3. ~ 12월

○ 대학 연계 AI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기업 현장교육: '26.3. ~ 12월

○ AI·디지털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해커톤 개최: '26. 7월

□ 홍보계획

○ 도 및 시군 누리집, 대학 홈페이지, SNS를 활용 통합 모집홍보 추진

11-3 엔비디아(NIDIA) 교육센터 연계 의료 AI 전문인력 양성

주관부서	디지털산업과	협조기관/부서	원주시 / 첨단산업과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아이스테이징 아시아
담당자	이승권 주무관	연락처	033-249-3084

□ 추진배경

○ 디지털헬스케어 지역 전략산업 AI 수요 확대로 전문인력 공급 부족

- 산업현장에 필요한 의료 AI 전문인력 수요 지속 증가

○ 의료 AI 융합형 교육과정 부족으로 산업현장 수요 대응 한계

- 의료 데이터, AI모델활용, 디지털헬스케어 융합형 교육과정 부족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전문형 교육체계 부재

○ 지역산업 특화형 의료 AI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

- 엔비디아(NVIDIA) 교육센터 연계 전문교육 기반 마련 필요
- 의료 AI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디지털헬스케어 AI융합혁신 교육센터 구축

- 교육센터 구축 완료('26. 4.~8.) 및 개소식('26. 9.) 본격 운영 개시
- GPU 실습환경, 교육장, 실습실, 학습관리체계 등 전문 교육인프라 조성

○ 의료 AI 전문교육과정 운영

- 의료데이터분석, AI개발환경 등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엔비디아(NVIDIA) 연계 프로그램 추진

- 글로벌 수준 AI교육 콘텐츠로 산업현장 활용성 높은 전문교육 실시

○ 산업 연계형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 기업 수요 맞춘 문제 해결형 교육 및 지역 정착형 전문인재 양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엔비디아 교육센터 연계 의료 AI전문인력: 160명 양성
- 엔비디아 교육센터 구축: '26. 4. ~ 8.
- 엔비디아 교육센터 개소 및 교육 운영: '26. 9. ~ 12.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지역산업 수용에 대응하는 의료 AI특화 전문교육 과정 부재 • 의료 AI 전문인력 기업 인력 수급 어려움	• 글로벌 교육역량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의료 AI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지역의료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인력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별도 자치법규 개정보다 참여기관 협약 등을 통해 추진

○ 교육센터 운영 및 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검토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350억 원 ※'26년 50억 원

-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5년)
- (사업내용) 교육센터 구축, 프로그램 운영, 실습환경 조성 등

□ 추진체계

○ (주관) 도 디지털산업과

- 사업 추진 총괄 및 연간 수행계획 수립
- 시군·SW진흥기관·대학·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AI 교육사업 간 연계 조정 및 성과관리

○ 협조기관

- (원주시) 사업비 지원, 추진 상황 점검

-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사업 총괄 및 인프라 구축
-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의료 데이터 활용 협력체계 구축
- (아이스테이징 아시아) AI 교육과정 운영 실무(커리큘럼, 강사관리)
- (연세대(미래), 한라대) AI 부트캠프(학점 연계)

□ 추진일정

○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 교육센터 구축: '26. 4. ~ 8월

○ 교육센터 개소식 및 운영 개시: '26. 9월

○ 디지털헬스케어 AI 전문인력 교육 운영: '26. 9. ~ 12월

○ 성과평가 및 '27년도 확대 계획 수립: '26. 12월

□ 홍보계획

○ 원주권 의료·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대학,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추진

○ 우수 교육생·기업 협력 사례를 발굴 지역 전략산업 대표 사례 홍보

Ⅲ.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부혁신) 과제

1-1 소상공인 안심경영 「AI 근로계약서」 서비스 구축

주관부서	지능정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일자리청년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강원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박명철 주무관	연락처	033-249-3726

□ 추진배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법적 리스크 상존

- 도내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40.3% 수준에 그쳐 근로계약 체결 관리가 미흡한 실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항목 누락 시 벌금·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부담 상시 노출

○ 복잡한 계약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계약 체결 어려움

- 근로형태별 서식 구분, 법정 필수항목 반영 등 작성 절차가 복잡하여 소상공인의 접근성 저하
- 계약 관련 정보 및 법률 이해 부족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및 적정 작성에 어려움 발생

○ 기존 방식의 비효율성과 디지털 전환 미흡

- 수기 작성 및 개별 자료 관리 중심으로 계약 체결·보관의 비효율 발생
- 전자서명, 자동작성 등 디지털 기반 계약 환경 미흡으로 행정 부담 지속

□ 세부 추진사항

○ AI 기반 근로계약서 자동 작성 지원

- 근로형태에 따른 맞춤형 표준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
-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항목 자동 반영으로 법적 리스크 예방

○ AI 활용 계약서 검토 및 독소조항 탐지

- 계약서 내 부당 해지, 과도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 조항 자동 분석
- 법령 기준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수정 권고로 분쟁 예방

○ 전자서명 및 디지털 계약 체결 환경 구축

- 사업주·근로자 간 비대면 전자서명 기능 지원으로 계약 체결 간소화
- 계약서 PDF, 한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관리 기능 제공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및 행정절차 간소화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원 및 기본정보 자동 연계
- 반복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영세 사업자(5인 미만 + 연매출 1억원 미만) 2천 명('27년~) 서비스 제공
- 업종별·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검증, 체결·교부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필수항목 누락 등으로 법적 리스크 상존 • 계약 절차 복잡 및 정보 부족으로 소상공인 계약 체결 어려움 • 수기 작성·개별 관리 중심으로 업무 비효율 및 행정 부담 발생	• AI 기반 자동 작성으로 근로계약 체결률 향상 및 법적 리스크 완화 • 계약 절차 간소화 및 맞춤형 안내로 계약 체결 편의성 제고 • 전자서명 및 디지털 관리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행정 부담 경감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19.5억 원(국비 12.67, 도비 6.83)

□ 추진체계

○ 주관기관(지능정보정책과)

- 사업 및 서비스 총괄 기획·운영, 서비스 운영·관리 및 고도화
-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축

○ 도 협업부서(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일자리청년과 등)

- 노동 관련 법·제도 자문 및 노동분쟁 예방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 연계 및 지원

○ 시군 및 공공기관(강원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 현장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소상공인 대상 교육·컨설팅 등 활용 지원

○ 유관기관(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 소상공인 요구사항 및 의견수렴, 서비스 안내 및 홍보 지원

□ 추진일정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구축 : '26. 5 ~ 12월

□ 홍보계획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상자 중심 홍보 강화

-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등과 협력, 서비스 안내 및 참여 유도
- 상권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중심으로 현장 홍보 추진

○ 서비스 체험 중심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유도

-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AI 근로계약서 시연 및 실습 기회 제공
- 실제 활용 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서비스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1-2 순살 NO! 튼튼 안심 아파트 OK! 골조단계 품질점검 도입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자	나상복 주무관	연락처	033-249-3467

□ 추진배경

○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고,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단 구성·운영

- 「강원도 주택 조례」 개정('21. 1월) 및 품질점검 확대 운영('25년~)

※ (점검 대상) 기존 15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으로 확대 운영 *주상복합 포함

○ 누수 등 중대하자 예방을 위해서 골조공사 중 품질점검 필요

- 현행 사용검사 전 단계 품질점검은 시공이 완료되어 보완이 제한적

□ 세부 추진사항

○ (**현실태**) 자잿값 등 물가 상승 영향으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 시공 및 인력난 심화에 따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다수

- 품질점검 결과, 하자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한 실정임

- ('25.7월) 도내 아파트(ooo)**(228세대)** 공동주택 품질점검 간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 다수** 발생에 따라 시군의 점검 연기 요청으로 인한 점검일정 지연 등 애로사항 발생
- ('24.4월) 도내아파트(ooo)**(206세대)** 공동주택 사용승인 이후, **천장 및 지하주차장 누수, 벽면 균열 등 다수의 하자**로 입주민들에게 피해 발생

○ (**개선안**) **구조적 안전 및 중대하자 예방을 결정**짓는 골조단계 점검으로 품질점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대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주요문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품질 저하	전문인력 및 제도적 관리 공백
위험요소	▸ 구조적 결함의 은폐, 책임 회피 ▸ 하자에 대한 물량 중심 대응 ▸ 금융 비용(이자) 압박으로 타설강행	▸ 무분별한 공기단축, 전문성 결여 ▸ 하자보수 보증금 부족 ▸ 자금난 위험으로 공사중단 가능성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중대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품질점검 강화
⇨ (골조단계) 품질점검단 표본점검 + (마감단계)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① (골조단계) 1차 시군 주관 감리자 점검 ⇨ 2차 도 품질점검단 3개소 표본점검
② (마감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10일 내 도 품질점검단 주관 점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중대하자 예방 및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촘촘한 품질점검 추진 -

중대하자 예방		공동주택 품질향상
골조공사 중 품질점검 (3시군, 3단지)	+	입주자 사전방문 후 품질점검 (5시군, 16단지)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사후 보수 위주의 하자 관리로 인한 주거 만족도 저하 및 분쟁 발생 • 골조 공사 단계의 점검 부재로 중대하자 발견 지연 및 재시공 비용 증가 • 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건설사-입주자 간 불신 및 안전 불안감 존재	•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 분위기 조성 • 골조공사 중 품질점검을 통한 중대하자 예방 및 공사비 절감 • 안전한 공동주택 시공 환경 조성으로 도민 신뢰 향상 기여

□ '26년 소요예산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19.5억 원(국비 12.67, 도비 6.83)

□ 홍보계획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상자 중심 홍보 강화
- 시군, 시공업체 등과 협력, 서비스 안내 및 참여 유도
- 도민 및 입주예정자 중심으로 현장 홍보 추진

○ 역량 강화 및 집중 홍보
- 시군 관계자 교육 현장 스케치 보도자료 배포. 점검 위원(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조

Ⅳ. 정부혁신 확산 방안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직장 내 혁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정부혁신 확산 및 전 직원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강원혁신 포럼'** 추진(격월)
-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 강원자치도 혁신학습동아리, 디지털전환 학습동아리, 기후위기·탄소중립 동아리
- 외청, 사업소 등 출장자의 업무연속성 및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시간, 공간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 도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도정혁신 추진단!**' 활동 강화
- 격월 1개 과제 선정·토론, 개선방안 모색 등

○ 정부혁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성과 부서(6개) 포상 및 포상금, BSC조직성과평가 점수 반영(3점)

○ 조직문화 개선 등 혁신 필요성 공감을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 소통·존중 문화, 일과 삶의 조화 등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 혁신,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달인' 운영
- '**지휘부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개최로 지휘부와 직원 간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있는 직장문화 조성

□ 성과 홍보 방안

○ 지휘부의 혁신에 대한 철학과 도정 운영 등에 대한 언론기고

○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강원특별자치도 전시관 운영'**
- 도정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 및 소통의 장 마련

○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실시
- 각종 도정 혁신 우수사례 및 현안 발생 시 언론보도(수시)
- 카드뉴스, 동영상, SNS 활용 홍보 추진